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26-10

정책보고서


2011-49-1

#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 삼 식  
이 지 혜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리말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 위기,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체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의 정책 목표는 국민이 갈등 없이 출산·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고령사회 분야의 정책 목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건강·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것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아울러 2010년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제1차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아울러 실시하였다. 성과평가는 시행계획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실적을 투명화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향후 계획의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오영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목적 .....	17
제2절 평가 대상.....	18
제3절 평가 방법.....	18
제4절 평가 절차.....	21
제5절 평가결과 활용.....	22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23
제1절 저출산 분야.....	25
1.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	25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	5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73
제2절 고령사회 분야.....	92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	9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106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12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126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135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	13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	164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181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95
1. 전략적 홍보·교육 .....	195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96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97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	199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	201
1. 저출산 분야 .....	201
2. 고령사회 분야 .....	216
3. 성장동력 분야 .....	228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	242
1. 전체 분야 .....	242
2. 저출산분야 .....	242
3. 고령사회분야 .....	243
4. 성장동력분야 .....	244
제4장 종합평가 .....	247
제1절 2010년도 추진실적 종합평가 .....	249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 .....	249
2. 2010년도 저출산분야 종합평가 .....	250
3.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종합평가 .....	255
4.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종합평가 .....	259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	264
1. 저출산분야 .....	264
2. 고령사회분야 .....	269
3. 성장동력분야 .....	273
제5장 결론 .....	277
참고문헌 .....	285
부록 .....	287

## 표 목차

〈표 1-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	18
〈표 1- 2〉 영역별 2차평가 성과지표 .....	20
〈표 2- 1〉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추진실적 .....	28
〈표 2-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추진실적 .....	28
〈표 2- 3〉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추진 실적 .....	32
〈표 2- 4〉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예산 .....	33
〈표 2- 5〉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실적 .....	34
〈표 2- 6〉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실적 .....	35
〈표 2- 7〉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 .....	36
〈표 2- 8〉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실적 .....	37
〈표 2- 9〉 주거안정 지원 추진실적 .....	39
〈표 2- 10〉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추진실적 .....	40
〈표 2- 11〉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진실적 .....	41
〈표 2- 12〉 육아지원시설 확충 예산집행 .....	41
〈표 2- 13〉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추진실적 .....	42
〈표 2- 14〉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	44
〈표 2- 15〉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예산집행실적 .....	44
〈표 2- 16〉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추진실적 .....	46
〈표 2- 17〉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추진실적 .....	51
〈표 2- 18〉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예산 .....	52
〈표 2- 19〉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	53
〈표 2- 20〉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	54
〈표 2- 21〉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실적 .....	56

〈표 2- 2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추진 실적 .....	58
〈표 2- 23〉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예산집행실적 .....	58
〈표 2- 24〉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추진실적 .....	59
〈표 2- 25〉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실적 .....	61
〈표 2- 26〉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산 .....	61
〈표 2- 27〉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실적 .....	62
〈표 2- 28〉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추진실적 .....	64
〈표 2- 29〉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예산집행실적 .....	64
〈표 2- 30〉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추진실적 .....	65
〈표 2- 31〉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추진실적 .....	66
〈표 2- 32〉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추진실적 .....	67
〈표 2- 33〉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추진실적 .....	69
〈표 2- 34〉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예산집행실적 .....	69
〈표 2- 35〉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	70
〈표 2- 36〉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71
〈표 2- 37〉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72
〈표 2- 38〉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추진 실적 .....	76
〈표 2- 39〉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예산집행실적 .....	76
〈표 2- 40〉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 실적 .....	79
〈표 2- 41〉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예산 .....	79
〈표 2- 42〉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추진 실적 .....	80
〈표 2- 43〉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추진 실적 .....	83
〈표 2- 44〉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예산	83
〈표 2- 45〉아동의 발달 지원 추진 실적 .....	84



## Contents

〈표 2- 46〉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실적 .....	86
〈표 2- 47〉 국내입양 활성화 예산집행실적 .....	86
〈표 2- 48〉 유해환경 차단 강화 추진 실적 .....	87
〈표 2- 49〉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추진 실적 .....	88
〈표 2- 50〉 드림스타트 활성화 추진 실적 .....	89
〈표 2- 51〉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추진 실적 .....	90
〈표 2- 52〉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90
〈표 2- 53〉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91
〈표 2- 54〉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실적 .....	95
〈표 2- 5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97
〈표 2- 56〉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추진실적 .....	98
〈표 2- 57〉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추진 실적 .....	100
〈표 2- 58〉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추진 실적 .....	101
〈표 2- 59〉 퇴직연금제도 확대 추진 실적 .....	103
〈표 2- 60〉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실적 .....	104
〈표 2- 61〉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	104
〈표 2- 62〉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	105
〈표 2- 6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추진 실적 .....	107
〈표 2- 64〉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추진 실적 .....	109
〈표 2- 65〉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예산 .....	109
〈표 2- 66〉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 실적 .....	111
〈표 2- 6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추진 실적 .....	114
〈표 2- 68〉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추진 실적 .....	115
〈표 2- 69〉 독거노인 보호 강화 추진 실적 .....	116
〈표 2- 70〉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추진 실적 .....	118
〈표 2- 7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예산 .....	118
〈표 2- 72〉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	118

〈표 2- 73〉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119
〈표 2- 74〉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	121
〈표 2- 7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추진 실적 .....	122
〈표 2- 76〉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추진 실적 .....	124
〈표 2- 7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예산 .....	125
〈표 2- 78〉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125
〈표 2- 79〉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125
〈표 2- 80〉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실적 ..	127
〈표 2- 81〉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실적 .....	128
〈표 2- 82〉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 실적 .....	130
〈표 2- 83〉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 .....	131
〈표 2- 84〉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실적 .....	133
〈표 2- 85〉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예산 .....	133
〈표 2- 86〉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134
〈표 2- 87〉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134
〈표 2- 88〉 여성의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추진 실적 .....	138
〈표 2- 89〉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예산 .....	138
〈표 2- 90〉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 실적 .....	141
〈표 2- 9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예산 .....	141
〈표 2- 92〉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추진 실적 .....	142
〈표 2- 9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추진 실적 .....	144
〈표 2- 9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추진 실적 ·	145
〈표 2- 95〉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추진 실적 .....	147
〈표 2- 96〉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예산 .....	148
〈표 2- 97〉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추진 실적 .....	149

## Contents

〈표 2- 98〉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 .....	149
〈표 2- 99〉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추진 실적 .....	150
〈표 2-100〉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예산 .....	150
〈표 2-101〉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추진 실적 .....	152
〈표 2-10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추진 실적 .....	154
〈표 2-103〉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예산 .....	154
〈표 2-10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추진 실적 .....	156
〈표 2-105〉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예산 .....	157
〈표 2-106〉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실적	159
〈표 2-107〉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	160
〈표 2-108〉 2010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목표달성도 .....	161
〈표 2-109〉 2010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예산집행률 .....	162
〈표 2-110〉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추진 실적 .....	166
〈표 2-1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예산 .....	166
〈표 2-1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 실적 .....	169
〈표 2-11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예산 .....	170
〈표 2-114〉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실적 .....	171
〈표 2-115〉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예산 .....	171
〈표 2-116〉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추진 실적 .....	175
〈표 2-117〉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예산 .....	175
〈표 2-11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 실적 .....	178
〈표 2-11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예산 .....	178
〈표 2-120〉 2010년'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목표달성도 .....	179

〈표 2-121〉 2010년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	180
〈표 2-122〉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추진 실적 ...	182
〈표 2-123〉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추진 실적 ·	184
〈표 2-124〉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실적 .....	184
〈표 2-125〉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 실적 .....	189
〈표 2-126〉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예산 .....	190
〈표 2-127〉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 실적 .....	191
〈표 2-128〉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	192
〈표 2-129〉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 실적 .....	193
〈표 2-130〉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	193
〈표 2-131〉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	194
〈표 2-132〉 전략적 홍보·교육 추진 실적 .....	196
〈표 2-133〉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간 정책공동체 구축 추진 실적 ..	196
〈표 2-13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실적 .....	197
〈표 2-135〉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목표달성도 .....	197
〈표 2-136〉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	198
〈표 3- 1〉 저출산분야 성과지표 .....	201
〈표 3- 2〉 고령화 분야 성과지표 .....	216
〈표 3- 3〉 성장동력 분야 성과지표 .....	228
〈표 3-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및 증가율(1%대비) .....	235
〈표 3- 5〉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성과(5점 만점)	242
〈표 3- 6〉 저출산분야의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	243
〈표 3- 7〉 고령사회분야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	244
〈표 3- 8〉 성장동력분야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	245

## Contents

〈표 4-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249
〈표 4- 2〉 2010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	253
〈표 4- 3〉 2010년 저출산분야 예산집행실적 .....	254
〈표 4- 4〉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	257
〈표 4- 5〉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예산집행실적 .....	258
〈표 4- 6〉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	262
〈표 4- 7〉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실적 .....	263
〈표 4- 8〉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	265
〈표 4- 9〉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예산집행률 (90% 이상 집행 사업 비율) .....	266
〈표 4- 10〉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주요 성과 .....	267
〈표 4- 11〉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정도 (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	269
〈표 4- 12〉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예산집행률(90% 이상 사업 비율)	270
〈표 4- 13〉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주요 성과 .....	272
〈표 4- 14〉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	273
〈표 4- 15〉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률(90% 이상 사업 비율)	274
〈표 4- 16〉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주요 성과 .....	275

### 그림목차

[그림 1-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	19
[그림 2-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임 강화(중영역) 구성 .....	25
[그림 2-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구성 ....	55
[그림 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구성 .....	73
[그림 2- 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	92

[그림 2- 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	106
[그림 2- 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구성 .....	120
[그림 2- 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	126
[그림 2- 8]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구성 .....	135
[그림 2- 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구성 .....	164
[그림 2-1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	181
[그림 2-1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기본계획구조·	195
[그림 3- 1]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 .....	203
[그림 3- 2] 방과후학교 참여율 .....	203
[그림 3- 3]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이행률	204
[그림 3- 4]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 정원충족률 차이 .....	205
[그림 3- 5] 시간연장형 종일제유치원 휴일형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증가율	206
[그림 3- 6]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	206
[그림 3- 7] 불임부부 지원건수 .....	207
[그림 3- 8]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및 증감률 .....	208
[그림 3- 9] 육아휴직자수 및 육아휴직률 .....	209
[그림 3-10]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210
[그림 3-11] 가족친화지수 .....	211
[그림 3-12] 가족가치관 .....	212
[그림 3-13]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	212
[그림 3-14]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	213
[그림 3-15]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 .....	214
[그림 3-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	215
[그림 3-17] 20~59세 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자수 및 가입률 .....	217
[그림 3-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	219
[그림 3-19]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퇴직연금가입률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 .....	220

## Contents

[그림 3-20]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율 .....	221
[그림 3-21] 노인치매검진율 .....	222
[그림 3-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수 및 수혜율 .....	222
[그림 3-23] 노인장기요양시설 병상수 및 구축률 .....	223
[그림 3-24]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	224
[그림 3-25]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목표치 대비) .....	225
[그림 3-2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	225
[그림 3-27]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	227
[그림 3-28] 저상버스 도입률 .....	227
[그림 3-29]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	229
[그림 3-30]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	230
[그림 3-31] 장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장년연령 .....	230
[그림 3-3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 증가율 .....	231
[그림 3-33]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	232
[그림 3-34]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및 증가율 .....	233
[그림 3-35] 방문취업사증 소지자수 및 증가율(누적) .....	234
[그림 3-36]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및 증가율 .....	234
[그림 3-37]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	236
[그림 3-38] 평생학습참여율 .....	237
[그림 3-39] 산업재해를 추이 .....	237
[그림 3-40]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추이 .....	238
[그림 3-41] 고령친화용품 시장규모 .....	239
[그림 3-42]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 .....	240
[그림 3-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	240
[그림 3-44] 역모기지 대출건수 .....	241





# 요약

## I. 서론

### □ 평가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실적(성과)을 평가하여,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2006년도 시범성과평가와 2007~2009년도 성과평가에 이어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 평가대상

- 2010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중앙정부의 평가 대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4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국민인식개선) 226개 사업으로 구성
  - 2010년에 시행한 사업 수는 총 214개이나, 이중 기 종료, 통폐합 사업들을 제외한 총 194개 사업(저출산분야 74개, 고령사회분야 50개, 성장동력분야 70개)을 대상으로 평가함.
  - 국민인식개선분야 3개 사업은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표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대영역	중영역	원래 사업수	평가 대상
전체		214	194
저출산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li> <li>•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li> <li>•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li> </ul>	85	74
고령사회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li> <li>•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li> <li>•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 조성</li> </ul>	59	50
성장동력분야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li> <li>•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li> <li>• 고령친화산업 육성</li> </ul>	70	70

□ 평가방법 : 1차 평가와 2차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

- 1차 평가(추진실적 평가): 시행계획상 목표달성과 예산집행 정도 평가
- 2차 평가(사업성과 평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변화를 지표로 측정·평가(대표영역·중영역·소영역의 단계별 가중치 적용)

## II.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 1. 전 분야

#### 가. 목표달성 실적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사업은 총 194개 사업 중 183개로 94.3%
- 분야별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사업은 저출산분야 70개(94.6%), 고령사회분야 47개(94.0%), 성장동력분야 66개(94.3%)로 모두 94%대가 당초 목표를 90% 이상 달성
  -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70% 미만) 사업은 저출산분야 2개(2.7%), 고령사회분야 3개(6.0%), 성장동력분야 2개(2.9%)

〈표 2〉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체 및 분야별 목표달성도

(단위: 개,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전체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전체	5(2.6)	2(1.0)	4(2.1)	183( 94.3)	194(100.0)
저출산분야	1(1.4)	1(1.4)	2(2.7)	70( 94.6)	74(100.0)
고령사회분야	3(6.0)	-	-	47( 94.0)	50(100.0)
성장동력분야	1(1.4)	1(1.4)	2(2.9)	66( 94.3)	70(100.0)

주 : 총 217개 사업 중 기 완료, 성과지표 통폐합, 제출실적 미제출, 국민인식개선분야를 제외하였음

## 나. 예산집행 실적

- 2010년에는 예산사업 131개, 비예산사업 64개로 구성되며, 예산은 총 12조1천억원으로 저출산분야 5조5천억원(45.9%), 고령사회분야 5조원(41.7%), 성장동력분야 1조5천억원(12.5%)
  - 예산사업 중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은 130개 사업 중 120개로 91.6%
  - 분야별로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저출산분야 89.8%, 고령사회분야 92.3%, 성장동력분야 93.5%
    -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70% 미만) 사업은 저출산분야 3개(5.1%), 고령사회분야 0개, 성장동력분야 1개(2.2%)
- 비예산사업수는 총 64개로 저출산분야 16개, 고령사회분야 24개, 성장동력분야 24개

〈표 3〉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전체 및 분야별 예산집행률

(단위: 사업수, %, 억원)

평가항목	예산집행률				전체	비예산 사업수	예산액
	50%미만	50~70%	70~90%	90% 이상			
전체	2(1.5)	2(1.5)	7(5.4)	120( 91.6)	131(100.0)	64	120,613
저출산분야	2(3.4)	1(1.7)	3(5.1)	53( 89.8)	59(100.0)	16	55,352
고령사회분야	-	-	2(7.7)	24( 92.3)	26(100.0)	24	50,243
성장동력분야	-	1(2.2)	2(4.3)	43( 93.5)	46(100.0)	24	55,018

주 : 총 217개 사업 중 기 완료, 성과지표 통폐합, 제출실적 미제출, 국민인식개선분야를 제외하였음

## 다. 성과지표

- ☐ 저출산분야의 성과는 4.0점으로 우수, 고령사회분야의 성과는 4.5점으로 우수, 성장동력분야의 성과는 3.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표 4〉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성과(5점 만점)

분야	가중치 적용 점수 (5점 만점)
A. 저출산분야	4.0
B. 고령사회분야	4.5
C. 성장동력분야	3.9

## 2. 저출산분야 추진실적 평가

### 가. 목표달성 실적

- ☐ 저출산분야에서 목표를 90%이상 달성사업은 70개(94.6%), 70~90% 달성 2개(2.7%), 50~70% 달성 1개(1.4%), 50%미만 달성 1개(1.4%)
- 중영역별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의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사회문화 조성’ 100.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95.0%, ‘건강한 미래세대육성’ 88.2% 순
-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으로 미진한 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61.8%)’, ‘이동안전지킴이(33.5%)’ 두 개

〈표 5〉 2010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분야	1 (1.4)	1 (1.4)	2 (2.7)	70 (94.6)	74 (100.0)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1 (2.5)	1 (2.5)	38 (95.0)	40 (100.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	-	-	5 (100.0)	5 (100.0)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1 (6.3)	-	15 (93.8)	16 (100.0)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	7 (100.0)	7 (100.0)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1 (8.3)	11 (91.7)	12 (100.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	-	17 (100.0)	17 (100.0)
2-1. 모성보호 강화	-	-	-	3 (100.0)	3 (100.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	-	7 (100.0)	7 (100.0)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	-	-	7 (100.0)	7 (10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5.9)	-	1 (5.9)	15 (88.2)	17 (100.0)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1 (14.3)	-	-	6 (85.7)	7 (100.0)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	1 (12.5)	7 (87.5)	8 (100.0)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	-	-	2 (100.0)	2 (100.0)

## 나. 예산집행 실적

- 저출산분야는 예산사업 59개와 비예산사업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5조5,352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 중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89.8%, 70~90% 집행 사업 5.1%, 50~70% 집행 사업 1.7%, 50%미만 집행 사업 3.4%
- 중영역별 예산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48,634억원 (87.9%),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309억원(7.8%),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408억원(4.4%) 순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93.8%,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92.3%,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86.7% 순

□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은 총 3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7.3%),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55.5%),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0.0%)

〈표 6〉 2010년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율 사업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저출산분야	55,352.2	100.0	2 (3.4)	1 (1.7)	3 (5.1)	53 (89.8)	59 (100.0)		16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8,634.3	87.9	1 (3.3)	1 (3.3)	2 (6.7)	26 (86.7)	30 (100.0)		1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0.5	0.0	-	-	-	1 (100.0)	1 (100.0)		4
1-2. 재·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43,965.5	79.5	1 (7.7)	-	2 (15.4)	10 (76.9)	13 (100.0)		3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001.6	3.6	-	-	-	6 (100.0)	6 (100.0)		1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666.6	4.8	-	1 (10.0)	-	9 (90.0)	10 (100.0)		2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309.2	7.8	1 (7.7)	-	-	12 (92.3)	13 (100.0)		4
2-1. 모성보호 강화	3,723.5	6.7	-	-	-	3 (100.0)	3 (100.0)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2.8	0.0	1 (20.0)	-	-	4 (80.0)	5 (100.0)		2
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562.9	1.0	-	-	-	5 (100.0)	5 (100.0)		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408.7	4.4	-	-	1 (6.3)	15 (93.8)	16 (100.0)		2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683.9	1.2	-	-	-	6 (100.0)	6 (100.0)		1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326.8	2.4	-	-	-	8 (100.0)	8 (100.0)		1
3-3.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398	0.7	-	-	1 (50.0)	1 (50.0)	2 (100.0)		

## 다. 성과지표

- 저출산분야 중영역별 성과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4.0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4.5점)’은 우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3.0점)’은 양호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내 소영역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4.6점)”,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5.0점)”는 우수,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3.0점)”은 양호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내 소영역은 “모성보호 강화(4.7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5.0점)”,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4.0점)” 모두 우수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내 소영역은 “이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점)”, “이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점)” 모두 양호

〈표 7〉 저출산분야의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저출산분야(4.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4.0)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4.6)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3.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5.0)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4.5)	모성보호 강화(4.7)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5.0)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0)	이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 이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

## 3. 고령사회분야 정책추진성과 평가

### 가. 목표달성 실적

- 고령사회분야에서 당초목표 90%이상 달성 사업은 47개(94.0%), 50%

미만 달성 3개(6.0%)

- 중영역별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 비율은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과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100.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90.9%, ‘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86.7% 순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으로 미진한 사업은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0.0%)’,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0.0%)’,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0.0%)’ 세 개로 법령 개정 연기 등의 문제로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못함.

〈표 8〉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고령사회분야	3 (6.0)	-	-	47 (94.0)	50 (100.0)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13.3)	-	-	13 (86.7)	15 (100.0)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1 (9.1)	-	-	10 (90.9)	11 (100.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 (25.0)	-	-	3 (75.0)	4 (10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	-	-	18 (100.0)	18 (100.0)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	-	7 (100.0)	7 (100.0)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	-	7 (100.0)	7 (100.0)
2-3. 노인 권익 증진	-	-	-	4 (100.0)	4 (100.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	-	-	6 (100.0)	6 (100.0)
3-1. 노인일자리 창출	-	-	-	1 (100.0)	1 (100.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	-	5 (100.0)	5 (100.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 (9.1)	-	-	10 (90.9)	11 (100.0)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 (12.5)	-	-	7 (87.5)	8 (100.0)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	-	3 (100.0)	3 (100.0)



## 나. 예산집행 실적

□ 고령사회분야는 예산사업 26개와 비예산사업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5조243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 중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92.3%, 70~90% 집행 사업은 7.7%, 70% 미만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없음.

〈표 9〉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고령사회분야	50,242.9	100.0	-	-	2 (7.7)	24 (92.3)	26 (100.0)	24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6,899.0	73.4	-	-	-	2 (100.0)	2 (100.0)	13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36,893.0	73.4	-	-	-	1 (100.0)	1 (100.0)	1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6.0	0.0	-	-	-	1 (100.0)	1 (100.0)	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6,829.3	13.6			2 (16.7)	10 (83.3)	12 (100.0)	6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846.1	1.7	-	-	-	6 (100.0)	6 (100.0)	1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4,619.6	9.2	-	-	1 (50.0)	1 (50.0)	2 (100.0)	5
2-3. 노인 권익 증진	1,363.6	2.7	-	-	1 (25.0)	3 (75.0)	4 (100.0)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697.2	9.3	-	-	-	6 (100.0)	6 (100.0)	-
3-1. 노인일자리 창출	3,067.0	6.1	-	-	-	1 (100.0)	1 (100.0)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630.2	3.2	-	-	-	5 (100.0)	5 (100.0)	-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817.4	3.6	-	-	-	6 (100.0)	6 (100.0)	5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731.4	3.4	-	-	-	4 (100.0)	4 (100.0)	4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86	0.2	-	-	-	2 (100.0)	2 (100.0)	1

□ 중영역별 예산은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6,899억원(73.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6,829억원(13.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697억원(9.3%),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817억원(3.6%) 순

-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강화’,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은 모든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하였으며,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중영역은 83.3%의 사업이 예산을 90% 이상 집행

□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다소 부진한 사업은 없음.

#### 다. 성과지표

- 고령사회분야 중영역별 성과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5.0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5점)’,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4.5점)’은 우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3.8점)’은 양호
-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내 소영역 “공적연금제도 체계화(4.5점)”는 우수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중영역 내 소영역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4.4점)”,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 확립(5.0점)”, “노인 권익 증진(4.0점)” 모두 우수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 내 소영역은 “노인일자리 창출(5.0점)”,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점)” 모두 우수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내 소영역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3.8점)”은 양호

〈표 10〉 고령사회분야 중 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고령사회분야(4.5)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5)	공적연금제도 체계화(4.5)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지표전환으로 미측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4.5)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4.4)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5.0) 노인 권익 증진(4.0)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5.0)	노인일자리 창출(5.0) 생산적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3.8)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3.8)

#### 4. 성장동력분야 추진실적 평가

##### 가.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분야에서 당초목표를 90%이상 달성한 사업은 66개(94.3%), 70~90% 달성 2개(2.9%), 50~70% 달성 1개(1.4%), 50% 미만 달성 1개(1.4%)
- 중영역별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의 비율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00.0%, ‘고령친화산업 육성’ 100.0%,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89.5% 순
- 목표달성도가 70% 미만으로 미진한 사업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693.3%)’,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63.9%)’ 두 개

〈표 11〉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성장동력분야	1 (1.4)	1 (1.4)	2 (2.9)	66 (94.3)	70 (100.0)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 (2.6)	1 (2.6)	2 (5.3)	34 (89.5)	38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	-	11 (100.0)	11 (10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9.1)	1 (9.1)	1 (9.1)	8 (72.7)	11 (100.0)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	1 (6.3)	15 (93.8)	16 (100.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	-	16 (100.0)	16 (100.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	-	8 (100.0)	8 (10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	-	-	8 (100.0)	8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16 (100.0)	16 (100.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	-	-	5 (100.0)	5 (100.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	7 (100.0)	7 (100.0)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	2 (100.0)	2 (100.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2 (100.0)	2 (100.0)

## 나. 예산집행 실적

- 성장동력분야는 예산사업 46개와 비예산사업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조5,018억원으로 편성
  - 전체 예산사업 중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사업은 93.5%, 70~90% 집행 사업은 4.3%, 50~70% 집행 사업은 2.2%
- 중영역별 예산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2,298억원 (81.9%),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457억원(16.4%), ‘고령친화산업 육성’ 263억원(1.8%) 순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100.0%,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95.8%,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85.7% 순
-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52.0%)’ 1개

〈표 12〉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중 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성장동력분야	15,018.4	100.0	-	1 (2.2)	2 (4.3)	43 (93.5)	46 (100.0)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457.1	16.4	-	-	1 (4.2)	23 (95.8)	24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94.1	2.6	-	-	-	8 (100.0)	8 (10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94.2	5.3	-	-	1 (12.5)	7 (87.5)	8 (100.0)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조성	1,268.8	8.4	-	-	-	8 (100.0)	8 (100.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2,298.0	81.9	-	1 (7.1)	1 (7.1)	12 (85.7)	14 (100.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 계 확립	11,329.0	75.4	-	-	-	7 (100.0)	7 (10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969.0	6.5	-	1 (14.3)	1 (14.3)	5 (71.4)	7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63.3	1.8	-	-	-	8 (100.0)	8 (100.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105.0	0.7	-	-	-	1 (100.0)	1 (100.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57.3	1.0	-	-	-	6 (100.0)	6 (100.0)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0	0.0	-	-	-	1 (100.0)	1 (100.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	-	-	-

## 다. 성과지표

- 성장동력분야 중영역별 성과는 ‘고령친화산업 육성(5.0점)’,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4.3점)’는 우수,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3.1점)’은 양호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내 소영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4.3점)”은 우수하나,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6점)”,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2.0점)”은 미흡
-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내 소영역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5.0점)”는 우수하나,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점)”은 양호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내 소영역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5.0점)”,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점)” 및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점)” 모두 우수

〈표 13〉 성장동력분야 중 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성장동력분야(3.9)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3.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4.3)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6)
	외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2.0)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4.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5.0)
고령친화산업 육성(5.0)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5.0)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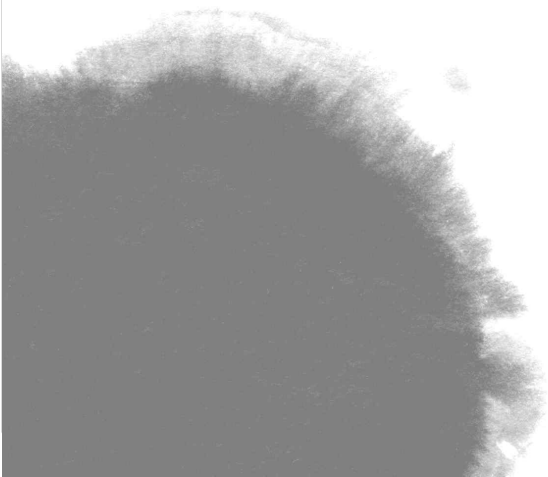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III. 결론

-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는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2010년도 성과 뿐만 아니라 1차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아울러 실시함.
- 본 2010년도 성과평가 및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향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01

K  
I  
H  
A  
S  
A

**서론**







# 제1장 서론

##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및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시행(2006)
  - 제1차 기본계획의 중간년도인 2008년에는 보완판을 마련하여 2009년도 시행계획부터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 마련
  - 2007년에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시범평가 실시
  - 2008년에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실시
  - 2009년에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지표 간명화·지수화 작업 추진
  - 2010년에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실시
- 본 보고서는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함
  -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는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에 의거하여 실시

## 제2절 평가 대상

- 2010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중앙정부의 평가 대상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4대 분야(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국민인식개선) 226개 사업으로 구성
    -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분야와 중영역 및 소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10년에 시행한 사업 수는 총 214개이나, 이중 기 종료, 통폐합 사업들을 제외한 총 194개 사업(저출산분야 74개, 고령사회분야 50개, 성장동력분야 70개)들을 대상으로 평가함.
    - 국민인식개선분야 3개 사업은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에 편입된 관계로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

〈표 1-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대영역	중영역	원래 사업수	평가 대상
전체		214	194
저출산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li> <li>•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li> <li>•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li> </ul>	85	74
고령사회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li> <li>• 건강하고 보호받은 노후생활 보장</li> <li>•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기반 조성</li> </ul>	59	50
성장동력분야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li> <li>•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li> <li>• 고령친화산업 육성</li> </ul>	70	70

## 제3절 평가 방법

- 정책평가 대상은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표 등이 달라짐(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 2008).

- 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임.
  -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 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
- 결과에 대한 평가는 ‘효과성 평가’로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그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의도했던 대상상황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정도(직접적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측정도구의 개발이 어려우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
- 종합적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결과물만이 아닌 자원의 투입과 이를 결과물로 전환하는 행정역량을 성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김성준·윤수재, 2002)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출에 대한 평가(1차 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2차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단, 일부 성과지표는 산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성이 존재

[그림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 1차 평가(추진실적 평가)

- 2010년도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목표달성률)와 예산(최종)의 집행 정도(예산집행률)를 평가

- 최종 194개 사업(저출산분야 74개, 고령사회분야 50개, 성장동력분야 70개)들을 대상으로 평가
- 추진실적으로서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은 90% 이상 우수, 70~90% 미만 양호, 50~70%미만 미흡, 50% 미만 매우 미흡으로 평가

□ 2차 평가(사업성과 평가)

- 개별사업들의 수행을 통해 달성(개선)하고자 하는 사회현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값을 수집하여 평가(성과지표 평가)
- 총 50개의 성과지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분야 15개, 성장동력분야 17개)로 구분하여 성과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함(상세한 분야 및 척도는 부록 참조).

〈표 1-2〉 영역별 2차평가 성과지표

분야	영역	성과지표
전체		50개
저출산분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8개
		8개
		6개
		4개
고령사회분야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5개
		6개
		5개
		2개
		2개
성장동력분야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17개
		8개
		5개
		4개

- 사업별 성과지표의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영역·중영역·소영역별로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가중지수평가)
- 성과지표 평가점수가 4~5점은 우수, 3~4점미만은 양호, 2~3점미만은 미흡, 2점미만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

## 제4절 평가 절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 7단계로 구분·실시
  - 1단계: 평가지침 통보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지표 및 가중치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단계: 추진실적 제출
    - 각 부처에서 2010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사업목적,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목표달성률, 예산내역 및 집행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3단계: 추진실적 검토
    - 성과평가연구기관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문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
  - 4단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평가연구기관에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추진실적(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을 분석·평가
  - 5단계: 성과지표 평가
    - 소영역별 성과지표의 값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의 내부자료,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 성과지표의 값에 가중치(소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정)를 적용하여 중영역별 및 대표영역별 성과점수를 산정·평가
  - 6단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평가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7단계: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차기년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 이들 7개 단계 중 1~2단계와 6~7단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정책 내지 사업들을 시행한 중앙부처들이 관장하며, 본 연구는 3~5단계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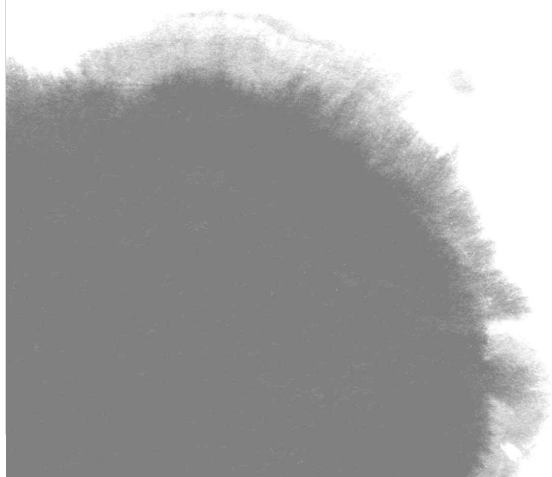
## 제5절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익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정부는 시행계획 평가결과가 확정 되면 국회에 보고
- 평가결과는 익년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 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 합리화, 예산배분 효율화,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평가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02

K  
I  
H  
A  
S  
A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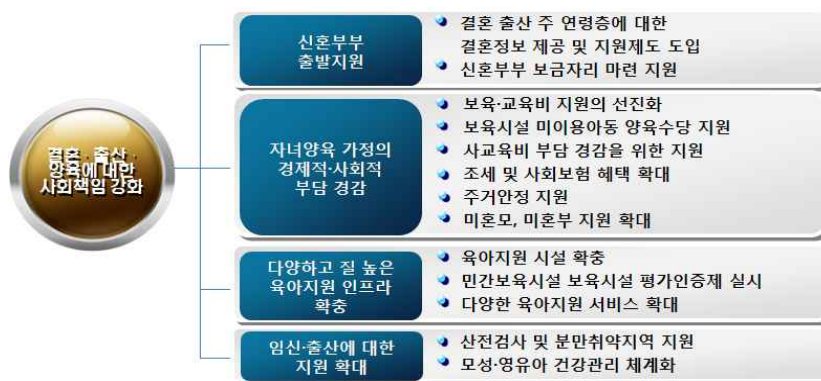
### 제1절 저출산 분야

- 저출산정책의 기본목표는 출산을 제고로 주요 전략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대표영역)”이었음.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 3개 중영역으로 구성됨.

####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 이 중영역은 신혼부부 출발지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4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구성



##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 ①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 □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 사업

-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전문 포털사이트와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포털사이트의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동영상 5종과 키톤 5종을 개발하고 웹진을 4회 발행하였으며, 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309건, 결혼시책 업데이트 352건을 수행하는 등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0.5억원으로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전문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만남에서부터 결혼 준비, 결혼, 결혼 후 가정생활 등 단계별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는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강의 및 상담을 통해 원만한 결혼초기 적응능력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 22,616명, 남성대상교실 이용자수 37,249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는 2009년 7천명에서 2010년에 22,616명(목표달성도 141.4%)으로 증가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국방부는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을 대상으로 정훈 교육, 다양한 매체 등

을 활용하여 결혼·출산·육아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09년과 2010년에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비예산 사업).

- 국방일보에 교육자료 및 보도자료 게시(2009년 11회, 2010년 4회), 국방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09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교육용 동영상 게시, 2010년 교육 및 홍보 동영상 게시), 국군방송을 통한 저출산 시사방송(2009년 2회, 2010년 1회), 교육 및 홍보 리플렛 배포(2010년), 반사회보 발행 시 정책홍보(2010년 1회), 국방부·국직·소속기관 대상 인구정책 전문가 초빙교육(2010년 2회)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2010년에는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의 출산율 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대를 위해 국방부 자체 출산율 향상 정책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분기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평가회의를 3회 실시하였음.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 시 입영기일 연기

○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입영 대상 중 유자녀기혼자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고, 6세 이하 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유자녀 기혼병사가정의 출산·양육을 위한 병역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유자녀 기혼자 488명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고 411명에 대해 병영기일을 연기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	포털사이트 구축(1식)	컨텐츠 강화, 결혼상담센터 운영
	목표달성률(%)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5	0.5
	예산집행률(%)	100.0	100.0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명)	7천	22,616
	납성대상교실 이용자수(명)		37,249
	목표달성률(%)	175.0	141.4 116.4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국방일보 교육자료게시, 교육 및 홍보 실시	11회	각종 교육 및 홍보 실시
	목표달성률(%)	110.0	100.0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성과지표 및 실적	상근예비역 선발 및 입영기일 연기 899명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달성률(%)	112.4	100.0

##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국토해양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주택청약당첨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공급(2008년에 도입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하고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제고 및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신혼부부주택 24,869호를 공급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103.6%)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23,334호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여(2009.11월 기준) 당초목표의 93.3%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급실적	23,334호	24,869호
	목표달성률(%)	93.3	103.6

##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①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영유아 및 만5세아, 만12세 이하 장애아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879천명에게 차등보육료(만0~4세)를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예산은 33,220억원으로 전액 집행) 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차등보육료는 전액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20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만12세 이하)는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하였음. 2010년 3월에 둘째아 이상에 대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였으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75%)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음. 그 결과 수혜이동수는 2006년 652천명에서 2010년 879천명으로 약 227천명이 증가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일부 사업(2008년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2009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만 목표달성도가 90~95% 정도임.
  - 차등보육료는 예산은 2006년 11,360억원에서 2010년 33,22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2009년부터 기본보조금이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

1) 2010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통합에 따라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성과지표 및 예산 통합(2010년부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차등보육료 이동과 중복되어 없어졌으며,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추가)

#### □ 유아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3~4세 아 차등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두자녀 이상 추가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취원아동 중 57.1%, 만5세아 무상교육비 60.1%, 두자녀이상 추가교육비는 100.0%까지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예산은 5,608억원으로 97.4% 집행).
- 만3·4세아 차등교육비의 경우 지원기준을 2009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변경<sup>2)</sup>하고, 2010년에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음.
- 예산은 2006년 3,942억원에서 2010년 5,608억원으로 1.4배 증가

####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만3~5세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한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과정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155명을 지원하여 목표의 93.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95억원으로 전액 집행).
- 지원인원이 2007년 2,486명에서 2010년 2,155명까지 감소하여, 목표달성률은 2006~2007년 120%, 2008년 95.6%, 2009년 89.3%, 2010년 93.7% 등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최근 지원인원 감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특수교육기관(유치원 과정만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학생수가 늘고 일

2)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지원은 소득하위 70% 이하 영유아가구의 경우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만3~4세아의 경우 소득하위 60%는 기준단가 60% 지원, 소득하위 70% 경우 기준단가 30% 지원

반유치원 취원 특수교육대상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향후 일반유  
치원 이용 장애이수를 정확하게 추정하여 사업목표 설정 등 필요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어업  
인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비 또는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  
였음.
- 2010년에 시설 이용 시 70%까지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농지소유규모기준을 2005년 2ha미만에서  
2006년 5ha미만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지원액을 보육·교육시설  
이용 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시 35%  
까지 확대하여 목표(지원아동비율)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sup>3)</sup>
  - 그러나 예산은 2006년 444억원에서 2009년 838억으로 증가한 후  
2010년에 812억원으로 감소하고 집행률도 77.8%로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보육·교육비 지원확대로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교육비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대상자 다수가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향후 농어촌의 특수성(보육인프라 미흡, 양질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책정 시 대체관계에 있는 타 정책의 수요 고려가 필요함.

□ 아이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아이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부모·시설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  
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 2009년 아이사랑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한 이래 2010년에 정부지원 대

3) 2006~2007년 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농어가 총영아수 대비 지원  
아동비율이 각 25%로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상아동 중 아이사랑카드 결제자 수의 비율이 95.2%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예산은 40.1억원으로 전액 집행),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육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0~7세 자녀를 둔 부모나 임신 예정인 부부를 위해 보육정보(정책,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보육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 접속자 수가 2009년 월 10만명에 이어 2010년에 월 23만명(예산 14.7억원 전액집행)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3〉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아동수(명)	652,000	673,489	592,256	692천명	879천명 <sup>1)</sup>
		목표달성률(%)	112.4	124.6	95.3	104.1	101.0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지원아동수(명)	차등보육료 에 포함	142,624	122,828	109천명	1)
		목표달성률(%)		104.0	94.2	94.0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지원아동수(명)	차등보육료 에 포함	16,892	15,637	15.6천명	1)
		목표달성률(%)		124.2	92.0	111.4	
유아 교육비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아동수(명)	차등보육료 에 포함	99,404	107,500	110천명	1)
		목표달성률(%)		258.9	153.6	118.3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	38,779명 <sup>2)</sup>	121,697명 <sup>3)</sup>	42.4	53.8	57.1
		목표달성률(%)	100.0	100.0	99.3	111.9	118.7
	만5세아 무상교육비	수혜자·취원아동(%)	128,979명 <sup>2)</sup>	135,652명 <sup>3)</sup>	50.2	53.3	60.1
		목표달성률(%)	100.0	100.0	106.8	104.3	117.6
장애아 무상교육비	두자녀이상 추가교육비	지원인원·신청(%)	13,758명 <sup>2)</sup>	16,474명 <sup>3)</sup>	100.0	100.0	10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5.3	105.3	105.3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인원(명)	2,363	2,486	2,389	2,233	2,155	
	목표달성률(%)	118.2	124.3	95.6	89.3	93.7	
아이사랑카드 도입	농어가 총영아수 대비 지원아동비율(%)	36.0	39.0	80.4	66.3	시설이용시 70% 지원	
	목표달성률(%)	112.5	114.7	129.7	94.7	100.0	
아이사랑카드 도입	아이사랑카드 결제자수 =정부지원대상 아동수	-	-	-	전국확대 실시	95.2%	
	목표달성률(%)				100.0	100.2	
보육정보포털구축	접속자수	-	-	-	월10만명	월23만명	
	목표달성률(%)				109.1	176.9	

주: 1) 2010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통합

2) 2006년 성과지표는 (수급자/지원신청자)×50%+(대응투자여부)×50%

3) 2007년 성과지표는 지원신청자 중 수급자



〈표 2-4〉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유아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최종예산(억원)	7,849	9,707	11,908	22,859	33,220 <sup>1)</sup>
	지원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최종예산(억원)	2,539	2,563	2,607	2,388	주 <sup>1)</sup>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최종예산(억원)	490	524	659	650	주 <sup>1)</sup>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최종예산(억원)	482	1,028	1,336	1,251	주 <sup>1)</sup>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만3 4세아 차등교육비	최종예산(억원)	1,550	1,227	1,485.9	4,998 <sup>2)</sup>	5,608.3 <sup>2)</sup>
		예산집행률(%)	60.7	99.9	69.5	92.7	97.4
유아 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최종예산(억원)	2,336	2,067	2,362.4	주 <sup>2)</sup>	주 <sup>2)</sup>
	두자녀이상 추가교육비	최종예산(억원)	56	119	143.4	주 <sup>2)</sup>	주 <sup>2)</sup>
		예산집행률(%)	119.6	100.0	59.2		
	장애아 무상교육비	최종예산(억원)	75	84	97.4	95	95
		예산집행률(%)	100.0	113.5	100.0	100.0	100.0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최종예산(억원)	444	566	822.2	838	812
		예산집행률(%)	99.1	98.2	120.2	100.0	77.8
	아이사랑카드 도입	최종예산(억원)	-	-	-	28.6	40.1
		예산집행률(%)				52.5	100.0
	보육정보포털 구축	최종예산(억원)	-	-	-	21	14.7
		예산집행률(%)				100.0	100.0

주: 1) 2010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통합

2) 차등교육비, 만5세아무상교육비, 두자녀이상교육비 합계

## 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0~1세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가 2009년에 이어 68천명으로 당초목표의 61.8%를 달성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723억원으로 전액 집행).
- 목표달성률이 낮은 이유로는 당초 차상위이하 계층에 대한 추정을 다소 높게 설정한데다가 보육료 지원액 대비 양육수당의 비율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향후 보육료 지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동의 연령별로 보육시설 이용 선호도, 증액 시 양육수당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표 2-5〉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실적

구분	성과지표	2009	201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아동수(천명)	68	68
	목표달성률(%)	59.6	61.8
	최종예산(억원)	688	723
	예산집행률(%)	64.1	100.0

### ③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새터민 자녀·보훈대상자 자녀·시설수용 학생,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저소득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자유수강권 지원 아동수가 41.5만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1,410억원으로 전액 집행)
  - 수혜아동수가 2006년 9.1만명에서 2010년 41.5만명으로 4.5배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46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목표달성률이 대체로 90% 이상(2009~2010년에는 100%)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2010년 예산집행률은 88.3%로 다소 저조하여 향후 실질적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여 수요를 보다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및 방학 중 초등학생을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교육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초등돌봄교실이 5,177개 학교에서 6,200개 운영되어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645억원 전액 집행).
  - 초등돌봄교실 수가 2006년 1,747개(1,685학교 운영)에서 2010년 6,200개(5,177학교)로 3.5배 증가하고, 예산도 92억원에서 1,645억원으로 18배 증가하여 대부분 연도에서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수준별 학습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충학습 기회 확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수요 억제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사이버가정학습 이수율이 78%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50억원 전액 집행).
  - 사이버 가정학습 사용자 만족도가 2006년 66점에서 2010년 74점으로 증가하고, 중점서비스대상 학생 중 담임형 가입 비율이 2007년 50%에서 2009년 75%로 증가하는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산은 2006년 132억원에서 2010년 250억원으로 약 2배 증가

〈표 2-6〉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월평균 지원학생수(만명)	9	27	28	35	41.5
	목표달성률(%)	90.9	90.0	87.5	100.0	106.4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초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교실 수	1,685교 <sup>1)</sup>	2,508교 <sup>1)</sup>	3,334개	4,662개	6,200개
	목표달성률(%)	153.2	104.5	86.0	166.5	100.0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사이버가정학습 이수율 <sup>2)</sup>	66점 <sup>3)</sup>	50% <sup>4)</sup>	64% <sup>4)</sup>	75% <sup>4)</sup>	78%
	목표달성률(%)	106.5	250.0	106.7	125.0	109.9

주 : 1) 2006~2007년 성과지표는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2) 학습을 이수한 학급배정형 학생수/학급배정형 학생수(초4~고1)×100%

3) 2006년 성과지표는 '시·도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4) 2007~2009년 성과지표는 '중점서비스 대상 학생 담임형 가입 비율'

〈표 2-7〉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최종예산(억원)	46	823.6	1,010.6	1,271	1,410
	예산집행률(%)	100.0	94.2	98.3	100.0	88.3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최종예산(억원)	92	125.1	863.6	874	1,645
	예산집행률(%)	100.0	96.8	99.6	100.0	100.0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최종예산(억원)	132	140.5	227.5	211	250
	예산집행률(%)	90.9	95.7	94.2	97.2	100.0

#### 4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보건복지부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업은 2010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비예산 사업).
- 개정의 주된 내용은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중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 세대의 두 번째 자녀부터 성·연령 점수 산정 제외임.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보건복지부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시 매월 추가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2011년 예산 3백만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07억원 전액 집행).
- 2007년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시 매월 추가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는 다음연도 예산 2백만원, 2010년에는 다음연도 예산

3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11월말 현재 13명에 추가급여(노령연금)를 지급(예산 7백만원)하고, 2010년 12월말 현재 24명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였음(예산 7백만원).

- 이외에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혁은 2009년에 기 완료됨.
- 기획재정부는 세수감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06년부터 마련한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2009년 2월에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공제액을 인상한 월 급여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 기본공제를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교육비 공제를 취학전 및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증가시키고, 의료비 공제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표 2-8〉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과지표 및 실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기본계획수립 개정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완료
	목표달성률(%)	100.0	100.0	-	70.0	100.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성과지표 및 실적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0년 예산 2백만원 확보	'11년 예산 3백만원 확보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0.07	0.07
	예산집행률(%)				100.0	100.0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	성과지표 및 실적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시행	620만원 <sup>1)</su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시행	-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

주 : 1) 2008년 성과지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금액합계'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 개편'은 비예산 사업임.

## 수 주거안정 지원

###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국토해양부는 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특별공급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에서 10%, 민영주택은 3%에서 5%로 추가 확대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 2007년 주택청약제도 개편(자녀수, 가족수에 따라 가점 부여), 2009년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3%에서 10%로 확대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국민주택기금 이용 시 저리의 전세 또는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0.5% 우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 및 금리 0.5% 우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대출모니터링 시행, 2007년 대출모니터링 시행, 2008년 상환방식 변경안 검토,
  - 2009년 다자녀가구의 국민주택기금 이용 시 구입자금 대출한도 5,000만원(금리 0.5% 우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700만원 상향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 주거안정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성과지표 및 실적	주택공급규칙 개정	주택청약제도 개편	-	공공주택 5%, 국민임대 주택 10%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5% 특별공급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성과지표 및 실적	·가금운용계획 변경 ·대출모니터링 시행 전가회의	대출모니터링 시행, 전문가회의	상환방식 변경안 검토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목표달성률(%)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 6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 □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지역거점기관을 통해 재가미혼모·부자에게 의료비 지원, 정보 제공, 자녀양육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직업 연계, 보호시설 연계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0년에 미혼모지원거점기관 11개소를 확대하여 총 17개소를 운영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83점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4억원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전국에서 미혼모지원거점기관 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4,705명이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25세 미만 한부모가구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학력 단절 한부모에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며,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미혼모 정보 포털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지원자 중 자산형성 참여 가구가 45%로 당초목표를 15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예산은 139억원 중 7.3%만이 집행되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업 지원대상자 발굴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표 2-10〉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운영 서비스 만족도	4,705명 <sup>1)</sup>	83점
	목표달성률(%)	117.6	118.6
	최종예산(억원)	3.2	8.4
	예산집행률(%)	100.0	10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2010년 신규)	지원자 중 자산형성 참여 가구		45.0%
	목표달성률(%)		150.0
	최종예산(억원)		139.0
	예산집행률(%)		7.3

주: 1) 2009년 성과지표는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이용자수(명)’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① 육아지원 시설 확충

#####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육인프라를 확보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국공립보육시설 42개소를 확충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2.8억원 전액 집행).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수는 2006년 170개소에서 2010년 42개소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52.5%를 제외하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취약지역 등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노동부는 2007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수 31개소(목표달성률 62.0%), 용자지원 사업장수 12개소(목표달성률 240.0%), 운영비지원 사업장수 187개소(목표달성률 86.6%)로 나타남(예산 285.5억원 중 97.9% 집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수는 2007년 21개소에서 2008~2009년 각 43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31개소로 다소 감소, 용자지원 사업장수는 9개소에서 2008, 2009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 12개소로 증가, 운영비지원 사업장수는 165개소에서 187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설치지원과 운영비지원의 목표들은 2007~2009년 간 달성되었으나 2010년에 미흡하며, 용자지원의 목표달성률은 2008~2009년에 낮게 나타남.
    - 이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후 운영비 및 용자금 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2-11〉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확충시설수	170개소	148개소	102개소	84개소	42개소
	목표달성률(%)	113.3	52.5	115.9	105.0	140.0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수		21	43	43	31
	직장보육시설 용자지원 사업장수		9	2	6	1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장수		165	173	181	187
	목표달성률(%)		105.0 100.0 103.1	110.3 22.2 100.6	122.9 75.0 94.8	62.0 240.0 86.6

〈표 2-12〉 육아지원시설 확충 예산집행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최종예산(억원)	396	502	238.1	176	52.8
	예산집행률(%)	85.9	75.7	99.8	100.0	100.0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동부)	최종예산(억원)	-	161	165	209	285.8
	예산집행률(%)		98.1	97.6	91.4	97.9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최종예산(억원)	-	비예산	7.9	-	-
	예산집행률(%)			50.0		

## ②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체 시설 중 평가인증시설의 비율이 66.5%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인증제참여시설 중 인증통과시설 비율은 2006년 76.0%, 2007년 83.7%, 2008년 69.2%, 전체시설 중 평가인증시설 비율은 2009년 52.2%, 2010년 66.5%로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3〉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평가인증율(%) (평가인증시설수/전체시설수)	76.0 <sup>1)</sup>	83.7 <sup>1)</sup>	69.2 <sup>1)</sup>	52.2	66.5
	목표달성률(%)	108.6	119.6	98.9	130.5	120.9
	최종예산(억원)	16	31.6	35.4	34	41
	예산집행률(%)	100.0	75.0	92.6	100.0	100.0

주 : 1) 2006~2008년 성과지표는 ‘인증통과시설÷참여시설×100(%)’

## ③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양립 기반을 조성하고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이동 수가 32,835명(10월 기준)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50억원 전액 집행).
  -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인원은 2006년 2,016명, 2007년 2,916명, 2008년 3,50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2009년 23,871명, 2010년 32,835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하

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이용비용을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23만건 지원하여 만족도가 82.7점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12억원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951,854건(11월말 기준)을 지원하여 만족도가 87.5점으로 등 목표를 거의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육아돌봄이 필요한 5~10가구를 돌봄 품앗이 조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시범사업 기관 5개소를 운영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품앗이 육아망사업 시행기관 97개소를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반 운영 유치원에 대해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종일제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맞벌이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전체 유치원 중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이 99%로 당초목표

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9억원 전액 집행).

- 이는 2006년 71.5%에서 증가한 것으로 매년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4〉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수혜아동수(명)	2,016 <sup>1)</sup>	2,916 <sup>1)</sup>	3,505 <sup>1)</sup>	23,871	32,835
	목표달성률(%)	100.8	104.1	100.1	159.1	187.6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서비스 연계건수(건)				951,854건	123만건
	서비스 만족도(점)				87.5	82.7
	목표달성률(%)				112.1 96.2	136.7 103.4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시범사업 기관 수				97 <sup>2)</sup>	5
	목표달성률(%)				100.0	100.0
유치원 종일제 확대	전체 유치원 대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71.5	81.0	91.0	95.5	99.0
	목표달성률(%)	102.1	108	104.6	100.5	104.2

주 : 1) 2006~2008년 성과지표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인원’

2) 2009년 성과지표는 ‘품앗이 육아망 사업 시행 기관 수’

〈표 2-15〉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최종예산(억원)	432	309	393.5	798	85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71.8	100.0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최종예산(억원)				348	312
	예산집행률(%)				91.4	100.0
유치원 종일제 확대	최종예산(억원)	51	100	200	484	46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99.3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①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 □ 산전검사로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산전진찰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부가급여를 시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임신 당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651,065명(11월말 기준)의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인 고운맘카드 지원을 신청하여 임신당 20만원(1일 4만원)을 지원하고, 산전진찰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의 임신부에게 이동 산전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여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북을 제외한 산부인과가 없는 6개 시·도에 지원을 완료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97.2%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2억원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산부인과가 없는 전남 1,121명과 경북 180명 가임기여성에게 산전·후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88.6%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비 융자사업」 추진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분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체계적으로 분만취약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만취약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인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고흥종합병원에 9천2백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6〉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산전검사로 지원	임산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법령개정	법령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완료
	목표달성률(%)	100.0	100.0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88.6%	97.2%
	목표달성률(%)	126.6	108.0
	최종예산(억원)	4.6	9.2
	예산집행률(%)	100.0	100.0
분만취약 농어촌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분만취약지역 지원	1지역 용자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방안 수립
	목표달성률(%)	100.0	100.0

주: '산전검사로 지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 ②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임산부·영유아 건강 정보제공 등을 위한 모자 보건수첩을 제작·배부하고,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20주) 이상 임신 부를 대상으로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철분제지원율이 51.1%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1.6억원 전액 집행).
- 2007년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해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의료기관에 의한 전산시스템 입력 건강정보 건수는 2008년 1,081건, 2009년 14,00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입력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의료기관 및 정보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 정보입력이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임.
- 철분제 지원은 2009년에도 54.4%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07년 1억원 미만에서 2009년부터 80억원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대체적으로 100% 집행
-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철분제 제공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은 사업 취지와 효과성에 대해 의료기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 제공, 인공임신중절 예방,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가임기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모유수유클리닉 80개소 설치·운영,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및 악영향에 대한 국민인지도 86.7%,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 3,963건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는(예산 16.9억원 대부분 집행)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유수유클리닉을 2009년 85개소, 2010년 80개소를 설치·운영하였음.
  - UCC 공모 및 우수작품 극장·지하철 광고, 전국 대학생 생명사랑서포터즈 선발·운영, 생명포럼 개최, 상담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및 악영향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2009년 80.8%, 2010년 86.7%로 높아졌음.
  -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직장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역요원 파견 등을 포함한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는 2010년에 3,963건으로 나타남.
  - 생식보건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77.0%에서 2009년 9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청각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실시 비율 99.9%, 의료비 등 지원 수혜 선천성대사이상아와 미숙아 약 12,000명, 청각선별검사 81.0%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는(297.3억원 전액 집행)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사업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2006~2008년 90% 이상에서 2009년 72.3%로 낮아졌으나 2010년에 99.9%로 대상을 거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비 등 지원 수혜 선천성대사이상아와 미숙아는 2006년 9,490명, 2007년 12,648명, 2008년 12,547명, 2009년 약 9,700명, 2010년 약 12,000명으로 2009년(80.8%)을 제외하곤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 차상위가정의 신생아 8,811명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시범지역에서 신생아 난청 검사율은 117%에 이르렀음. 전국적으로 확대한 직후인 2009년에는 홍보 부족과 대상자 발굴 곤란으로 인해 검사율이 36.9%로 저조(목표 달성률 52.7%)하였으나, 2010년에는 81.0%로 급격하게 높아져 당초 목표를 115.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는 2006년 145개소, 2007년 162개소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 영유아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에서는 만6세 미만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임)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
- 임신부 및 영유아 수검인원이 2006년 123,001명, 2007년 173,72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93만명, 2010년 135만건이 실시되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11억원 정도이며 전액 집행).

#### □ 영양플러스 사업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사업 참여 전·후의 빈혈 유병률은 65% 감소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예산 379.9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도 사업 참여 전·후의 빈혈 유병률은 57.7%에서 31%로 감소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예산 314억원 전액 집행).
- 사업수혜 대상자 수가 2006년 6,908명에서 2008년 46,047명으로 증가하였음.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와 관련된 인력·시설·장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대학병원을 지역센터사업자로 선정하여 병상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 거점기관을 육성하여 신생아 환자 가정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30개 병상을 확충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예산 54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8년 국립대병원에 병상 30개, 2009년에 지방대병원에 병상 20개 등을 확충하여 목표달성률이 높아졌음(2008년은 60%였으나 2009~2010년 간 100%)

□ 난임부부 지원확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난임부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임신성공률이 31.3%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예산 552.7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게 체외수정시술비의 50% (150만원, 기초수급자 270만원)를 2회까지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게 체외수정시술비의 50%(150만원, 기초수급자 270만원)를 3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50만원 범위로 3회까지 지원하였음.

- 총 지원건수가 2006년 19,137건에서 2008년 13,26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9년 17,238건, 2010년 56,658건(인공수정 포함)으로 증가하였음. 이 중 임신성공률은 1차 기본계획 기간 내내 31%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 산모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62,491명이 수혜를 받아 만족도가 79.4점으로 목표를 거의 달성(예산 371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원 수혜자수는 2006년 약 1만명에서 2010년 6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2008년 70.6점에서 2010년 79.4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 질병관리본부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한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이상 달성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건수가 133만건으로 목표를 27.5%만을 달성(예산 904억원 중 55.5%만 집행)하여 사업의 성과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까지 사업지침 개정·보급, 예방접종수가 책정·고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시행 등을 완료

하였으나, 병·의원 집중비용 지원건수는 2009년 81만건, 2010년 133만건으로 당초목표를 14.8%와 27.5%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이유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30% 수준만 지원하여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외에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 시 보험급여 확대’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 개정으로 완료된 바 있음.

〈표 2-17〉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전산시스템 의료기관입력 건강정보건수(건)	해당없음	연구용역 실시	1,081	14,000	
	철분제 지원율(%)				54.4	51.1
	목표달성률(%)		100.0	5.4	70.0 136.0	127.8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sup>1)</sup>	모유수유클리닉 설치개소			117	85	80
	모유수유실 설치지원건수	15	102	166		
	인공임신중절 불법성 및 악영향에 대한 국민인지도		인지도조사	70.0	80.8	86.7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건)					3,963
	생식보건프로그램만족도(%)		77	94.7	96.0	
	목표달성률(%)	75.0	340.0 100.0	234.0 332.0 116.7	106.3	114.3 120.4 158.5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율	96	91	95.2	72.3	99.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명)	9,490	12,648	12,547	97백명	12천명
	신생아 난청 검사율(%)		8,811명	117.0	36.9	81.0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 운영보건의(개소)	145	162			
		100.0 118.6	92.9 122.4 70.2	97.1 125.5 130.0	75.3 80.8 52.7	102.7 109.1 115.7
	목표달성률(%)	100.0	100.0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건수 ('06~'07년은 임신부 포함)	123,001	173,726	-	93만명	135만건
	목표달성률(%)	175.7	119.6		132.9	145.2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빈혈유병률 감소 ('06~'07년 빈혈율)	29.9%	29.6%	47.8%감소	46.4%감소	65%감소
	사업수혜 대상자	6,908명	11,162명	46,047명		
	평균영양섭취적정도		17.6%향상	15.8%향상		
	영양지식		19.5%향상			
	목표달성률(%)	100.3 117.1	101.4 159.5 176.0 195.0	478.0 139.5 158.0	463.0	650.0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설치 병상수			30병상	20병상	30병상
	목표달성률(%)			60.0	100.0	100.0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신생아중환자실 이용 보험급여확대	건강보험급여 기준확대	-	-	-	개정완료	-
	목표달성률(%)				100.0	
난임시술 지원확대	체외수정 인공수정	19,137	14,337	13,269	17,238	56,658
	지원건수대비 임신건수*	31.1	31.0	32.9	31.0	31.3
	*목표달성률(%)		105.8	99.4	101.6	102.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만족도(점)			70.6	75.7	79.4
	수혜자수(명)	10,464	47,193	62,859	53,401	62,491
	목표달성률(%)	148.4	128.0	94.1	100.9 91.0	99.3 112.1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민간병의원까지 확대	사업지침 개정 및 보급		고시제정	지침 제작	완료	완료
	예방접종수가 책정 · 고시		수가비용상환 기준검토	수가비용상환 기준검토	완료	완료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교육실시, 교구제작	교육실시, 자료개발	완료	완료
	접종비용 지원 건수				81만	133.3만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8	27.5

주: 1) 2006~2008년에는 ‘여성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모유수유 지원확대’, ‘부적절한 인공임신예방으로 모성 건강 보호’ 세 가지 과제로 진행되다 2009년에 과제가 통합되었음.

〈표 2-18〉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최종예산(억원)		1.0	39.4	89.4	81.6
	예산집행률(%)		103.1	96.4	100.0	100.0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최종예산(억원)	5.4	3.7	4.7	14	16.9
	예산집행률(%)	98.1	97.3	100.0	100.0	99.4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최종예산(억원)	291.4	303.2	241.9	115.3	297.3
	예산집행률(%)	90.7	90.9	100.0	100.0	100.0
영유아 건강검진	최종예산(억원)				11	10.7
	예산집행률(%)				100.0	100.0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최종예산(억원)	37	50	216	314	379.9
	예산집행률(%)	100.0	100.0	96.3	100.0	98.8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최종예산(억원)			100	30	54
	예산집행률(%)			45.0	100.0	100.0
난임시술 지원확대 (불임부부 지원확대)	최종예산(억원)	390	281	257	121.3	552.7
	예산집행률(%)	69.0	100.0	91.8	99.8	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최종예산(억원)	52	220	356.9	340	371
	예산집행률(%)	100.0	100.0	99.9	91.1	100.0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병의원 확대	최종예산(억원)	368	393.6	395.3	725	904
	예산집행률(%)	96.5	97.8	98.8	99.6	55.5

□ 이상 저출산분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9〉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b>1.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b>					
<b>1-1. 신혼부부 출발지원</b>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유자녀 가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b>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b>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운영				○
	•보육보포탈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b>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b>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보육 시설평가제도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당 구축 사업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b>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b>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산전검사료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양플러스 사업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난임시술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병·의원까지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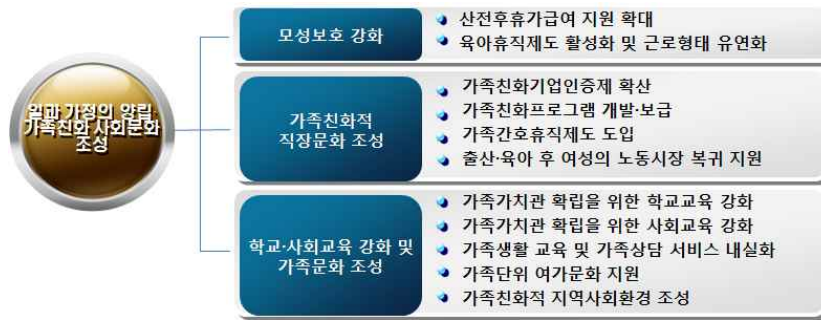
〈표 2-20〉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운영				○	
	·보육보포탈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보육 시설평가제도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산전검사료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양플러스 사업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난임시술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병·의원까지 확대		○			

##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 동 중영역은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등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구성



### 2-1. 모성보호 강화

#### ①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중 사용자부담분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산전후휴가급여자 수가 75,74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휴가사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비율이 75.8%로 목표달성(94.8%)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926억원 전액 집행).
  - 종전 산전후휴가급여로 최초 60일분은 사업주,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sup>4)</sup>에 한하여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

9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음. 2009년에 대기업 사용자의 부담(60일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회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한 재원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획하였음.

- 그 결과 산전후휴가급여자는 2006년 48,972명, 2007년 58,368명, 2008년 68,526명, 2009년 70,560명, 2010년 75,74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휴가사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비율이 2007년 77.4%, 2008년 82.2%, 2009년 72.0%, 2010년 75.8%로 지난 2년간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지원 확대	휴가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99.7 <sup>1)</sup>	77.4	82.2	72.0	75.8
	목표달성률(%)	110.8	99.2	102.8	90.0	94.8
	최종예산(억원)	911.7	1,361	1,673	1,978	1,926
	예산집행률(%)	99.7	99.5	99.6	82.1	100

주 : 1) 2006년 성과지표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률 [(지급액/지급예산액)×100]’임.

## 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 육아휴직 활성화

- 노동부는 육아휴직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육아휴직자수 및 육아휴직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육아휴직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65.5%로 당초목표의 93.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785억원 거의 집행).
- 2006년 만 1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간 동안 월 40만원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급여수준을 월

하여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별로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은 100인 이하 등이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상을 만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음. 2009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happy mail 시스템” 운영,<sup>5)</sup>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육아휴직자수는 2006년 13,670명, 2007년 21,185명, 2008년 29,145명, 2009년 35,400명, 2010년 41,733명으로 증가하여, 산전후휴가사용자 중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6년 27.9%, 2007년 36.3%, 2008년 42.5%, 2009년 50.2%, 2010년 55.1%로 높아졌음.
-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자수 증가에 따라 2006년 472억원에서 2010년 1,7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예산집행률 91.5%)을 제외하면 예산 대부분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육아휴직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은 2006년 70.3%, 2007년 75.3%, 2008년 84.6%로 높아지다가 2009년 62.5%, 2010년 65.5%로 낮아지는 등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의 성과가 아직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육아휴직후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대체수준 제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등 고용안정성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근로형태 유연화

- 노동부는 근로형태를 유연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시간제근무운영기관 20개소, 컨설팅 실시 사업장 50개소, 유연근무제 확산 워크숍 13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예산 12.5억원 96% 집행)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2007년에 위탁교육, 지방관서 교육, 간담회, 매뉴얼 사례집 제

5) 이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체계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 방법, 권리침해 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하는 제도임.

작 배포, 우수사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음.

- 2008~2009년에는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20인 미만 기업과 지방관서 대상 교육 실시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일·가정양립형 단시간근로모형 시범사업으로서 3개 사업장(청주의료원, 인천한림병원, 불빅)에 대한 단시간근로모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표 2-2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복귀후 고용유지율(%)	70.3	75.3	84.6	62.5	65.5
	목표달성률(%)	100	107	120	88.7	93.6
근로형태 유연화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모형시범사업 실시				3개 사업장	
	시간제근무운영기관 수					20개소
	컨설팅 실시 사업장수					50개소
	주40시간제 도입 등 교육 실시(회, 명)	위탁50회, 지방관서 449회, 간담회 606회	위탁64회, 지방관서 279회, 간담회 147회	39,119명	기업 6,610명, 지방관서 8,154명	
	홍보자료 제작·배포(부)	매뉴얼·사례집 제작·배포, 우수사례 연구용역	사례조사 연구용역	20,000부	90,000부	
	유연근무제 확산 워크숍 개최					13회
	목표달성률(%)	100.0	100.0	978.0 133.3	100.0 600.0 165.3	100.0 100.0 100.0

주 : 직장복귀 후 고용유지율=6개월 후 고용유지 근로자수/육아휴직근로자수×100(%)

〈표 2-23〉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휴직 활성화	최종예산(억원)	472	740	1,169	1,618	1,785
	예산집행률(%)	93.9	99.1	99.9	91.5	99.8
근로형태 유연화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4.7	4.7	12.5
	예산집행률(%)			100.0	95.7	96.0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①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여성가족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7인) 및 민간 전문가(7인)를 위원으로 구성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가족친화인증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가족친화인증운영위원회는 2008년 이래 매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심사 등 활동을 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음(비예산 사업).

####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우수기업에 대한 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31개 기업을 인증하여(예산 5.2억 원 전액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제1차 기본계획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24〉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성	추진실적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결과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결과심의
	목표달성률(%)				100.0	100.0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	가족친화경영 선언식, 협약식	관련법 제정	14	20	31
	목표달성률(%)			140.0	124.0	134.8
	최종예산(억원)		0.5	0.6	0.7	5.2 <sup>1)</sup>
	예산집행률(%)		100.0	66.7	100.0	100.0

주: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지수측정 등) 예산 통합

2)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구성'은 비예산사업

- 2006년에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을 위해 가족친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족친화경영 선언식과 협약식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인증기준과 인증마크를 개발하여 매년 인증기업을 지원하였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 2009년 20개, 2010년 3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②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 가족친화지수 측정

- 여성가족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sup>6)</sup> 측정을 통하여 가족친화 기업경영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가족친화지수가 51.6점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제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에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기업, 대학, 정부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2007년 41점, 2008년 44점, 2009년 49.2점, 2010년 51.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가족친화경영 및 인증제에 대한 교육(3,900명 수료), 가족친화컨설팅(15개 기업) 등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매년 가족친화 교육컨텐츠 개발, 가족친화교육 전문강사

6) 가족친화지수는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탄력적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도입 확산 정도를 측정한 것임.

양성 및 직장 내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부터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도 지원하였음.

- 2009년에도 가족친화경영 온라인직장교육(20차시 900명), 기업CEO 대상 가족친화경영교육(300명), 기업CEO 및 임직원 대상 전국 순회 직장교육(20회, 1,050명) 등을 추진하였음.

〈표 2-25〉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친화 지수 측정	가족친화지수(점)	37	41	44	49.2	51.6
	목표달성률(%)	100.0	102.5	102.3	109.3	100.0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직장교육	114회	160회	100회	1,950명	3,900명
	CEO 대상 교육			4회		
	컨설팅 기업수		10개	3개		15개
	목표달성률(%)	114.0	106.7	100.0	108.3	156.0
			100.0	58.8		

〈표 2-26〉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친화 지수 측정	최종예산(억원)	0.3	1.3	1.3	0.4	주 <sup>1)</sup>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가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최종예산(억원)	0.3	0.8	0.9	0.5	주 <sup>1)</sup>
	예산집행률(%)	100	100	81.7	100	

주: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 통합

### ③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노동부는 2009년부터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간호휴직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가족간호휴직제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간호휴직제도 홍보 책자 1만부를 제작·배포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는 가족돌봄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1개월~1년

이내의 무급가족간호휴직제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표 2-27〉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비예산 사업)	성과지표 및 실적	제도설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족간호휴직 제도 홍보 책자 제작 배포 1만부
	목표달성률(%)	100.0	100.0

#### 4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동부는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sup>7)</sup>을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복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지원대상자 채용 후 12개월 시점 고용증가율이 13%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7년 4월에 한시제도(2007~2009)로서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 2008년에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회사를 그만 둔지 5년 이내 취업’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9년에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장려금은 목표인원의 20%(예산도 20%만 집행)에게만 지원되어 당초목표의 25%만을 달성하는데 그쳤으며, 주된 이유로는 경

7) 노동계는 가족휴직제 법정 의무화, 경영계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제도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하였음. 이에 담당부처에서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므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주력하는 등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8) 장려금은 1인 기준으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급함.

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사업장에서의 신규채용 부진과 여성취업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2월 8일에 법을 개정하여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였으며, 여기에는 대상자 요건으로서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하여 이직사유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혹은 임신(16주 이상) 중인 계약직 및 파견직 여성근로자를 계약종료 즉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sup>9)</sup>을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에 기여코자 하였음.
- 2010년에 지원대상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근로자로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418명에게 1,233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94.9%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 34주 이상의 계약직 및 파견직 여성근로자를 유기계약으로 계속 고용 시 6개월 동안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동안 월 60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7년에 지원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 무기계약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음(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2009년에는 지원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홍보책자 배포, 라디오·잡지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1차 기본계획 기간에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전업주부 노

9) 지원금으로 유기계약 시, 6월간 월 4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 시, 6월간 월 60만원 지원

동시장 복귀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들 사업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훈련사업과 대상이 중복되어 2009년에 종결되었음.
- ‘고용지원센터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사업(비예산)은 2010년부터 고용센터 업무분장 재조정 시 전담상담원을 폐지하여 중단하였음.

〈표 2-28〉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성과지표 및 실적	제도도입 추진	제도 도입	목표달성률 179%	목표달성률 20%	13% <sup>1)</sup>
	목표달성률(%)	100.0	100.0	223.8	25.0	65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율 <sup>2)</sup>	100	100	106	98.6	94.9
	목표달성률(%)	125.0	125.0	132.5	123.3	118.6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목표달성률 <sup>3)</sup>	114.8	110.0	100.0	141.4	
	목표달성률(%)	127.6	122.2	125.0	176.8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강화	상담원제도운영				65명	
	목표달성률(%)				100.0	

주 : 1) 지원대상자 채용후 12개월시점 고용증가율

2) 6개월 후 고용유지율 = 6월후 고용유지자수/계속고용근로자수×100

3) 지원목표달성률 = 지원인원수/목표인원수×100

〈표 2-29〉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0.5	2	5	5
	예산집행률(%)		100.0	100.0	20.0	2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2.5	4	9	12.64
	예산집행률(%)		68.0	100.0	66.7	97.5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최종예산(억원)	7	7	8	4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17.5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및 양성평등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도덕과·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중 ‘저출산·고령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발행·보급하고, 차년도 사용될 일부 교과서(도덕, 사회, 기술·가정 등) 내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2009년에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포함함으로써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 힘쓰도록 조치하였음. 도덕과, 사회과,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표 2-30〉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도덕·사회·실과(기술·가정) 교과서 수정·보완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수정·보완	교과서 수정·보완	교육과정 개정방향 설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2.2	0.6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100.0			

## ②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남녀 차별적 의식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공무원·사회선도층대상 교육 실시(4개 분야 7,765명),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성평등의식 교육기회를 제공(40,561

명 대상)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도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6,884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수자들의 교육만족도가 90점으로 나타남.
  - 사회교육운영자 및 종사자, 사회교육강사(337명), 교도소, 군경 등 대상 교육 실시, 국제결혼 사전교육 전문가(37명) 양성, 시·도의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총괄 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35개 과목) 및 교육(35,214명) 실시, 원격교육연수원 구축(진도율 98.0%) 등을 추진하였음.

〈표 2-3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 개선운동 강화)	집합교육 수료자 인원(명)	6,844	7,765
	교육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	72.5%	
	교육만족도	90점	
	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 인원(명)		40,561
	목표달성률(%)	112.7 118.3 101.1	104.9 202.8
	최종예산(억원)	43.9	37.6
	예산집행률(%)	100.0	100.0

### ③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여성가족부는 가족관련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 센터 내 가족 상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가족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32만명 대상 가족교육, 17만명 대상 가족상담<sup>10)</sup>을 실시(비예산사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매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가족상담 및 교육프

10) 주요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예비부부교육·상담, 부부교육·상담, 부모교육·상담, 이혼전·후 상담, 군가족교육상담 등을 포함함.

로그래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2009년에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여 22만명에게 가족교육, 11만명에게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가족유형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38개소로 확충하고, 센터이용자수가 110만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7년 65개소, 2008년 82개소, 2009년 97개소, 2010년 138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센터이용자수는 2006년 31만명에서 2010년 110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예산은 2006년 36억원에서 2010년 15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2-32〉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교육 이용자수(만명)				22	32
	가족상담 이용자수(만명)				11	17
	목표달성률(%)				147.0 110.0	107.9 116.1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센터 이용자 수(만명)	31	45	48	70	110
	센터 개소수(개소)				97	138
	센터이용자 만족도(%)	88	86.6	90		
	목표달성률(%)	206.7 117.3	227.4 115.5	108.0 101.1	102.1 145.8	122.2 100.0
	최종예산(억원)	36	64.6	79.5	114	158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98.7

4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을 이용한 복합 문화 공간 마련, 국민 여가를 위한 다목적 캠핑장(오토캠핑장 등) 확장 및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등 체험위주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여행 및 여가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예산 365억원 전액을 집행하여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109개 사찰, 200,000명 참여), 종교시설의 복합문화공간 확산 및 지역주민 연계 문화축제 지원(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문화공간 활용, 수도원체험 5회, 1,107명, 교회, 성당 활용 문화행사 9개 프로그램), 서원·향교활용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청소년 82,364명,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연수 10,950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확충 지원, 다목적캠핑장 조성(10개소),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정비(2개소),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확충 지원(45개소) 등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매년 종교시설(템플스테이, 수도원 체험 등),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확충하는 등 가족단위 여가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음.
- 2009년에는 100개 사찰에 대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136,100명 참가), 5개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11,886명),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5,400명), 총 25회 문화축제 개최, 수도원 체험(3회, 375명), 교회·성당 활용 문화행사 개최(21개 프로그램, 22,556명), 다목적캠핑장 조성(12개소),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정비(4개소),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확충 지원(38개소) 등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여성가족부는 다채로운 가족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실시 등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갈등의 적극적 예방, 가족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패밀리데이<sup>11)</sup> 확산 추진(국민참여 촉진 및 캠페인 확대 실시, 패밀리데이 한글이름 공모전, 사물놀이 한울림 등 공헌기업 독려), 가족 이웃·지역이 함께 하는 가족문화 공모사업(지역사회 양육친화적

11)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정시퇴근, 학교당일 야간학습 중지 등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

가족문화 조성, 가족커뮤니티와 가족품앗이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사업) 추진, 부부의 날 기념 대한민국 부부축제 지원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도 패밀리데이, 이웃사촌 한가족 선포식 등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에 1,831명이 참여하였고,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민간단체 공모사업(7기관) 및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음.

〈표 2-33〉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 인프라 확충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템플스테이 운영실적	50	72	87	100	109
	사찰수(개), 참가인원(명)	62,970	81,652	108,000	136,100	200,000
	중교시설 전통예절강좌 참여(명)	15,000	20,134	15,500	11,886	82,364
	선비문화체험 참여(명)	900	2,880	3,000	5,400	10,950
	문화축제 지원(회)	10	29	13	25	25
	국민여가캠프장 조성 개소수	8개소	4개소	19개소	16개소	16개소
	이용인원(명)				227,176	257,226
	전통한옥숙박체험시설 지원 개소수	30개소	24개소	35개소	38개소	45개소
	목표달성률(%)	·102.0	·144.0	·124.3	·105.3	·100.0
		114.5	148.5	189.5	94.0	117.6
		·100.0	·134.2	·103.3	·79.2	·549.1
		100.0	320.0	230.8	415.4	842.3
		100.0	290.0	130.0	125.0	125.0
		·26.7	·133.3	·126.7	·123.1	·160.0
					300.1	102.9
		·40.0	·150.0	·116.7	·108.6	·128.6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족문화조성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4,670			1,831	4,544
	가족문화조성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3.2	88.0		
	목표달성률(%)	116.8	110.9	110.0	366.2	649.1

〈표 2-34〉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최종예산(억원)	105	205	385	370.2	365
	예산집행률(%)	97.1	100.0	100.0	100.0	100.0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최종예산(억원)	3.7	3.0	4.8	1.2	0.9
	예산집행률(%)	100.0	100.0	87.5	100.0	100.0

## 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 보건복지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유형과 연령별·유형별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고려하여 소통과 돌봄의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009년도 인증기업 우수사례집 배포, 인증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일간지와 월간지에 인증신청 홍보, 전국무료전광판 동영상 홍보, 인증기업 홍보, 가족친화정책 홍보컨설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에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추진
  - 2007년에 가족친화형마을 시범사업(3마을) 실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지원 법적근거 마련,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개발·측정 등
  - 2008년에 행정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영월, 논산, 장흥 3개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따라 대신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2009년에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2개 마을 조성)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다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18개 시·군·구 대상),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음.

〈표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 추진	가족친화마을 3개 조성		가족친화마을 조성못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목표달성률(%)	-	100.0		0.0	100.0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0.7	1.4
	예산집행률(%)				100.0	92.9

□ 이상 저출산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6〉 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및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
	• 근로형태 유연화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 캠페인 및 가족친화 마을 조성				○

〈표 2-37〉 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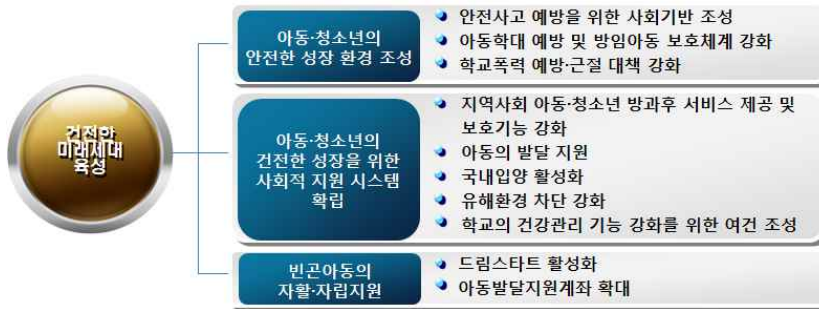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활성화				○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형태 유연화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 마을 조성				○	



###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빈곤 아동의 자활·자립지원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구성



####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나 추락, 익사, 가정내 안전사고 중심으로 종합적인 아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아동안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까지 성과지표(아동 안전사고사망률)는 당초목표를 달성(비예산사업)하였으나,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sup>12)</sup>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조직 통합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09년에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설정 및 대책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아동·청소년기본법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달성 및 대책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다가, 아동·청소년 통합 논의가 중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sup>13)</sup>을 마련하였음.

#### □ 아동안전지킴이

-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성폭행 등 범죄 발생 다발지역 및 아동 운집 지역 등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퇴직 경찰 및 경비분야 등 경력 노인을 배치하여 순찰하게 함으로써 민·관협력 지역단위의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아동안전지킴이 실적이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학로나 놀이터 주변 등을 순찰하도록 하여 범인 검거 10건을 지원하고,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등 범죄 23,130건을 예방 및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0년에는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하였으나 범인 검거 17건을 지원하고,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등 범죄 17,496건을 예방 및 보호하여 전체적으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2010년 2년차가 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범죄 자체가 줄었기

12) 2003년 5월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제1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음.

13) 아동학대 예방 홍보교육, 보육시설아동 안전, 자살안전사고 방지(보건복지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교통안전(행정안전부), 유원시설·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문화관광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과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지원 및 아동 성폭력 예방(여성가족부), 아동안전지킴이(보건복지부, 경찰청), 범국민 생활안전교육 활성화, 물놀이화재 안전(소방방재청)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았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이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보건복지부는 교통안전, 추락, 익사 사고 등을 포함한 주요 안전 사고 영역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동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유아 대상 이동안전꾸러미 배포 및 홍보, 교육 등 가정 내 이동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동안전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강사용 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제작(200부), 강사양성 177명(안전교육 57명, 응급처치 120명), 영·유아 부모대상 1,108개소(보육시설 967, 산후조리원·보건소 90, 기타 일반 51개소) 교육, 교육이수자 대상 가정안전수첩 및 안전꾸러미 배포(3만개), 가정안전사고예방 가이드 제작·배포(1만부), 교육 미참여 보육시설을 위한 시설장 및 교사 교육(3회, 520명), 뽕뽕이와 안전안전 DVD 배포(전국 가정보육시설 6,200개소), 홍보(교육관련 보도자료, 지자체 등에 교육안내문 및 홍보포스터 배포,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등)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도 가정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E-Book, 온라인 동영상 강좌 개발, 가정안전수첩 및 이동안전꾸러미 제작·배포(2,800세트), 어린이집 부모 대상 안전교육(서울, 부산, 인천 3개 지역 28호, 1,856명), 어린이안전 홍보 DVD “뽕뽕이와 안전안전” 제작·배포(15천개), 인터넷 어린이 안전학교 사이트에 구축된 15개 어린이 안전교실에서 사이버 교육 실시, 수도권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표지판 설치(16개소), OECD 등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14지표 영역, 25세부지표) 등을 추진하였음.

〈표 2-3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제2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08까지 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추진)	안전사고사망률 <sup>1)</sup>	7.95	7.2	6.3	5.96	5.38
	목표달성률(%)	89.3	102.8	-	104.0	104.1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실적(건)				23,140	17,513
	목표달성률(%)				115.7	33.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안전사고사망률 <sup>1)</sup>	7.95	7.20	6.30	91.8점 <sup>2)</sup>	5.38
	목표달성률(%)	89.3	102.8	-	110.6	104.1

주: 1)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 14세이하인구 × 10만명

2)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만족도

〈표 2-3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동안전지킴이	최종예산(억원)				32	55
	예산집행률(%)				100.0	99.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기반 구축	최종예산(억원)	1.0	1.9	2.1	2.7	10
	예산집행률(%)	100.0	89.5	99.5	100.0	100.0

## ②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 및 치료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기능 수행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룹홈 운영,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원가정보호가 기능하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5,000건 이상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학대아동 보호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목표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인데, 학대아동 보호건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실적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0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음(예산 5.9억원 전액 집행).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적극적 보호지원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및 포털사이트 ‘다음 키즈짱’ 게재, 홍보대사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위촉),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학대피해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성학대행위자, 알콜·약물남용자, 가해부모)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제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 추진, 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성학대전문상담원·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 운영상담원 등 교육실시
- 2009년에도 학대행위자 특성별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개설·운영(11월 말기준 4,350명 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확대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확산시킴으로써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수혜자수가 21,357명이며 이들의 만족도가 78점으로 목표를 초과달성(예산 114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지난 2년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초·중·고교 ‘성인지적 인권교육’ 정착·활성

화, 성폭력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 대상 확대 및 치료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시범운영,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45명),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치유·교정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2개소)
-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교사 대상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초·중·고교 ‘성인지적 인권교육’ 정착·활성화 : 학교폭력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성인지적 인권교육’ 포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F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초·중·고교용 교안·교재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기본과정 31명, 전문과정 31명), 통합인권교육 교안·교재 제작
- 성폭력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 대상 확대 및 치료전문가 양성 :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학교 내 성폭력 가해청소년까지 확대 실시 (293명, 32개 WEE 센터 지정확대), 성폭력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양성(218명), 성폭력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개발
- 2009년에도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 확충,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수혜자가 총 11,522명으로 나타남. 이 외에 관계부처·당정 합동으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지표를 개발하였음.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보건복지부는 교육·홍보, 장기실종아동 가족 지원, 실종아동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로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가족복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초등학교 저학년 유괴예방교육 체험존 교육 이수자 수가 2,875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이동식 유괴예방체험존 셋트를 제작, 초등학교의 강당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유인, 유괴상황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실종 예방지침을 체득(초등학교 저학년, 18개교 2,875명)
- 2009년에도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동 구역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 경찰청 실종신고DB와 실종아동 전문기관 무연고 실종아동DB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실종아동 조기발견 저해요인 및 장기실종아동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어린이재단 간 MOU 체결을 통한 아동실종예방 홍보물 및 장기실종아동 사진 방영 등을 추진하였음.

〈표 2-40〉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방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학대아동 보호건수(건)	5,202	5,581	5,578	5,685	5,685
	목표달성률(%)	102.1	99.6	90.3	83.7	97.1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아동성폭력상담센터·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수(명)				11,522	21,357
	수혜자 만족도					78점
	목표달성률(%)				103.3	185.7 111.4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초등학교저학년 유괴예방교육 체험존 교육이수자수(명)					2,875
	실종예방교육이수자수(명)				99,700	
	실종예방교육만족도(점)				98.5	
	보호아동 DB구축건수(건)	2,082				
	실종아동등 가정복귀율(%)		99.2	99.6		
	목표달성률(%)	161.0	99.9	100.3	169.0 123.1	100.0

〈표 2-41〉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최종예산(억원)	8.0	3.9	5.0	5.2	5.9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최종예산(억원)				95	114
	예산집행률(%)				100.0	100.0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최종예산(억원)	8.0	8.0	9.3	13.7	0.9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③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예방근절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학교폭력피해 신고 및 상담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학생·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및 가해자 선도·보호를 위한 다중의 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실시학교 비율이 70%(예산 498억원 전액 집행)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 수립 및 추진, 학교폭력 예방,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다중의 안전망(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1차망, 단위학교, Wee클래스 2,530교, 2차망, 지역교육청, Wee센터 110개소, 3차망, 시·도교육청, Wee스쿨 5교),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학교문화선도학교 150교 선정·운영) 등
    - 2009년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사업 추진, 학교폭력 위기진단 체크리스트, 학교부적응 지표, 학교폭력 신고 가이드라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보급,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표 2-42〉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학교폭력예방교육 4시간 이상 실시학교 비율(%)			71.2	68.4	70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명)	6,267	11,207			
	목표달성률(%)	102.1	189.3	101.7	91.2	143.0
	최종예산(억원)	2.6	2.4	246.0	224.5	498.1
	예산집행률(%)	96.2	95.8	100.0	141.2	100.0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 방과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 만족도가 83.4점, 학부모 만족도 83.0점(예산 306억원 전액 집행)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방과후서비스 대상 발굴 및 지원(전국 161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6.7천명 수혜),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한 운영 질 제고, 공부방 제공, 지역연계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 지원(청소년공부방이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공동체 참여 공간의 역할 수행, 다양한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형성 지원, 학습지원, 특기적성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도모)
- 2009년에도 방과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 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178개소)와 청소년공부방(355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17천여명이 수혜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의 학교,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등 청소년 관련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및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수혜자 수가 128,426명(예산 151억원 전액 집행)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0년에 CYS-Net 구축 확대 및 지원 수혜자 증가(16개 시도, 150개 시·군·구로 확대 구축, 수혜인원 128,426명), CYS-Net 필수연계 기관 5,851개소 지정·운영, 민간 청소년 관련 자원을 활용한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하여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인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등 학습 지도 프로그램인 해밀프로그램 운영 등
  - 2009년에는 CYS-Net 사업지역을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81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CYS-Net을 통해 지원한 청소년이 100,113명으로 나타남.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
-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통해 발견된 위기청소년 중 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의 집, 학교, 친구 등 주변환경에 찾아가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지, 필요기관으로 연계서비스 제공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의 상황과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수혜 청소년이 24,515명(예산 100억원 전액 집행)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수혜 청소년은 2007년 8,434명에서 2010년 24,51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는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 판정 후 청소년동반자 880명의 개입을 통해 정서적 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음.

〈표 2-43〉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방과후아카데미 참여학생수(명)	4,220		7,770	17,000 <sup>1)</sup>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만족도(점)	82.3	82	82.7		83.4
	방과후아카데미 학부모만족도(점)					83.0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회)	7,509		15,41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개소수	250				
	청소년공부방 만족도			미실시		
	청소년공부방 연이용자수(천명)			2,454		
	목표달성률(%)	100.5 100.4 500.6 104.2	100.0	92.5 98.5 100.1 0.0 98.8	113.3	100.2 100.0
시도·시군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CYS-Net 지원 수혜자 수(명)			79,933	100,113	128,426
	목표달성률(%)			133.2	111.2	107.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혜청소년수(명)		8,434	14,510	17,439	24,515
	수혜자의 계획된 합의종결 비율(% <sup>2)</sup> )			86.8		
	목표달성률(%)		105.4	234.0 133.5	139.5	145.9

주: 1)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수혜자 수

2) 수혜자의 계획된 합의종결 비율 = 계획된 합의종결수 ÷ 수혜 대상 청소년수 × 100

〈표 2-4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최종예산(억원)	169	271	348.2	324	306
	예산집행률(%)	100.0	99.4	97.2	99.7	100.0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최종예산(억원)			111	127	151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업	최종예산(억원)		52	64	55	100
	예산집행률(%)		96.2	100.0	100.0	100.0

## ② 아동의 발달 지원

###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2~6세 아동에게 “독서지도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 제공(대여), 부모 독서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0개월 동안(저소득층은 10개월 추가) 20천원(저소득층 27천원)을 지원함으로써(본인부담 월 20~28천원) 학업성취도 제고 및 미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1만9천명 영유아에 발달 초기 아동 및 부모대상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 표현, 읽고 쓰기 등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 향상에 기여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68억원의 97%를 집행).
- 이외에도 2009년에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사업이 아동건강관리사업개선계획 수립으로 종료되었으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아동 체험발달서비스’ 사업을 각각에 108개 시·군·구가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사업은 2010년에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2-45〉 아동의 발달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서비스 이용자수(명)	219,112	219,000
	목표달성률(%)	88.3	116.2
	최종예산(억원)	583 <sup>1)</sup>	568
	예산집행률(%)	85.9	97.0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아동건강관리 사업 개선계획 수립여부	수립	
	목표달성률(%)	100.0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시·군·구 수	108	
	목표달성률(%)	108.0	
아동 체험발달서비스	시행 시·군·구 수	108	
	목표달성률(%)	108.0	

주: 1)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아동 건강발달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 체험발달 서비스’ 예산 통합

### ③ 국내입양 활성화

####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수수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입양수수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비율이 58.2%(예산 138.7억원 전액 집행)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입양비율이 2006년 41.2%에서 2010년 58.2%로 증가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입양숙려제, 양부모 자격요건 강화 등 입양특례법을 정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안) 마련(비예산사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 입양인 뿌리찾기 원스톱서비스 제공, 입양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입양정보원 설립,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등을 실시하였음.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보건복지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나 학교교육 등을 통해 비밀입양이나 혈액형, 성별을 중시하는 국내입양 문화를 개선하여, 공개입양을 장려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6) 행사 개최를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입양부모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공개입양을 위한 입양교육, 입양 반편견 교육, 입양가족대회 등 개최, TV, 라디오, 지하철을 통한 입양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비율을 58.2%로 높이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도 입양부모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입양교육, 입양 반편견 교육, 입양가족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입양의날 및 입양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음.

〈표 2-46〉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국내입양비율(%)	41.2	52.3	51.0	53.9	58.2
	장애아동 국내입양율(%)		7.4			
	목표달성률(%)	95.8	121.6 274.1	108.5	107.8	116.4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법개정 절차 진행 정도 / 법령개정	법령 개정	법령 개정		TF팀구성, 공청회개최 등	개정안 마련
	목표달성률(%)	완료	100.0		100.0	100.0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사업 추진	국내입양비율(%)	41.2	52.3	51.0	53.9	58.2
	목표달성률(%)	95.8	121.6	108.5	107.8	116.4

〈표 2-47〉 국내입양 활성화 예산집행실적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최종예산(억원)	11	225	118	124	138.7
	예산집행률(%)	100.0	71.6	96.0	100.0	100.0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사업 추진	최종예산(억원)	1	0.9	0.9	1.7	1.5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4 유해환경 차단 강화

#####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모니터링 및 예방제도 개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및 사회적 관리강화 사업 추진 등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의 지원·공조를 통해 지역단위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신고·고발건수)이 567건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2008년 이래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은 2006년 4,011건에서 2010년 567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직접 신고 또는 고발보다 시정·권고 중심으로 활동을 함에 따라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 목표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2009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홍보 등 유해 약물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0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폭력성 심화에 따른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확대,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업주제도(전국 2,800개 업소), 학업중단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교육 실시(연간 1,000여명),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1학교 1한의원 연계), 학령 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인식 제고를 위한 키트형 교구 제작·배포(전국 8,000여개 유치원), 주류의 청소년 유해표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주류업계 및 주류업 단체) 등을 추진하였음.
-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8〉 유해환경 차단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신고·고발건수)	4,011	감시단 신규지정 25단체	830	730	567
	목표달성률(%)	100.3	500.0	18.9	73.3	73.9
	최종예산(억원)	3.0	3.0	7.7	7.0	6.4
	예산집행률(%)	100.0	33.3	97.4	100.0	98.4

## 수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학교흡연예방교육

- 보건복지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국 시·도 교육청 2,145개교에 학교별 흡연예방교육(교과목 시간 또는 재량활동·특별활동, 금연 동아리, 금연리더, 학생회 금연 활동, 포스터·글짓기·UCC·논술 대회, 인식조사, 금연캠프, 흡연예방 체험 학습,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교실 운영, 학부모교육 등),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학교(서울 500여명), 흡연예방교육 시범적용

학교 운영(8개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지난 2년간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5.2억원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16개 시·도 교육청의 3,283개교에 학교흡연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금연교육이나 금연캠프, 글짓기·포스터 등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였고,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제작하여 청소년 흡연율이 12.8%로 나타남.

〈표 2-49〉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학교흡연 예방교육	청소년 흡연율(%)	12.8	결과 미발표
	목표달성률(%)	134.4	
	최종예산(억원)	58.0	55.2
	예산집행률(%)	98.3	100.0

###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 ① 드림스타트 활성화

##### □ 드림스타트 사업

- 보건복지부는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집중 사례관리 및 보건·보육·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국 101개 사업지역(시·군·구)에서 31천명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예산 303억원 전액 집행)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만족도가 89.3%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시·군·구)이 2007년 16개에서 2008년 32개, 2009년 75개, 2010년 101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대상아동 수도 2009년 26천명에서 2010년 31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그간 사업실시 지역 및 서비스 수혜 아동 확대, 사업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등을 이루어 수혜대상자의 만족도가 2009년 아동



- 88.5%, 부모 95.8%, 2010년 아동 89.3%, 부모 97.4%로 증가하였음.
-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 저소득 이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역량 개발 지원, 빈곤의 대물림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sup>14)</sup>

〈표 2-50〉 드림스타트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 만족도(%)	83.0		88.5	89.3
	서비스 대상아동 수혜율(%)	100.0	100.0		
	목표달성률(%)	103.8		102.9	100.3
		111.1	111.1		
	최종예산(억원)	51	96	75	303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99.5

##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요보호아동이 보호자,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3만원 이내 같은 금액(1:1 매칭)으로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의 자립비용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요보호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통장 가입자수가 40,829명으로 증가하여 계좌발급 수가 36,469개(예산은 95억원 중 88.4% 집행)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국민 홍보, 후원자 개발, 아동의 자립심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통장 가입자수는 2009년 36,469명에서 2010년 40,829명으로 증가하였고, 월평균적립액은 28,184원에서 29,129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후원자수가 37,533명에서 56,588명으로 증가하여 후원금액도 15.5억원에서 22.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14) 효과로 2010년 아동 생활만족감 3.6점 증가, 사회성 2.6점 증가, 문제행동 1.9점 감소, 가족기능 2.5점 증가, 부모 양육스트레스 3.6점 감소

〈표 2-51〉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성과지표 및 실적	개설률 98.3%	저축률 91.0%	발급아동수 36,494	계좌발급수 36,469
	목표달성률(%)	140.4	107.1	110.6	108.9
	최종예산(억원)	64	98	66	95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88.4

주: 개설률=계좌개설아동수/지원대상아동수×100(%)

저축률=저축아동수/계좌개설아동수×100(%)

□ 이상 저출산분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2〉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 아동안전지킴이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흡연예방교육 (결과 미발표)				
3-3.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표 2-53〉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 아동안전지킴이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흡연예방교육				○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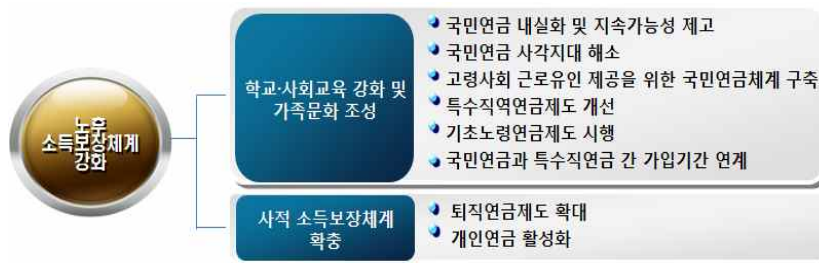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분야 정책의 기본목표는 노인들이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었음.
- 고령사회분야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4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음.

###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는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의 2개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4]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 ①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영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보건복지부는 정부 및 가입자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자율성·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익제고에 한계가 있는 현 기금운용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금운용위원회(금융투자전문가 7명)를 기금운용공사 내에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자금운용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심사,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비예산사업)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2009년 이래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도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임위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6회) 등을 추진하였음.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간의 합리적인 역할관계 정립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와 재정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2건을 검토하여(비예산사업)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 재정추계위원회 및 운영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2008년에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공청회 개최
- 2009년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선방안 2건(재정평가방안, 수행체계) 검토
- 2010년에는 국민연금 장기재정방식과 재정목표 세미나 개최, 국민연금 재정추계 수행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와 재정방식에 관한 연구 수행 등을 추진하였음.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항들을 추

진하고자 하였음.

- 국민연금이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적정화 등 제도 합리화를 모색함.
- 2010년에 자격, 징수, 급여분야 법령·지침에 관한 20건의 제도를 개선 하여(비예산사업)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 국민연금법 주요 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됨에 따라 2008년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1~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 2009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월 시행), 국민연금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격 논의, 재정계산제도 개선사항 2건 이상 검토 등
- 2010년에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농어업인 인정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1. 공포),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및 징수통합에 따른 시행령 개정(8.17. 공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의무 감경 및 징수통합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12.8. 공포) 등을 실시하였음.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이미 지 개선을 위하여 전략적·체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각종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도가 72.9점(비예산사업)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지난 2년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 조사 결과 국민연금 신뢰 14.4%, 불신 50.5%로 불신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민연금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 등 대책을 시행하였음.
- 2009년에 TV·라디오 1,357회, 신문 및 전문지 광고 68회, 인터넷 홍보 2,513건, 보도자료 배포·간담회 461회 등 언론매체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음.
- 2010년에는 제도 이해 증진 및 오해 해소를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를 위하여 현장 홍보(전국 9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195회 ‘내 연금 갖기’ 가두캠페인), 사이버 홍보(인터넷 이벤트 및 광고), 노후 설계서비스(CSA) 상담(총 4,256회)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4배가 증가하였음.

- 이외에도 1차 기본계획 기간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조정’을 실시하여 2009년 법령 통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표 2-54〉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법안 소위원회 심사				6회 심사	1회 논의
	목표달성률(%)				100.0	100.0
	제도개선 사항 검토				2건	2건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재정계산 실시, 재정전망 공시		재정추계·운영 개선위원회운영	제정전망 공시완료		
	목표달성률(%)		90.0	100.0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5.0	0.5		
	예산집행률(%)		20.0	100.0		
	제도개선 건수(건)	20	57	10	20	20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 개선	법 개정 여부	상임위 통과	국회 통과			
	목표달성률(%)	200.0 90.0	407.0 100.0	100.0	100.0	100.0
국민연금 전략적 홍보	홍보효과도(점)				72.6	72.9
	목표달성률(%)				103.7	100.1
기준소득월액 상한조정	시행령 개정				통과	
	목표달성률(%)				100.0	

##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노후설계상담(CSA)을 실시함으로써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를 줄이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납부이력 있는 납부예외자 등 600천명을 대상으로 CSA (노후설계상담) 안내문을 제공하여 110천명이 방문·유선상담(상담률

18.3%)을 하였고 35천명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로 전환(전환율 5.9%)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의 경우 45세 이상 납부예외자 중 가입이력 1년 이상자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노후설계상담(CSA)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여 노후설계상담률 37.3%, 전환률 51.3%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보건복지부는 사후정산제 확대를 통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특례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특례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8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 특례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중합운영계획에 반영하였고, 161,397명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음.
- 2009년에는 18,376개소 사업장 170,941명(10월 기준)의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가입”을 2010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였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신청시 적용제외허용)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직장근로자로 당연적용(신청시 납부예외 허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8년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미경의원) 이후, 2009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부,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세부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표 2-5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상당율(%) <sup>1)</sup>				11.2	18.3
	전환율(%) <sup>2)</sup>				4.1	5.9
	납부예외율(%)	27.9	28.0	27.5		
	징수율(%)	85.6	87.4	89.4		
	목표달성률(%)	96.8 100.0	96.4 101.0	101.8 102.4	37.3 51.3	152.5 118.0
영세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제도개선 준비				준비	연구용역 완료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증가				증가	
	일용직 자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여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마련	건설일용직 자격 적용 지침 마련	적용지침 마련		
	4대보험 부과징수 일원화 추진: 제도개선 여부		4대보험 공동사업장 관리번호 부여지침 마련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 및 보험료 지원				제도개선안 마련, 법령 국회상정	상임위 논의, 법안소위 계류 중
	실업급여수급자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 보험료지원				제도개선 준비	관계기관 협의
	목표달성률(%)				100.0 100.0	90.0

주 : 1) 상당율 = CSA 상당실적 ÷ CSA 상당대상자 × 100

2) 전환율 = 소득신고자 ÷ CSA 상당대상자 × 100

### ③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기 도입한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를 모니터링하고 노령연금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고령자에 대한 근로를 유인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재직자노령연금 제도개선안 검토회의, 제도개선추진단 워크숍을 거쳐 국민연금법개정안(재직자노령연금 연령별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전환 및 감액을 하향)을 발의·국회계류 중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07년에 연기연금 급여, 조기연금수급 감액을 조정 및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 관련 지침 개정, 2008년에 3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2009년에는 연기연금 신청자 현황 및 신청률 추이 모니터링(143명),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2회 개최, 조기노령연금 신청요건인 소득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2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음.

〈표 2-56〉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국민연금법 제도 개선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기연금급여, 조기연금수급 감액률 조정, 소득활동 인센티브 부여관련 지침개정	제도개선 도출건수 3건	전문가회의 2회 개최	개정안 국회제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200.0	100.0

#### 4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에서는 각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및 교원, 군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군인연금제도 개정안」 정책회의/군무회의 심의·의결 및 “군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연금법 개정” 홍보에 이어 2011년 1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1차 기본계획 기간에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2009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2010.1.1)되었음.
- 군인연금의 경우 2008년에 군인연금제도실무위원회 및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6회 개최, 2009년에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11회) 및 정책건의안 마련 등

#####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연금부채 산정과 적정규모의 책임준비금 확보를 통하여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고 부담 및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2006년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2008년에는 책임준비금 계산을 위한 규정 제정을 검토하였음.
- 2009년도에는 사학연금법 개정(2001년, 책임준비금 적립 신설 등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책임준비금 계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당초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정부연금보험준칙』을 마련 중임.
- 2010년에는 연금부채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금충당부채 평가 방법이 현재 마련 중에 있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수 없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표 2-57〉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사학연금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연구용역	법 개정안 제출	법 개정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운영	건의안마련, 법령 제/개정, 설문조사, 간담회 등	법 개선안 마련	개정안 국회제출, 하위법령 입법예고	
	군인연금	외국 연금제도 수집/연구	외국제도연구, 장기재정추계 실시	제도발전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실무위원회개최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정부합의안 마련
	목표달성률(%)	- - 30.0	10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0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부족책임준비금 예산요구 및 규정제정 자료분석	사학연금제정 안정화방안연구, 책임준비금 검증 용역	책임준비금 계산, 예산요구	연금회계준칙안 마련	정부연금보험 준칙 마련 추진중	연금부채 계산 못함
	목표달성률(%)			100.0		0.0

## 수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는 일정 비율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가 371만명(예산 3조6,800억원 전액 집행)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등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 결과로서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공포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음.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전체노인의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지급대상을 전체노인의 70%로 상향조정하였음.
  -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수급자 수는 2006년 61.3만명에서 2010년 371만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58〉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제도 시행	수급자수	61만명	61만명	288만명	361만명	371만명
	제도도입 여부		법령 제정			
	목표달성률(%)	98.1	96.8 100.0	102.9	106.8	100.0
	최종예산(억원)	2,153	3,345	22,379	34,324	36,893
	예산집행률(%)	100.0	69.3	100.0	100.0	100.0

## 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사업은 2009년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통과(2009.2.6 공포, 8.7 시행)되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 ① 퇴직연금제도 확대

####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입당사자인 노사 대상 교육 및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퇴직연금 도입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장수 200개소, 교육 실시 50회로 당초목표를 달성(예산 6억원 전액 집행)하는 등 1차 기본 계획 기간 동안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도입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장 수는 2006년 50개소에서 2010년 2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수료 인원은 2006년 3,200명에서 2009년 2,519명으로 다소 줄었음.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노동부는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

제 확대,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축소폐지,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부담금의 손비인정 방식개선 등 세제 인센티브 확충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였음(비예산사업).

- 2010년에 세제혜택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에 퇴직연금제 관련 세제 적용방안을 검토하였고, 2007년에 노·사·정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세제혜택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퇴직연금 세제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2010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부여가 불가능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음.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영모델을 선도·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년대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74%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007년 133.3%, 2008년 57%, 2009년 13%, 2010년 74%가 각각 증가하였음.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노동부는 금융기관 및 사업장의 도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국회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8) 통과와 후속조치로 DB형 의무적립비율(현행 60%)의 단계적 상향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위 소관 전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7년에 퇴직연금제도 예금자보호관련 공청회, 지급보장장치 도입관련 연구용역 실시, 퇴직연금실무위원회 논의, 2008년에 퇴직연금 선진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정책포럼, 2009년에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등을 추진하였음.

□ 이외에도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복수 퇴직 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2009년 완료)을 추진하였음.

〈표 2-59〉 퇴직연금제도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교육수료인원(회)	3,200명	3,403명	3,111명	2,519명	50회
	컨설팅지원사업장수	55개소	54개소	150개소	105개소	200개소
	목표달성률(%)	106.7	113.4	103.7	168.0	125.0
		101.9	100.0	277.8	105.0	100.0
	최종예산(억원)	4.7	4.7	4.7	4.7	6.0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세제혜택 개선을 위한 관련 세법령 개정	퇴직연금제 관련 세제 적용방안검토	도입증가율 91.8% (14,591개)	세법개정추진 협조문, 회의	미개정	개정
	목표달성률(%)	100.0	306.0	100.0	0.0	100.0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전년대비 공공부문 05년 0개소, 06년 21개소	133.3% (28개소)	57.0% (77개소)	13%	74%
	목표달성률(%)	100.0	444.3	285.0	65.0	370.0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성과지표 및 실적		연구용역 완료	예금자보호 제도적용 협조공문, 정책포럼	예금자보호 제도적용	DB형 외부적립을 단계적 상향 법령개정실패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0.0
	최종예산(억원)		1.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성과지표 및 실적		퇴직연금 실무위원회 논의	정책포럼,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제도 마련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복수 퇴직 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복수·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법개정 완료	
	목표달성률(%)				100.0	

## ② 개인연금 활성화

###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연금 관련 세제 정비를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키고자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였음.
  - 개인연금은 1994년 최초 판매 이후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운용됨(조세특례제한법)
- 2007년 연금소득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은 재정 여건, 연금소득세 납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비예산사업).

〈표 2-60〉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입안 여부	개편방안 입안	개편방안 검토중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입안 중장기적으로 검토 결정
	목표달성률(%)	100.0	0.0	

### □ 이상 고령사회분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 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61〉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고				○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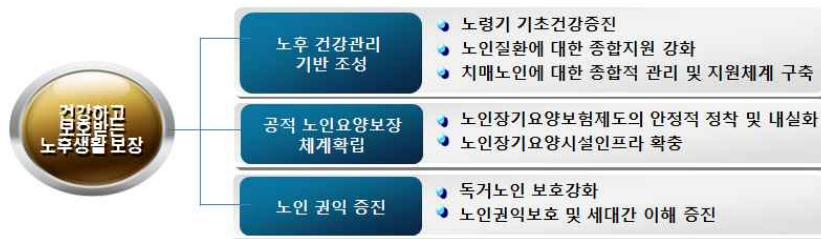
〈표 2-62〉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 권익증진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①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노인병을 예방하고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층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음(경로시설 등에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하여 생활체육활동 지도서비스 제공,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 2010년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500명을 배치하고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예산 115.3억원 전액 집행)하여 당초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2006년 244명에서 2010년 5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2007년 296명, 2008년 337명, 2009년 345명),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음.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보건복지부는 5대 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의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 강화, 본인부담금 추가경감, 검진기관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0년에 암검진 대상자 대비 수검자 비율이 30.6%(예산 15억원 전액 집행)로 지난 2년간 모두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2010년 동안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었으며, 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암예방 홍보 및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암검진 대상자 대비 수검자 비율이 27%에서 30.6%로 증가하였음.

□ 이외에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기간에 ‘노령기중증 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 건강검진 개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종결되었음(2010년 평가대상 제외).

〈표 2-6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율%(정원 대비)	97.6	99.0	337명 배치	98.5	100.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수	17회	17회	17회	1회 (전국)	1회 (전국)
	목표달성률(%)	108.4	110.0	96.3	10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54.7	87.9	90.9	92.2	115.3
암검진 수검률 제고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암검진수검률 (대상자대비)				27 (11월말)	30.6
	목표달성률(%)				100.0	105.5
	최종예산(억원)				15	15
노령기중증질환을 목표로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예산집행률(%)				100.0	100.0
	생애전환건강진단사업 시행, 치매선별검사도입				도입	
	목표달성률(%)				100.0	

주: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일반건강검진 개편’ 사업은 비예산사업임.

## ②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아 만성질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보건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1차 예방서비스 제공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 등 2차 예방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대구시의 시범사업 3주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남양주시, 하산시, 안산시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예산 54.4억원 전액 집행)한 결과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율(해당지역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환자수/해당지역 고혈압·당뇨환자 추정환자수)이 2010년 76%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지난 2년간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은 2008년 대구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에도 광명시와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율은 2009년 57%, 2010년 76%로 증가하였음.

###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에 암관리법 개정(10.27 공포)을 통해 호스피스 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호스피스 적정수준 수가 개발을 추진하여 수가안을 마련하였음.
  - 2008년에는 완화의료 대상자 신청 절차나 완화의료기관 지정·평가 등을 규정하도록 암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준비하여 2009년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안)를 확정 추진하였음.

□ 눈·귀 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 보건복지부는 관절염, 눈·귀 질환, 골다공증 등 다빈도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눈건강, 귀·코·목건강, 골다공증, 관절염 건강(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주간 건강과 질병 등에 건강정보를 생산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4억원 전액집행).

〈표 2-64〉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 <sup>1)</sup>				58%	76%
	목표달성률(%)				128.0	138.2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과지표 및 실적	호스피스·완화수혜 4,813명	호스피스 수가안 마련	호스피스 수가안 마련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완화의료 건보수가 시범사업
	목표달성률(%)	100.3	100.0	100.0	100.0	100.0
눈·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건강정보 생산수				49건	43건
	목표달성률(%)				123.0	100.0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의치보철수혜자율 (대상 대비)	12,488명 지원	13%	18.9%	22%	21%
	목표달성률(%)		100.0	102.2	100.0	143.8

주: 1)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율 = (시범사업지역 65세이상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 수) / (시범사업지역 65세이상 고혈압·당뇨추정환자수) × 100

〈표 2-65〉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최종예산(억원)				55.2	54.4
	예산집행률(%)				100.0	100.0
눈·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최종예산(억원)				1.2	0.4
	예산집행률(%)				100.0	100.0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최종예산(억원)	136	140	192.6	332	498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틀니)를 시술하고, 불

소도포스케일링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구강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의치보철사업 서비스 수혜자수가 23,285명으로 의치보철수혜자율(대상자수 대비)이 21%(예산 498억원 전액집행)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의치보철사업 서비스 수혜자수가 2006년 12,488명에서 2010년 23,285명으로 증가하였음(2007년 9,000명, 2008년 12,800명, 2009년 17,500명),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서비스 수혜자수는 2006년 시범사업으로 6천명에게 제공하였으나 2010년 72,638명으로 증가하였음(2007년 6,000여명, 2008년 16,000여명, 2009년 26,688명). 이 외에 노인 대상 구강검진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도입 등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치매전문인력 양성 등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0년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치매케어 컨퍼런스, 치매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노인 및 가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매예방관리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를 실시(총예산 163억원 전액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2008년 이래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치매 조기검진은 2006년 21천명에서 2010년 776천건으로 약 37배 증가하였음.

- 치매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수는 2007년 처음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1,126명으로 다소 목표에 미달되었으나 2010년에는 1,527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2-66〉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치매조기검진 실적 건수	21천명	2,041명 (등록환자)	144,125건	266천건 (10월)	776천건
	치매전문인력 교육 수료자 수		1,126명	700명	1,431	1,527
	목표달성률(%)	91.3	72.9 112.6	192.2 63.6	172.0	287.4
	최중예산(억원)	2	11.5	12	20	163
	예산집행률(%)	100.0	100.0	90.8	100.0	100.0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까지 수혜 대상을 현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31만명으로 목표를 거의 달성 (93.9%)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323억원 전액집행).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2009년 26.2만명에서 2010년 30.7만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인구대비 비율은 2009년 5.1%에서 2010년 5.7%로 높아졌음.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통한 건전한 재정구조 구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발

전을 이루기 위한 건전한 재정구조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009년과 동일하게 재정수지율이 96%로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과 2010년 각각 다음 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다음 년도 운영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음.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10년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현황 및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미이용자 실태를 파악하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는 본인부담 경감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공포, 저소득층 20,774명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감, 비급여 운영 실태조사 실시 및 466개 입소시설 대상 본인부담수준 적정성 관리·감독을 추진하였음.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대상기관 총 8,786개소 중 6,057개소(68.9%)가 신청하고, 5,794개소(95.7%)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지난 2년간 실적이 양호함(비예산사업).
- 2008년에는 준비기로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실시 등
- 2009년에는 도입기로 고시 제정 등 근거 규정 마련, 평가단 구성 및 교육, 장기요양기관 대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교육, 평가 실시, 평가결과 인터넷 공표 등
- 대상 장기요양기관 1,668개소 중 1,227개소(73.7%)가 신청하고, 1,194



개소(97.3%) 평가 완료

- 2010년은 정착기로 2009년도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평가계획 수립, 평가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4천명) 교육, 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실시하였음.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기요양운영센터 요양직 직원을 활용하여 방문 조사, 등급 판정, 서비스 이용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정기적 상담 실시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이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만족도 결과가 86.2%로 2009년 80%에 이어 매년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 시설급여 이용자 65천명, 재가급여 이용자 163천명, 등급 외자 10만 명에 대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통합체크리스트<sup>15)</sup> 개발하여 모니터링 하고(정기적 보호자 통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 기능 상태에 따른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음.
- 2010년에는 수급자와 접점에 있는 공단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제고와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용안내를 지원하였음.

□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지역 노인에게 복지·예방에서부터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간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15) 통합체크리스트란 수급자 상담내용(비용, 만족도, 위생상태, 건강상태 등), 기관현황(이용자 현황, 시설 환경,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사표

-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건보공단과 지자체간 등급외자 정보에 대한 연계체계 개선을 통해 연계 건수가 2009년 19만에서 2010년에 25만건으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등급관정을 마친 대상자 중 등급외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표 2-6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월별누적)	26.2만명	30.7만명
	목표달성률(%)	113.9	93.0
	최종예산(억원)	3,284	3,323
	예산집행률(%)	99.9	100.0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재정 수지율(%)	96	96
	목표달성률(%)	101.1	101.1
본인부담 수준 관리	성과지표 및 실적	본인부담 경감확대를 위한 고시개정	실태조사 결과 반영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체계 마련	평가신청기관수/전체재가기관수	서비스 질 평가	68.9%
	목표달성률(%)	100.0	137.8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강화	수급자 만족도(%)	80	86.2
	목표달성률(%)	115.0	104.9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연계건수(만건)	19	25
	목표달성률(%)	190.0	125.0

## ②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재가) 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노인요양시설충족률(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수 대비 확충 병상수)이 125.3%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매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 소규모 시설, 그룹홈, 종합재가 지원센터, 농어촌 재가복지 시설 등이 2006년 297개소, 2007년 297개소, 2008년 237개소, 2009년 205개소, 2010년 255개소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2006년 57%에서 2010년 125.3%로 증가하였음.
- 2010년에 예산은 1,297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집행률은 81.9%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의 경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확충하여 예산이 많았으며, 2010년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나 지방비 예산 집행 실적이 낮기 때문임.

〈표 2-68〉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시설보호 필요노인수 대비 확충병상수)(%)	57	82.7	110.6	116.6	125.3
	목표달성률(%)	114.0	142.6	110.6	116.6	125.3
	최종예산(억원)	2,130	3,148.0	2,090.5	2020.6	1296.6
	예산집행률(%)	99.6	97.4	99.4	99.8	81.9

## 2-3. 노인 권익 증진

### 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주거상태 점검, 정서지원 및 건강·영양관리, 생활교육, 생활실태·복지욕구 파악 및 필요서비스 연계, 노인 가사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과 통합하여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노인 수가 126천명(예산 1,252억원 전액집행)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매년 목표

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가 대체로 13~17만 명 정도로 나타남(2007년을 제외하고는 당초목표 초과달성).
- 2009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였음.

#### □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이 가능한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13,914가구에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여(예산은 49.3억원 중 87.2% 집행)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는 삼척, 동해, 서산, 김제, 광양, 문경의 9,000가구에 센서를 설치하였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과 소방방재청 u-119서비스 연계로 실시간 구조·구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2-69〉 독거노인 보호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독거노인 보호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노인 수	21,323명		14만명	162천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수혜 독거노인 수	150,431명	13만명		
	목표달성률(%)	85.4 104.5	108.3	107.7	111.0
	최종예산(억원)	706	480	734	1,252
	예산집행률(%)	99.9	97.5	100.0	100.0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독거노인 댁내 설치 개수(가구)			9,000	13,914
	목표달성률(%)			90.0	116.0
	최종예산(억원)			7.0	49.3
	예산집행률(%)			100.0	87.2

## ②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서비스 및 전문상담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도 꾸준히 확충되어 2010년 현재 전국에서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6년 18,957건, 2007년 27,492건, 2008년 35,467건, 2009년 42,907건, 2010년 44,000건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최초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노인학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예산은 2007년 35억원에서 2010년 6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보건복지부는 범국민적 효사상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고 있는 장한아버이 등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 및 격려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가 2006년에는 218명, 2007년 183명, 2008년 202명, 2009년 181명, 2010년 176명으로 매년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06년 0.45억원에서 2007년 0.8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0.3억원으로 줄었으며,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0〉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노인학대 상담건수(건)	18,957	27,492	35,467	42,907	44,000
	목표달성률(%)	124.7	145.0	118.2	143.0	97.8
효행자 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명)	218	183	202	181	176
	목표달성률(%)	100.0	90.6	108.0	95.0	95.1

〈표 2-71〉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최종예산(억원)		35	38.8	54.6	62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효행자 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	최종예산(억원)	0.45	0.8	0.3	0.3	0.3
	예산집행률(%)	100.0	75.0	100.0	100.0	100.0

□ 이상 고령사회분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72〉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 암검진 수집률 제고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 질환 예방				○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 눈·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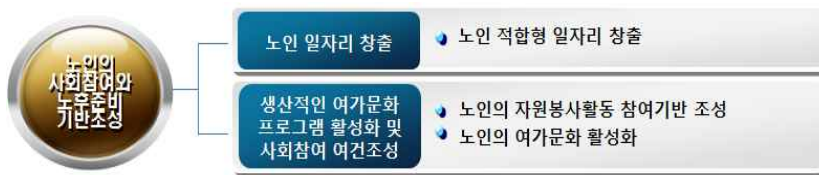
〈표 2-73〉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노,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등급외 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은 i) 노인일자리 창출, ii)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구성



#### 3-1. 노인일자리 창출

#####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 노인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및 경제 위기에 따른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창출한 일자리 수가 꾸준히 늘어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창출한 일자리 수는 2007년 116천개에서 2010년 216천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07~2008년 1,600~1700억원대였으나 2009년부터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3천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4〉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민간분야 일자리창출 수	115,644	126,000	210천개	216천 (공공191천, 민간 25천)
	목표달성률(%)	105.1	100.0	107.0	115.1 125.0
	최종예산(억원)	1,622	1,784	3,253	3,067
	예산집행률(%)	100.0	100.0	90.1 (국비집행률)	100.0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 보건복지부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7년 이래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음.
  - 2010년에는 전문노인자원봉사단 슬로건 및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개최,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공통 소양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금융, 보건의료, 교육상담 등 6개 분야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국단위 전문노인자원봉사단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사업단 수가 27개로 나타남.
  - 노인 자원봉사자 수가 2007년 1,083명, 2008년 1,035명, 2009년 10,403명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07~2010년 동안 5억원 내외였으며, 2009년(90.1% 집행)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전문노인 자원봉사 사업단 수(개)				27
	조직화된 노인자원봉사자수(명) (06-07:선정프로그램에서 활동한 노인자원봉사자수)	1,083	1,035	10,403	
	목표달성률(%)	125.9	115.0	100.0	90.0
	최종예산(억원)	4	4	7	5
	예산집행률(%)	100.0	100.0	90.1	100.0

## ②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노인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에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30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10년에는 251개소를 확충하여 1인당 체육시설 확보 면적이 각각 2.54㎡, 2.88㎡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2009년 노인건강체육시설 6개소, 생활체육공원 18개소, 국민체육센터 52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00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7개소,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25개소
  - 2010년 생활체육공원 22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8개소, 국민체육센터 51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140개소, 농어촌복합체육시설 5개소,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5개소
- 예산은 2009년 1,611억원, 2010년 1,521억원으로 거의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

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세대에 계임을 활용한 여가문화체험 및 세대차이 극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실버세대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 등이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는 2006년 151,096명에서 2010년 470,000명으로 증가하였음.
- 실버세대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07년 196명에서 2010년 97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06~2008년까지 20억원대에서 2009년 40.7억원, 2010년 67.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 행정안전부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민간 고령층정보화 교육 기관과 어르신 IT봉사단을 활용하여 정보화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정보 사회의 동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보화교육생 수가 2007년 79,362명에서 2010년 21,74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모두 당초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산은 2007년 19억원, 2008년 9억원, 2009년 4.7억원, 2010년 4.7억원 등으로 모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퇴직자·노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기회를 마련하며, 노인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계층 여가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의 목표가 대체로 달성되어 실적

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가 2006년 51개에서 2010년 225개로, 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1,723명에서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노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는 2006년 3,783명에서 2010년 3,215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 관광 지원을 위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수는 2007년 372명에서 2010년 602명으로 증가하였음.

- 예산은 2006년 17억원에서 2010년 3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모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6〉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1인당 체육시설 확보 면적(m)				2.54	2.88
	목표달성률(%)				102.8	109.9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명)	151,096	150,832	217,858	238,976	470,000
	실버세대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 세대 통합형 참여프로그램 참여자수	488*	196	167	332	970
	목표달성률(%)	176.7 135.6	225.0 196.0	325.2 167.0	119.0 221.0	134.3 242.5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정보화교육생수(명)		79,362	25,964	17,689	21,745
	목표달성률(%)		132.3	107.3	130.0	159.9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수(개)	51	76	100	197	225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혜자수(명)	1,723	2,593		6,000	6,000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혜자수(명)	3,783	3,769	3,788	3,580	3,215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수(명)		372	254	431	602
		102.0 114.9 158.9	108.6 136.5 100.0	125.0 97.1 97.1	131.3 150.0 102.2	150.0 150.0 91.9
	목표달성률(%)		178.8	635.0	144.0	100.3

〈표 2-77〉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최종예산(억원)				1,611	1,521
	예산집행률(%)				99.9	100.0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최종예산(억원)	26.3	20.5	27.5	40.7	67.5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최종예산(억원)		19	9	4.7	4.7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	최종예산(억원)	17	25	25	28.1	32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상 고령사회분야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78〉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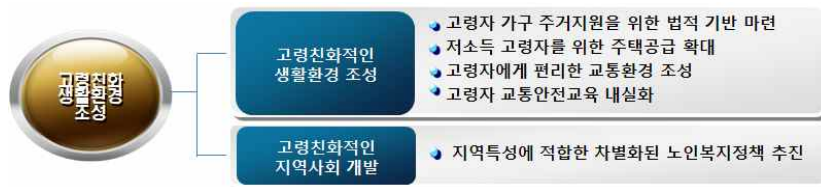
〈표 2-79〉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은 i)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ii)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2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 ①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국토해양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지원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임).<sup>16)</sup>
- 2010년까지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에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고령자주거지원법률(안)을 마련하였음. 2008년에는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에 하위법령 마련

16) 고령자 주거안정법 주요내용은 고령자 주거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공고(안 제8조 및 제9조),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안 제10조), 고령자 임대주택 신고 및 생활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고령자용 주택개조 비용 지원(안 제16조), 고령자 주거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2010년에 당초 고령자주거안정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조문 및 주요 내용이 유사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양 법안의 병합처리 논의 등의 문제로 입법 추진이 곤란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대신 고령자 주거안정법 하위법령(안)을 검토하였음.

〈표 2-80〉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법률안 마련 30%	법률안마련 50%	법률안 확정	하위법령안 마련	-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0.0

##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고령자가구가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고령친화적 설계가 고려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868호 이상을 사업 승인(비예산사업)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855호, 2006년 575호, 2007년 891호, 2008년 1,135호, 2009년 608호, 2010년 2,868호를 사업 승인하여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목표달성률이 부진한 이유는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2009.10)되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사업이 연기되었기 때문임.
- 2009~2010년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06년 534억원, 2007년 582억원, 2008년 921.3억원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1〉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승인(호)	누계 1,430호 (추가 575세대)	891	1,135	680	2,868호 이상
	목표달성률(%)	163.0	111.0	141.9	68.0	191.2
	최종예산(억원)	534.0	582.0	921.3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 ③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저상버스도입보조)

- 국토해양부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승하차가 편리한 친환경 CNG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04~2013년 간 3,972억원을 투자하여 총 14,500대(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늘리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저상버스를 838대 도입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750억원으로 전액 집행).
-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006년 364대, 2007년 304대, 2008년 500대, 2009년 978대, 2010년 838대로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확충)

- 국토해양부는 2003년 이전에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8~2017년 간 2,370억원을 투자하여 엘리베이터 432대, 에스컬레이터 581대를 확충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을 138대(엘리베이터 85, 에스컬레이터 53)를 확충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885억원으로 전액 집행).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2007년 144대(60대, 84대), 2008년 41대(28대, 13대), 2009년 113대(62대, 51대),



2010년 138대(85대, 53대) 확충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수도권전철 이동편의 시설확충)

- 국토해양부는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수도권전철 등 일반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03년~2012년 간 수도권전철 등 일반철도 37개 역사에 이동편의시설 282대(엘리베이터 86대, 에스컬레이터 196대)를 설치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수도권전철 이동편의시설을 62대(엘리베이터 8대, 에스컬레이터 54대) 설치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96억 원으로 전액 집행).
- 수도권전철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을 2006년 236대(94대, 142대), 2007년 32대(21대, 11대), 2008년 15대(9대, 6대), 2009년 22대(17대, 5대), 2010년 62대(8대, 54대) 설치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경찰청은 교통사고 및 사고로 인한 노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10년에 노인보호구역을 290개소로 확대하여 목표를 거의(96.7%)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전국 33개소에 노인보호구역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노인보호구역을 97개소, 2009년 198개소(11월말), 2010년 290개소로 확대하는 등 목표를 거의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경찰청은 고령자 및 위험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통안전용품 개발·보급하고 찾아기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희망할 경우 안전운전 요령 등 교통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말 노인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07년부터 안전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용품을 배포하여 (2007년 2,838,419명 교육, 야광안전모자 21,600개, 2008년 1,543,255명 교육, 야광배지, 팔찌, 반사재 등 11,000개, 2009년 2,052,288명 교육, 야광조끼 29,751매, 야광반사재 485,300매 등 2,104,662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82〉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조성 (저상버스도입보조)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집행 실적 대비	99.2 <sup>1)</sup>	100.0 <sup>1)</sup>	100.0	100.0	100.0
	목표달성률(%)	99.2	100.0	100.0	99.7	100.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확충)	도시철도이동편의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	100	1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수도권전철 이동편의 시설확충)	수도권전철 이동편의 예산집행 실적 대비			100	100	1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방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개소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33	97	198 (11월말)	290
	목표달성률(%)	100.0	-	-	130.3	96.7
고령 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교통안전용품 개발·배포(개)		21,600	11,000		교통안전 교육실시
	노인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				34.7	
노인 교통안전 자원봉사운동 추진	전국노인교통안전봉사대수(개소)	161	245	245	245	245
	목표달성률(%)	123.8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6-2007년에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 '수도권전철 이동편의 시설 확충' 사업이 통합되어 지표가 '저상버스 도입률(50%)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률(50%)'였음.

〈표 2-83〉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최종예산(억원)	964 <sup>1)</sup>	653 <sup>1)</sup>	500	884	750
이용환경 조성 (저상버스도입보조)	예산집행률(%)	99.7	100.0	100.0	99.7	100.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최종예산(억원)			761.7	885	885
조성 (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확충)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최종예산(억원)			90	280	96
조성 (수도권전철 이동편의 시설확충)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노인 교통안전 자원봉사운동 추진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0.36
	예산집행률(%)					100.0

주: 1) 2006-2007년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 '수도권전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도변 보도설치' 예산이 통합된 것임.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교통위험지역을 감시·순찰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홍보하고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시·군·구당 1개씩 총 245개의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운영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0.36억원으로 전액 집행).
- 2006년에 「노인교통안전봉사단 구성·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 시달하고, 노인교통안전봉사단 161개소(4,571명)를 설치·운영하였고, 2007년부터는 시·군·구당 1개씩 총 245개의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운영하여 목표를 거의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마련·보급하여, 지자체 노인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우수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15개를 포상(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2)하여 당초목표의 93.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에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연구 실시, 2007년에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설계를 위한 지표 개발, 2008년에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모형설계 세부지침 개발」 연구 실시, 2009년과 2010년에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15개 포상 등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부는 취약농가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천원(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월 1회)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취약농가의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15천 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만족도가 90.5%로 당초 목표를 거의 달성(99.5%)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11억원으로 전액 집행).
- 2006년 12,038명, 2007년 15,505세대, 2008년 16,048가구, 2009년 19천 가구, 2010년 15천 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만족도가 2008년 89%, 2009년 90%, 2010년 90.5%로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농촌 건강장수마을)

- 농촌진흥청은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농촌 노년 장수생활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 2005~2011년 간 800개소의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사업수혜자의 연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8.1회이며 생활만족도가 71.5%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은 75억원으로 전액 집행).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005년 100개소, 2006년 300개소, 2007년 350개소, 2008년 334개소, 2009년 141개소, 2010년 150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사업수혜자 연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2007년 8.3회, 2008년 7.3회, 2009년 8회, 2010년 8.1회로 나타났음. 수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2005년 55.4%에서 2006년 57.6%, 2007년 64.2%, 2008년 65.2%, 2009년 69.5%, 2010년 71.5%로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84〉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복지정책모델 개발	우수 프로그램 포상	연구용역 완료	지표개발 완료	연구용역 완료	15개	15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93.8	93.8
가사활동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가사도우미 고객만족도(%)			89	90	90.5
	계획대비지원율(08년 지원인원)	100%	100%	16천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개소수	16개소	14개소			
	목표달성률(%)	117.6 100.0	117.6 116.7	104.7 106.7	100.0	99.5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농촌건강장수마을)	수혜 노인의 생활만족도(%)	57.6	64.2	65.2	69.5	71.5
	사업수혜자 1인당 참여횟수(회)		8.3	7.3	8	8.1
	목표달성률(%)	101.1	110.7 127.8	100.3 104.3	107.0 110.0	110.0 108.0

〈표 2-85〉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복지정책모델 개발	최종예산(억원)	0.4	0.3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100.0			
가사활동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최종예산(억원)	10.0	15.1	15.1	13.0	11.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최종예산(억원)	151.0	160.0	166.6	70.4	75.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상 고령사회분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 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86〉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가구주거자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저상버스)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도시철도)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수도권전철)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유도				○

〈표 2-87〉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가구주거자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저상버스)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도시철도)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수도권전철)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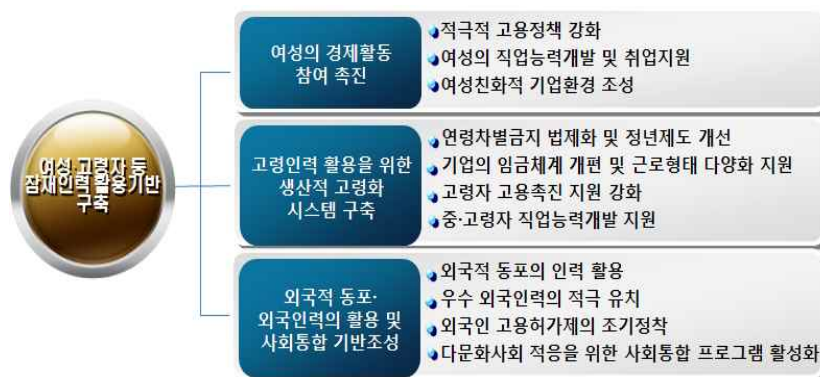
###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장동력 확보’ 분야는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 세 가지 중영역으로 구성됨.

####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외국인력 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8]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구성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①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 노동부는 공기업 및 대기업(상시 500명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 평등계획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여성고용차별개선 및 여성고용확대를 실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A) 의무기업의 참여율과 이행률<sup>17)</sup> 모두 100%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1억원 전액 집행).

- 2006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A)를 도입한 이래 1차 기본계획 전 기간에 의무기업의 참여율과 이행률 모두 100%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sup>18)</sup>의 신규채용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을 2010년 25%(최종 30%)까지 단계별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기관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07년부터 매년 채용목표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음.

- 2010년에 25개 출연연구원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비율이 19.7%로 당초목표를 거의 달성(98.5%)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이래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5개 출연연구원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비율이 2007년 15%에서 2010년 1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17) 여성고용비율 기준미달 사업주를 대상으로 AA시행계획서 및 AA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 의무기업이행률은 시행계획서 제출기업수 대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기업수임.

18) 25개 정부출연(연), 66개 국공립(연), 8개 정부투자기관부설(연)



- 행정안전부는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고, 관리자 내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06년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2-2006)」이 종료됨에 따라,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대상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 하였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sup>19)</sup>를 추진하였음.
- 2010년에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4%(목표달성률 93.7%), 지자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5%(목표달성률 95.5%), 지자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3.9%(목표달성률 91.4%)로 당초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이 2007년 6.2%에서 2010년 7.4%로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90% 이상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교직 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및 여교수의 대학 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교장·교감·전문직 등 여성관리직 비율과 각종 인사위 여성 임용 비율을 점검하고, 국공립대학의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추진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대학 선정 및 사업비를 지원함.
- 2010년에 여성교장·교감비율이 20.5%(목표달성률 102.5%), 여성교수 비율은 14.2%(목표달성률 94.7%)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거나 95%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8억원 전액 집행).
- 여성교장·교감비율이 2007년 14.1%에서 2010년 20.5%로 1차 기본계획의 목표치(20%)를 달성하였으며, 여성교수비율은 11.3%에서 14.2%로 증가하여 꾸준히 높은 수준의 목표달성률을 유지하였음.

19) 5~9급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 5명이상 시험에서 한쪽 성이 30%미달 시, 추가합격 제도

〈표 2-88〉 여성의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실시	의무기업 참여율(%)	제도시행	100.0	100.0	100.0	100.0
	의무기업 이행율(%)		100.0	100.0	100.0	100.0
	목표달성률(%)	100.0	111.1 125.0	111.1 125.0	111.1 125.0	111.1 111.1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25 출연(연)여성과학 기술인력채용비율(%)	1)	15.0	16.6 <sup>2)</sup>	16.5	19.7
	목표달성률(%)	100% 이상	96.2	97.1 (이외 100+)	97.1	98.5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비율(%)	9.6 (5급+)	6.2	6.1	6.8	7.4
	지자체 5급/6급이상 여성비율(%)					8.5 13.9
	양성평등채용목표 적용	적용	적용			
	목표달성률(%)	96.0 100.0	100.0 100.0	100.0	98.6	93.7 95.5 91.4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여성 교장·교감비율(%)	추진 중	14.1	14.1	18.1	20.5
	여성교수 비율(%)		11.3	11.3	12.8	14.2
	우수대학 선정·지원수	4개 대학				
	목표달성률(%)	- 100.0	82.9 98.3	82.9 98.3	90.5 98.4	102.5 94.7

주: 1) 2006년에 성과지표는 성인지적 공학교육 시스템 개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수(개), 현장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산학협력 취업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기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공대 여학생 진 공분야 취업률, 프로그램 만족도 등 포함

2) 2008년에 성과지표는 이외에 성인지적 공학교육 시스템 개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수(개), 현장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산학협력·취업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기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 공대 여 학생 전공분야 취업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횟수,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교육수혜자수, 여 성과과학기술인 역량강화교육만족도 등 포함

〈표 2-89〉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최종예산(억원)	6.0	6.5	8.0	8.5	8.1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예산집행률(%)	100.0	98.2	97.5	97.6	100.0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최종예산(억원)	4.9	10.0	13.7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98.0	100.0	100.0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최종예산(억원)	1.8	1.8	6.0	2.8	2.8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②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 노동부에서는 여성 선호 직종 등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유연한 훈련방식 도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훈련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역량 및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여성훈련 인원이 661명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1억원 전액 집행).
  - 2006년과 2007년에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8개 과정을 개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 200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훈련프로그램에 52명이 참여하여 여성훈련 5% 확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여성훈련인원이 각각 644명, 661명으로 모두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에 사업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여성의 연령, 희망취업, 직종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대생 대상 커리어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고용기회를 늘림으로써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수료생 중 취업자 비율이 54.5%, 여대생의 커리어 개발센터 이용 만족도가 86.6점으로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5억원 전액 집행)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수료생 중 취업자 비율은 2007년 63.5%에서 2010년 54.5%로 감소하였으나 매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였고,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이용 만족도는 2006년 80.3점에서 2010년 86.6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새일센터를 77개소(전년도 72개소)로 확대하고,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에 광역새일지원본부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이용인원이 2009년 100,327명에서 2010년 148,882명으로 증가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96억원 전액 집행).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및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매 3년) 실시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2006년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7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안) 수정·마련, 2008년 법령 제정, 2009년 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와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및 경력단절여성재취업실태조사 실시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직업역량제고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자격취득비용이 높고 진출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신설 등을 추진하고, 표준을 활용하여 훈련교재, 훈련기준, 출제기준, 경력개발경로 등을 패키지로 개발하여 일-훈련-자격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1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억원 전액 집행).
    - 2006년 4분야 12직종, 2007년에 16직종, 2008년 5분야 12직종 등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 2분야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1차 기본  
계획 기간 동안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표 2-90〉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여성훈련실적(명)				644	661
	전년대비 여성훈련 확대비율(%)			0.0		
	취업과 연계한 훈련과정개발 훈련인프라 구축	8개	8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0.0	189.4	134.9
여성구직자특성에 적합한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교육수료생 취업비율(%)	59.1	63.5	62	58	54.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만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용자수	목표대비 163.9%	목표대비 109%	84점 53,133명	84.7점	86.6점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률	100%	100%			
	목표달성률(%)	122.4	127.0	100.5	93.7	118.5
		163.9 111.1	106.5 109.9	103.7 129.6	99.1	101.3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종합취업지원기관 이용인원(명)				100,327	148,882
	목표달성률(%)				100.3	141.8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성과지표 및 실적	연구용역 실시	법안마련 발사계획	법제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직업능력표준 활용패키지 개발	4개분야 12종 표준개발	16개직종 표준개발 1개종목 자격신설	5개분야 12개직종 표준개발	2분야 10개직종 패키지개발	1개분야 패키지개발
	목표달성률(%)	100.0	100.0	80.0	100.0	100.0

〈표 2-9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최종예산(억원)	28	12	0.6	0.6	4.1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구직자특성 적합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최종예산(억원)	44	48	45	62.6	75
	예산집행률(%)	97.7	99.2	99.7	98.2	100.0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최종예산(억원)				214	296
	예산집행률(%)				100.0	100.0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최종예산(억원)	0.6	0.8	3.0	3.5	1.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③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 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관리자 육성지원, 여성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여성인력패널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50명에게 여성인력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2억원의 90.5% 집행).
  - 중견기업 CEO포럼(매년 1회),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여성인력 패널조사 연구용역 실시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여성가족부에서는 풀타임 장시간노동에 따른 근로자의 일-생활 조화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도(퍼플잡) 도입 등 사회전반에 일-생활 조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20개 행정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시간제 근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개 공공기관에 대해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9억원 전액 집행).
  - 2009년에도 506개 기업과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2〉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여성인력 리더십교육 실적	251명	250명
	목표달성률(%)	125.5	113.6
	최종예산(억원)	1.5	4.2
	예산집행률(%)	100.0	90.5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성과지표 및 실적	506기업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정부·지자체 시간제 근무 시범운영 실시
	목표달성률(%)	337.3	100.0
	최종예산(억원)	1.1	2.9
	예산집행률(%)	100.0	96.6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노동부에서는 연령차별금지를 2009년 모집·채용분야에 우선적용하고, 2010년까지 임금,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분야까지 확대하여 고령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구인·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 모집·채용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2006년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및 법 개정(안) 마련, 2007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8년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령 개정, 2009년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및 홍보(리플렛·포스터 제작, 보도자료 등)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Age campaign 실시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고용강조주간(11월 셋째주)’ 설정 및 연령차별 해소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자고용강조주간 행사 개최, TV·신문 등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억원 전액집행).
  - 2006년 이래 working60+ 행사 개최, 온라인카페 운영, 고령자고용강조주간 행사 개최, TV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각종 홍보자료 제작·배포, 포럼 개최, 고령자고용 우수기업 포상, 언론 홍보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정년제도 개선

- 노동부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편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를 설치하고 논의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에산 사업).
- 2006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sup>20)</sup> 2007년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8년 정년연장장려금제도 실시 및 고용규제 완화·정년의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대책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50+세대 일자리 대책」 확정 및 정년연장관련 대통령 보고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조치 단계적 확산	성과지표 및 실적	법개정 초안마련	법개정안 국회제출	하위법령 개정	권역별 교육실시	모니터링 실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고령자 고용강조주간	캠페인	기념행사	기념식, 포럼, 콘서트	기념행사	기념행사
	언론홍보(회)		10	10 이상	5	15
	이벤트(회)		1			2
	온라인 카페 회원수(명)		42,095 (방문)	1,779	2,501 (방문20만)	
		100.0	100.0	100.0	100.0	100.0
	목표달성률(%)		333.3	333.3	166.6	500.0
			100.0			100.0
			129.3	118.6	133.3	
	최종예산(억원)	2.5	2.5	2.4	2.4	3.0
정년제도 개선	예산집행률(%)	84.0	84.0	91.7	100.0	100.0
	법제화	고령자고용 촉진법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연구용역 실시	대통령 보고	검토회의 개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20) 정년을 54세 미만으로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계획 제출 요청하고 정년연장계획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②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sup>21)</sup>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대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한시제도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2006~2008)를 2008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기존 임금감액 제외 사유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삭제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2010년에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 인원은 1,869명으로 목표의 71.5%만을 달성하였으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사업체수는 58개소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5억원 전액집행).
- 시행 초기에 지원대상 연봉기준 과소설정, 수요예측 부정확,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목표달성도는 미흡하였으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인원이 2006년 227명에서 2010년 1,869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지원 사업체수가 27개소에서 58개소로 증가하였음.
- 향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표 2-9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인원	227	585	997	1,497	1,869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사업체수	27	35	35	33	58
	목표달성률(%)	12.1	31.1	101.1	138.0	71.5
		73.0	94.6	94.6	110.0	107.4
	최종예산(억원)	32	96	49	83	95
	예산집행률(%)	56.3	29.9	91.8	95.2	100.0

2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으로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6년간 지원(연소득 5,760만원 초과자 지급제외)

### ③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거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주 분기별 18만원, 정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사업주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전년대비 장기고용인원 증가율이 -20.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41억원 대부분 집행). 이는 2009년부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한도(5년)가 도래한 사업장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10년도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2006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50~64세 → 50세 이상), 2007년 정년연장장려금 신설, 이후 매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장려금 지원 등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노동부에서는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한(또는 예정인) 근로자에게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퇴직준비프로그램 운영 사업주에게 인건비,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를 1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2010년에 퇴직준비지원금 수급자 중 재취업률(6개월 후)은 30.7%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수급대상자의 3개월 후 재취업률은 2006년 11.3%에서 2008년 25.4%로 증가하였고, 6개월 후 재취업률은 2009년 22.3%에서 2010년 30.7%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산업체 퇴직연구인력 포함)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급연구인력(석·박사 또는 대기업 퇴직 우수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인건비의 일부(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인력 4,8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인원은 1,108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60억원 전액 집행).
  - 지원인원은 2008년 793명에서 2010년 1,108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을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지원 센터’로 확대개편,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자 워크넷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일자리 DB 연계구축 등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가 58개소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1억원 전액 집행).
  - 고령자인재은행이 2006년 4개소에서 2009년 50개소로 증가하여 목표달성률이 최근에 올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 실버취업박람회는 2006년에 광역자치단체 2개소에 미개최,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한 1개소 개최취소 등 목표달성률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2-95〉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장기고용인원 증가율(%)					-20.8
	목표대비 장려금지원인원비율(%)	229,092명	110.1	107.2	116.4	
	채용 6개월 후 고용유지율(%)	93.3	80.9	81.6		
	목표달성률(%)	87.6 122.8	122.4 106.4	105.8 107.4	129.3	-693.3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수급대상자의 6개월(08까지 3개월) 후 재취업률(%)	11.3	15.8	25.4	22.3	30.7
	목표달성률(%)	113.0	158.0	254.0	101.4	122.8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인원수(명)			793	1,097	1,108
	목표달성률(%)			99.1	109.7	100.7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고령자인재은행(개소) (10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포함)	4	5	49	50	58
	실버취업박람회개최	14회	15회	16회	5개소	
	목표달성률(%)	80.0 87.5	93.8 100.0	98.0 100.0	100.0 83.3	100.0

〈표 2-96〉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최종예산(억원)	410.0	441.8	502.7	473.0	441.0
	예산집행률(%)	90.2	94.8	99.1	96.4	99.1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최종예산(억원)	27.0	32.0	18.0	28.0	18.0
	예산집행률(%)	70.4	87.5	83.3	89.3	72.2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최종예산(억원)			130.0	160.0	160.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최종예산(억원)	11.0	11.0	13.0	18.0	41.0
	예산집행률(%)	90.9	106.4	92.3	100.0	100.0

#### ④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 준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기관 평가 시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관 평가 시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평가실시기관 중 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이 9.5%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평가실시기관 중 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이 2006년 6.6%, 2007년 10.0%, 2008년 8.9%, 2009년 9.1% 등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7〉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준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부실훈련기관 퇴출비율(%)	6.6	10.0	8.9	9.1	9.5
	목표달성률(%)	89.2	142.9	136.9	140.0	105.6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준고령자 직업훈련과정 개발(개)	10	10	10	10	-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

〈표 2-98〉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준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최종예산(억원)	7.0	9.0	14.0	14.0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최종예산(억원)	7.4	7.4	0.83	11.9	
	예산집행률(%)	100.0	100.0	94.0	88.2	

## 수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 개선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친화적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최고 10억원 용자, 금리 3%,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지원 사업장수가 23개소로 목표의 63.9%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6억원 전액 집행).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지원 사업장수가 2006년 11개소, 2007년 13개소, 2008년 25개소, 2009년 29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목표달성률이 낮은 이유로는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용자 지원 사업장 수 목표치가 사업장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잡은 것으로, 용자지원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23개소 밖에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노동부에서는 중고령자의 신체적 능력 및 신경행동기능을 고려한 안전 보건 재해예방 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근로자 관련 재해사례, 안전작업수칙, 근골격계질환, 뇌 심혈관계질환 등을 위주로 재해예방 자료 및 가이드라인 2종을 보급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2억원 전액 집행).
- 2006년부터 매년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99〉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지원 사업장수	11개소	34억원	25개소	29개소	23개소
	목표달성률(%)	220.0	80.2	58.1	96.7	63.9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자료개발 보급 실적	1건개발	1건개발	1종보급	12종보급	2종보급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20.0	200.0

〈표 2-100〉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최종예산(억원)	50	43	43	50	36
	예산집행률(%)	38.0	80.2	95.3	100.0	100.0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최종예산(억원)	0.3	0.4	0.1	0.3	0.2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①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 □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법무부에서는 우수동포인력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확대함으로써, 우수동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재외동포(F-4)자격 국내체류자수가 81,262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에산사업).
- 2006년 방문취업(H-2) 신설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을 일부개정(익년 1월), 2007년 방문취업(H-2)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제정, 2008년 방문취업제 개선 및 재외동포(F-4)자격 확대<sup>22)</sup>, 2009년 재외동포(F-4)자격 추가확대<sup>23)</sup> 등을 추진
- 그 결과 재외동포자격 국내 체류자수가 2008년 41,700명에서 2010년 81,262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의 경우 12월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통과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방문취업사증 발급 및 자격변경 처리 건수가 0으로 나타남.

□ 외국적동포의 체류 지원

- 법무부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요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외국적동포의 체류 및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동포체류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 상담건수가 38,741건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12억원 전액 집행).
-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 상담건수가 2008년 6,287건에서 2010년 38,741건으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단순노무분야에서의 동포입국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포인력에 대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개선하고자 하였음.
- 방문취업사증 발급 건수와 방문취업사증 자격 변경 건수, 기존 방문취

22) 중국·구소련 국적동포 중 전문인력 등

23) 동포로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 대표, 4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법인가업체 관리직,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업자격자수를 합한 방문취업자격동포 국내체류자수가 2009년 306,658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10년에는 288,488명으로 목표의 95.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력 적정규모도입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노동부에서는 국내 경제전망 및 노동시장,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내국인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초 적정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설정·관리하고, 동포에 대한 취업인원을 설정하고 합법적인 취업절차를 통한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을 예방하는 등 국내노동시장과 조화되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8년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2009년과 2010년에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표 2-101〉 외국인력 동포의 인력 활용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적 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재외동포(F-4)자격 국내체류자수			41,700	49,786	81,262
	방문취업사증발급·자격변경처리 건수(명)		215,990	299,300 (채류자)		
	목표대비 자진출국동포(명)	25,517				
	목표달성률(%)	85.1	270.0	113.3 130.1	123.0	147.7
외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	외국적동포체류지원상담건수(건)			6,287	23,300	38,741
	체류자격외활동자·동포유학생		114			
	목표달성률(%)		95.8	523.9	1618.1	138.6
	최종예산(억원)		-	-	0.5	0.12
외국인력 적정도입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예산집행률(%)		-	-	100.0	100.0
	방문취업자격동포국내체류자수				306,658	288,488
외국인력 적정도입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목표달성률(%)				121.2	95.2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여부				완료	완료
	목표달성률(%)				100.0	100.0



## ②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제도 개선,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초청장학생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적자원을 양성·활용하고, 대학체제 개선 및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유학 안내시스템 운영, 국외에서 한국유학박람회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유학생 수가 83,842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20.9억원 전액 집행).
  - 외국인유학생 수가 2006년 32,557명에서 83,842명으로 증가하여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World Class Institute센터<sup>24)</sup> 구축 및 Brain Pool사업<sup>25)</sup>을 통해,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제고 및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1억원 당 논문(공동연구)건수가 0.5917건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34억원 전액 집행).
  - 외국과학자 초청 지원인원이 2006년 480명, 2007년 355명, 2008년 341명, 2009년 1억원당 논문건수 0.5671건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사증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제공

- 법무부에서는 유학생(D-2), 외국인투자자(D-8) 및 전문직업(E-1~E-7)

24) 출연(연)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25) 연구현장에 우수한 해외연구자를 초빙·활용하여 최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사업

자격소지자 등의 국내 체류 및 취업절차를 개선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평균 사증발급인정서발급기간이 8.65일로 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증가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0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해외우수인력 유치 활동강화(외국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수(명)	32,557	49,270	63,952	75천	83,842
	목표달성률(%)	131.4	140.8	116.3	107.1	104.8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강화(국제연구인력)	1억원당논문(공동연구)건수				0.5671	0.5917
	지원인원수(명)	480	355	341		
	목표달성률(%)	166.7	133.0	189.4	103.3	107.9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제공	평균사증발급인정서발급기간					8.65일
	전문외국인력체류자수증가율(%)		18.0	12.3	1.6	
	목표달성률(%)		600.0	410.8	54.0	97.1

〈표 2-103〉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유학생유치)	최종예산(억원)	45.9	51.0	201.1	245.2	520.9
	예산집행률(%)	93.9	100.0	69.1	93.8	98.4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국제연구인력교류)	최종예산(억원)	100	92	43	134	134
	예산집행률(%)	99.0	100.0	100.0	100.0	100.0

### ③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등에 인력난 해소 및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허가 개선, 법무부·노동부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고용변동신

고 통합 추진 등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7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단순노무 외국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과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목표 달성)
- 2008년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 거주(F-2)자격 변경지침 시행, ‘출입 국지원 대행기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 목표 73% 달성(지침은 개정 완료했으나 법 개정은 작업 중)
- 2009년 ‘단순노무외국인력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비전문취업(E-9)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통합관련 회의 개최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관련 검토 의견 노동부 송부 등(목표 달성)
- 이와 같이,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노동부)

-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단계별 고용·체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2004)에 따른 불법체류 등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여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음.
- 2010년에 외국인력 구직자 기능테스트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2006년과 2007년에 관계부처 협의, 2008년에 외국인력 선발기준으로 한국어시험 이외 구직자기능테스트의 법적 근거 마련, 2009년에 기능테스트 실시 및 기능인력 도입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기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체류지원 및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건수 56만명, 교육이수 21만명, 센터이용자 만족도 86.6%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2억원의 96.2% 집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개소, 2008년에 2개소, 2009년 3개소를 설립하였으며,
- 상담건수는 2009년 153,825명에서 2010년 56만명, 교육이수자는 5.7만명에서 21만명, 센터이용자 만족도는 81.0%에서 86.6%로 증가하는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0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출입국관리법 지침개정		법령, 지침개정	지침개정	지침개정	지침개정, 지시
	목표달성률(%)		100.0	73.0	100.0	100.0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기능테스트 실시				1회이상	2회
	지원인프라(협의회)확충				구성	개최
	특정분야 기능인력도입				도입	
	고용허가제 부처협의	12회	4회	1)		
	목표달성률(%)	600.0	200.0	1)	100.0	200.0 100.0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노동부)	센터 상담건수(명)				153,825	56만
	센터 교육 이수자수(명)				56,917	21만
	센터 이용자 만족도(%)				81.0	86.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개소	1개소	2개소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2.6 189.7 95.2	311.1 600.0 101.9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법무부)	재한외국인 고충처리건수	11,810	11,054	21,242	24,313	24,116
	불법체류율(%)	23.3	20.9	17.3		
	권익증진협의회 운영건수	88	79			
		114.4 98.7 27.5	97.4 105.3 65.8	157.4 118.5	122.2	94.5
	목표달성률(%)					

주: 1) 인력부족 업종별고용확대방안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상정성과 사전심의 및 정책위원회 결정, 외국인력 종합통계조사 추진안 마련 실무협의(조사수행, 91.4%), 외국인력 도입기간(76.6일), 한국어 시험기관(일원화), 불체자감소대책 수사화(4회), 방문취업제도 개선방안(국회제출), 전문외국인력 통합관리 체계(포럼, TF, 입법예고) 등 통계조사를 제외한 모두 100% 달성

〈표 2-105〉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최종예산(억원)	48	69	73	123	52
	예산집행률(%)	93.8	91.3	84.9	76.4	96.2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1.1	1.1	비예산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94.4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의 고충해결,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고충상담관제, 인권담당관제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재한외국인 고충처리건수는 24,116건으로 당초목표의 94.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재한외국인 고충처리건수가 2006년 11,810건에서 2010년 24,116건으로 증가하고, 불법체류율이 2006년 23.3%에서 2008년 17.3%로 감소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통상적인 고충사항은 자체의 고충처리노력으로 해결하였으나,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상정되는 사건은 통상의 체류관리지침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안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권익증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④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종합민원 서비스체계 구축(외국인종합안내센터)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언어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06년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전화상담실 설치, 2007년에 ‘이민행정콜센터’ 그리고 2008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개편

- 2010년에 3차 통역서비스를 위해 서울시다산콜센터와 통계청간 MOU를 체결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8.2억원 전액집행).
  - 세계인의날 주간 외국인관련 행사 개최(2007년 1회, 2008년 115회), 콜센터 통화성공률(2007년 82%, 2008년 93.0%), 결혼이민자 사랑방 개설(2007), 2백만건 전화상담 제공(2009)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에게는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내국인에게는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체육여건 및 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실시, 이주민 다문화 축제, 외국인 노동자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주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2010년 예산 18억원 전액집행).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교과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sup>26)</sup>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한국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유네스코 이념전파를 위한 ASPnet간 협력활동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 2010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및 유네스코 협동학교 대상 학교 352개교로 2006년 222개교에서 상당수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억원 전액집행).
  -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

26)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학교현장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생의 지역사회활동 참가 및 아태지역 협력사업 추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 참여 TV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외국인참여 TV프로그램을 20편만 제작하여 목표의 76.9%를 달성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2006년 Hand in Hand 26편 제작 및 17회 방송, 2007년과 2008년에 Hand in Hand 각각 52회 방송, 2009년 All Together 26편 제작 및 43회 방영 등 2009~2010년에만 사업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음.
  - 이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거부 및 방송노출 회피 등에 기인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자녀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강화, 결혼 전 사전정보제공, 배우자교육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15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1,234,670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97억원 대부분 집행).
  - 2009년에는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707천명이 이용하였으며, 21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06〉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3자 통역서비스 업무협약					MOU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실적(건)				2,041,190	
	세계인의날 주간 행사 횟수		1회	115건		
	콜센터 통화성공률(%)		82	93		
	결혼이민자 사랑방 개설수		1개소			
	목표달성률(%)		100.0 164.0 100.0	115.0 132.9	168.1	100.0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다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수					100개
	어울림 생활체육 캠프 운영	7,784명	8,811명		16개소	15개소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개수				25개	28개소
	이주민대상 한국어교육개소	17개소	18개소	34개소	20개소	
	이주민대상 한국어교육 인원			800명	587명	
	이주민 다문화축제 참여인원		4만명	5만명		
	이주민 다문화축제 만족도		80%	75.7%		
	외국인노동자생활체육대회 참여			5천명		
	이주노동자 축제 및 문화가이드북제작	7언어 35천부				
	목표달성률(%)	137.5 94.4 100.0	146.9 81.8 114.3 106.7	170.0 133.3 125.0 100.9 83.3	160.0 166.7 100.0	100.0 93.8 254.5
외국인인식전환 대국민교육·홍보강화 (교과부)	문화교실대상학교수	118	187	220	352	352
	유네스코협동학교 대상학교	104	91			
	목표달성률(%)	118.0 104.0	187.0 91.0	110.0	140.8	100.0
상동(문체부)	외국인참여 TV프로그램 제작	26편	52회	52회	60.5%	20편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60.5	76.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707천	1,234,670
	방문교육대상 가구수				21천	
	목표달성률(%)				103.1 131.3	174.5

〈표 2-107〉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최종예산(억원)	2.0	9.7	24.3	18.9	18.2
	예산집행률(%)	100.0	78.4	92.5	100.0	100.0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최종예산(억원)	16.0	21.5	15.8	15.8	18.0
	예산집행률(%)	100.0	100.0	93.0	87.3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대국민교육·홍보강화(교과부)	최종예산(억원)	1.9	1.9	1.7	1.6	2.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최종예산(억원)				393.3	497.0
	예산집행률(%)				99.1	99.8

- 이상 성장동력분야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08〉 2010년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 제도 개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 중·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제의 조기정착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외국인근로자 채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채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채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표 2-109〉 2010년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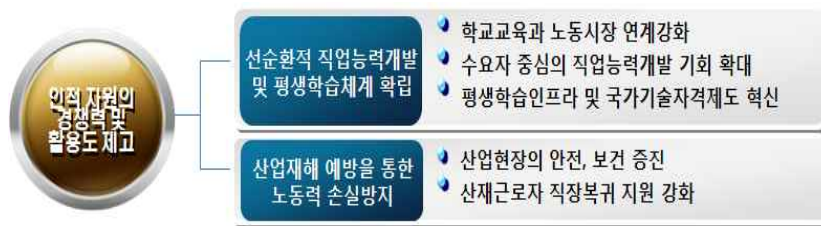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 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 제화 및 장년제도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중고령자 작업능력 개발 지원	•준.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	
1-3. 외국인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는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의 2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구성



###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진로개발 역량요소를 추출·체계화하고 이들 역량요소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교별 진로교육 제공 수준의 편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진로교육 매뉴얼 3종을 개발하여(학부모용, 초·중학교용)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1종이 완료되었으며, 당초 목표하였던 진로개발 표준모델은 완료되지 못하였음.
  -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마련(2010년 발표) 중으로, 이 계획 내에 ‘진로교육

운영 지침 개발 내용을 포함하여 차년도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 2010년도에 진로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업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와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한 현장 직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개발교재 활용대학의 교원만족도가 82점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5억 전액 집행).
- ‘학사제도개선 시범전문대학’으로 2006년 5개 대학, 2007년 8개 대학, 2008년 16개 대학, 2009년 14개 대학을 지정하고 신개념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등 혁신프로그램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보급하였음.
- 그 결과 개발교재 활용대학의 교원만족도가 2007년 75점, 2009년 69점, 2009년 82점, 2010년 82점으로 모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노동부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직업현장을 연계한 고용지원센터의 현장학습 프로그램(Job School)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자신감 제고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Job School과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35,433명(11월말 기준)이며, 이들 참여자의 만족도는 88.3점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8억원 중 92.9% 집행).
- Job School의 경우 2006년 중·고생 10,990명, 2007년에는 14,755

명(284회 운영), 2008년 18,914명(308회 운영)이 참여했으며, 취업 캠프의 경우 2006년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4,085명, 2007년 8,574명(108회 운영), 2008년 9,396명(179회 운영)이 참여하였음. 2009년과 2010년에는 Job School과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각각 37,069명, 35,433명(11월말 기준)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는 2006년 86점, 2007년 91.4점, 2008년 95.3점, 2009년 94.3점, 2010년 88.3점으로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10〉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 및 진로교육 운영지침 개발	진로교육 매뉴얼 관련 정책연구				0종 보고서	3종
	목표달성률(%)				0.0 100.0	300.0
	개발교제 활용대학 교원만족도(점)		75	69	82	82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직업교육혁신프로그램 보급대학	5개	8개	16개		
	직업교육혁신프로그램 만족도(점)		82.39	76		
	혁신프로그램 개발실적	16개				
	목표달성률(%)	100.0 106.7	125.0 100.0 137.3	109.5 160.0 120.6	126.2	126.2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강화(고용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6	91.4	95.3	94.3	88.3
	목표달성률(%)	172.0	152.3	158.8	157.2	110.4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직업정보 작업지도간행물 발간횟수				13개	10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건수	5종	10종	2종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433.3	333.3

〈표 2-1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최종예산(억원)	6	6	5.5	2.5	2.5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최종예산(억원)	15	20	18	30	28
	예산집행률(%)	100.0	94.5	94.4	93.3	92.9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최종예산(억원)	38	49	50	49	46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노동부에서는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청년층의 진로인식 부족 및 고용불안에 따른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직업진로지도로 체계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청년층의 진로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 가능성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구직자에게 필요한 내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 간행물을 10개 발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6억원 전액 집행).
  - 2006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5건, 2007년 10종(직업지도담당자 1,250명 전문교육), 2008년 2종(1,216명 교육) 개발, 2009년 청소년, 대학생, 청년층, 이주여성 등 다양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13개 발간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재직자 및 실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실업자(신규 전직실업자, 새터민, 지역실업자, 자활대상자, 영세자영업자)와 재직자 총 4,493,763명(실업자 285,453명, 재직자 4,208,310명)에게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 수강지원금, 직업능력개발카드, 학자금 지원·대부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목표를 대체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0,262억원 중 97.3% 집행).
  - 직업훈련 지원자가 2006년 3,043,580명, 2007년 3,988,235명, 2008년 4,106,532명, 2009년(10월 기준) 4,221,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매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

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직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문대학에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전문대 졸업, 산업체 근무,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사학위 취득)’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직근로자, 실업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신입생 모집 결과 등록률이 49.8%(4,840명)이고, 2011학년도 83개 대학, 399개 학과, 정원 9,715명의 전공심화과정을 인가하였음. 그 결과 전문대학 재적생 중 26세 이상 학생 비율이 12.6%,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8점으로 당초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5억원 전액 집행).
- 2006년 고등교육법 개정, 2007년 시간제 등록제, 특별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503명이 참여하였고, 2008년 65개 대학 209학과에서 6,735명(등록률 43.3% 그리고, 2009년에 6,735명(등록률 43.3%)을 모집하였음.
- 그 결과 전문대학 재적생 중 26세 이상 학생 비율이 2007~2010년 동안 13% 내외로 나타났으며,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2007년 73.2점에서 2008년 76점, 2009년과 2010년 90.8점으로 높아져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sup>27)</sup>,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sup>28)</sup>,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sup>29)</sup>을 통해 중소기업

- 
- 27) 기업·공공훈련기관·사업주단체·대학 등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용의 일부 지원
  - 28) 학습조직화 활동(학습조활동지원, 학습공간 구축, 우수활동 지원, 학습네트워크 기반지원, 학습조직화코칭,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현장학습 프로그램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29) 비용부담 등으로 수감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 102개소,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317개 기업,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정도 87.2점 등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982억원 전액집행).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은 2006년 57개소에서 2007년 70개소, 2008년 83개소, 2009년 95개소, 2010년 10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는 2006년 112개, 2007년 243개, 2008년 263개, 2009년 308개, 2010년 317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정도는 2009년 88.4점, 2010년 87.2점으로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고용부)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64.6	56.9	47.9	57.0	33.4
	기능사 양성훈련 계획 대비 양성인원(%)	7,565명	6,271명	101.9	105.9	90.8
	새터민직업훈련 취업률(%)	27.6	26.3	32.9	32.4	21.8
	우선선정직종훈련 훈련생 만족도(점)			3.88	78.6	82.3
	우선선정직종훈련 취업률(%)	75.4	75.5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참여율(%)	34.1	39.5	42	45.5	41.9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수혜자 만족도					88.0
	근로자 학자금 계획 대비 지원 인원(%)			128.2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계획대비 대부인원(%)	85.9	76.5	105.0	97.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인원(명)				361,35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율(%)				86	
	비정규직근로자 훈련참여건수(건)		12,238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43.1	
	자활직업훈련 취업률(%)	37.7	30.0	25.6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43.8	50.0	55.2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취업률(%)			48.5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7.8		
	목표달성률(%)	138.3	104.8	99.8	123.1	71.7 100.9 80.7 104.3 97.7 110.0
		92.6	90.6	113.2	117.7	
		98.6	114.3	113.4	122.3	
		125.7	109.8	112.6	100.5	
		103.3	113.8	134.9	105.1	
		90.4	80.4	110.5	103.1	
		183.9	61.2	111.3	101.9	
		91.3	106.4	149.2	107.5	
			133.3	105.9	114.3	
				156.0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전문대학 재학생 중 26세이상 학생비율(%)		13.0	13.4	13.3	12.6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점)		73.2	76.0	90.8	90.8
	성인대상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22,503				
	목표달성률(%)	346.2	113.6 128.4	108.7 126.7	102.3 104.3	96.9 104.3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수(개소)				95	102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업무능력향상도(점)				78.5	86.6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업무능력향상도(점)				88.4	87.2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	13.5	18.3	21.5		
	목표달성률(%)	122.7	107.6	126.5	108.0 104.7 117.9	100.0 108.3 109.0

〈표 2-11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고용부)	최종예산(억원)	7,866	9,013	9,818	12,125	10,262
	예산집행률(%)	98.0	97.9	96.1	93.3	97.3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0.5
	예산집행률(%)					100.0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최종예산(억원)	706	1,017	984	1,256	982
	예산집행률(%)	92.8	98.8	95.6	96.8	100.0

### ③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고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인정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전면개통하고,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실시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이력 관리 인원수가 15,409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7.5억원 전액집행).
- 2009년에는 평생교육법령 개정 및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계획 수립,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가개통으로,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학습자수

가 10,149명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14〉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만족도(%)			76.4	66.2	
	전국평생학습참여율(%)	35	29.8			
	인증참여 기관수(개소)	85	107	124	137	
	목표달성률(%)	140.0 100.0	100.0 107.0	101.9 124.0	87.9 124.5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 인원수(명)				10,149	15,409
	목표달성률(%)				203.0	154.1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실시 확대				전국실시	
	목표달성률(%)				100.0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자격종목정비 및 자격분류체계 개편			시행규칙 개정		
	출제기준 정비				47종목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개편(회)		88	70	55	
	실기시험장 인증제 및 실기검정 컨소시엄 도입		194종목			
	실기시험장 인증제 확대			18종목	29기관	
	Q-net과 HRD-net 연계 및 보완			자격종합 정보망오픈	자격훈련 종합정보 서비스제공	
	목표달성률(%)		100.0 646.7	100.0 350.0 81.8 100.0	120.5 275.0 116.0 100.0	

〈표 2-115〉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최종예산(억원)	55.5	78	92.1	329.3	
	예산집행률(%)	100.0	100.0	99.5	100.0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최종예산(억원)				9.1	7.5
	예산집행률(%)				100.0	100.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최종예산(억원)				738.8	
	예산집행률(%)				77.2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최종예산(억원)		96	51.6	2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 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사고성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유해공정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특화된 방식의 사업장 방문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클린사업용자 등 재정지원 및 안전검사 무료지원(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산업재해를 감소율이 36.3%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650억원 전액집행).
- 산업재해율감소율이 2006년 23.5%, 2007년 27.2%, 2008년 34.6%, 2009년 1.56%, 2010년 36.3%로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사망재해 및 재해다발업종, 조선업, 대규모 건설현장 등 재해취약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감독 및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사고성 사망판인율이 0.97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프로그램 운영, 중점·특별관리 사업장대상 지방관서 점검 및 안전공단 기술지원 실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SOC나 2,200억 이상의 건설현장 대상 「자율재해 예방 프로그램」 심사·평가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취약시기대비 안전 점검 실시, 건설안전패트 점검, PSM 이행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 구체화, 이행수준 평가 및 사업장 차등관리,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여 사

고성 사망만인율이 0.91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노동부에서는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 및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개선, 화학물질의 분류·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 자료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 등을 통해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10년에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0.97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대 다발작업 점검 사업장수는 2006년 3,602개소 및 2007년 3,813개소, 취약시기 점검 사업장수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2,871개소,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08년 0.96, 2009년 0.91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노동부에서는 유해인자의 허용기준제도 도입,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국제수준으로 제고(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인 GHS 도입, 웹으로 제공하는 MSDS 관련 정보를 GHS기준으로 최신화)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800종의 MSDS정보를 GHS기준에 맞추어 최신화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1억원 중 95.2% 집행).
  - 2006년 화학물질(86종) 노출기준 제·개정
  - 2007년 노출기준 제·개정 완료 및 교육·홍보·설명회, 산업안전보건법에 허용기준제도 및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등
  - 2008년 화학물질(42종) 노출기준 개정 및 화학물질·물리적인자의 노

출기준 고시, 교육·홍보(설명회), 허용기준제도 시행령 개정(허용기준 대상 13종 물질 선정), 시행규칙 개정(허용기준농도 마련) 등

- 2009년 GHS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에는 1,314종, 2008년 5,000종, 2009년 5,000종, 2010년 1,800종의 MSDS 정보를 GHS 기준에 맞추어 최신화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산업단지 내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직접적인 산업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및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자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1,500개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2,036개소,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지원 201개소, 583개소 사업장 건강지킴이사업 실시 등을 통해, 뇌심혈관 질환자 감소율이 11.1%, 근골격계 질환자 감소율이 11.7%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7억원 전액집행).
-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지원 2006년 1,504개소, 2007~2009년 각각 1,500개소,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2006년 1,510개소, 2007년 1,329개소, 2008년 1,805개소, 2009년 1,837개소 등,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지원 2009년 220개소, 2007년부터는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 1개소 설치·운영, 2008년 사업장 종합건강관리지원 314개소, 2009년 321개소의 사업장 대상 통합 건강증진사업 1,225회 등을 추진한 결과,
- 뇌심혈관질환자 감소율이 2006년 65.2%, 2007년 73.13%, 2008년 17.7%, 2009년 49.1%, 2010년 11.1%, 근골격계 질환자 감소율이 2006년 60.1%, 2007년 86%, 2008년 14.9%, 2009년 9.5%, 2010년 11.7% 등으로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

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16〉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세작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개선	전년대비 산업재해율 감소율(%)	23.5	27.2	34.6	1.56	36.3
	목표달성률(%)	78.3	110.3	115.3	104.0	121.0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사고성 사망만인율			0.96	0.91	0.97
	사업장20대다발작업 점검사업장수(개소)	3,602	3,813			
	취약시기 점검 사업장수(개소)	2,871	2,871			
	목표달성률(%)	120.1 114.8	127.1 127.6	102.1	109.9	101.0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물질안전보건자료정보 웹사이트제공중				5,000	1,800
	허용기준제도 홍보, 하위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홍보		법령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홍보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개정, 홍보	고시개정, 홍보	고시개정, 홍보	노출기준 개정		
	목표달성률(%)	100	100.0 100.0	100.0 100.0	125.0	12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전년대비 뇌심혈관질환자 감소율(%)	65.2	73.13	17.7	49.1	11.1
	사업전후 건강수준 향상율(%)					11
	전년대비 근골격계질환자 감소율(%)	60.1	86.00	14.9	9.5	11.7
	사업참여자수 대비 흡연자감소율(%)			16.6	22.9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목표달성률(%)	931.4 2003.3	1044.7 2866.7	177.0 149.0 166.0	491.0 95.0 229.0	111.0 110.0 117.0
	사업주안전의식점수, 전년대비제고율	5%	3.42점	3.50점	4.3%	3.51점
	근로자안전의식점수, 전년대비제고율	6%	2.97점	3.19점	4.2%	3.22점
	목표달성률(%)	50.0 60.0	83.8 83.9	93.1 97.9	86.0 84.0	91.6 97.6

〈표 2-117〉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세작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최종예산(억원)	1000	1,095	1,100	840	650
	예산집행률(%)	100.0	99.1	100.0	100.0	91.9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최종예산(억원)	65.0	63.6	63.3	6.0	2.1
	예산집행률(%)	98.5	92.9	97.0	93.3	95.2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최종예산(억원)	71	76	76	9	27
	예산집행률(%)	90.1	99.9	98.6	96.7	97.0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최종예산(억원)	97	61	66	48.2	60.9
	예산집행률(%)	100.0	96.9	100.0	100.0	100.0

####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노동부에서는 노사 산재예방활동 및 학교안전문화 지원을 통해 산업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와 우리사회 산업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TV·라디오 캠페인, 신문 광고, 전광판 광고, 온라인 캠페인, 안전교육시범학교 운영, 안전운동 민간단체 지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 결과, 업주 안전의식점수는 3.51점 및 근로자 안전의식점수는 3.22점으로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60.9억원 전액집행).
- 사업주의 전년대비 안전의식 제고율이 2006년 5%, 2009년 4.3% 증가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율이 2006년 6%, 2009년 4.2% 증가하였음. 사업주 안전의식 점수는 2007년 3.42점에서 2008년 3.5점, 2010년 3.51점으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안전의식 점수는 2007년 2.97점, 2008년 3.19점, 2010년 3.22점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목표달성률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노동부에서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금액(1~3급 600,000원, 4~9급 450,000원)을 1년간 지급하며, 원직장복귀자에게 직장적응훈련(월 45만원 이내) 또는 재활운동(월 15만원 이내)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실비를 3개월까지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828명 대상 2,604백만원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율(1년 이상)이 84.2%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50억원 중 52%만 집행하였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지원 대상인 원직장 복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임).

- 2006년에 고용유지기간을 당초 1년에서 6월로 완화, 지급시기를 1년 후 일시불에서 고용후 익월로 개선, 직장적응훈련 재활동동을 지원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지속적인 홍보 실시 등 추진
- 2006년에 554명(2,780백만원), 2007년 630명(2,906백만원), 2009년 647명(3,130백만원) 지원 등을 통해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2006년 83.4%, 2007년 84.7%, 2009년 83.2%, 2010년 84.2%, 2008년 원 직장복귀율 34.9% 등으로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노동부에서는 산재 요양종결 후에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자에게 훈련비(1인당 600만원 이내)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창업시에는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연 2% 최장 6년간) 하여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직업훈련수료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율 70.6%, 산재장해인 창업지원자 목표소득 달성율 108% 등으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49억원 중 86.6% 집행).
- 산재장해인 직업훈련 수료자 중 직장복귀자 비율이 2006년 52.9%에서 2010년 70.6%로 증가하고, 산재장해인 창업지원자 목표소득 달성률이 2006년 68.0%에서 2009년 111.4%로 증가하는 등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노동부에서는 산재환자 및 산재장해자를 대상으로 심리불안 해소와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욕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직장) 복귀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강화를 통해 직업배치율이 62.0%로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30억원 중 96.7% 집행).
- 2008년 직업배치자 증가율 14.3%, 2009년 직업배치율 58.0%, 사례관리지수는 2007년 7,326명, 2008년 8,105명, 2009년 8,454명 등으로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1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유지율(%)	83.4	84.7		83.2	84.2
	원직장복귀율(%)			34.9		
	목표달성률(%)	111.2	105.9	99.7	101.1	100.4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수료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율(%)	52.9	61.9	67.9	65.3	70.6
	산재장해인 창업지원자 목표소득 달성율(%) ('06~'08년: 창업성공률)	68.0	75.3	75.0	111.4	108
	목표달성률(%)	120.2 90.7	134.6 100.4	124.4 97.3	93.3 111.4	108.6 108.0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직업배치율(%) ('08년:직업배치자증가율)			14.3	58.0	62
	사례관리지수(명)		7,326	8,105	8,454	
	목표달성률(%)		99.4	95.3 109.6	108.4 108.9	103.9

〈표 2-11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최종예산(억원)	31.0	29.0	28.0	42.0	50.0
	예산집행률(%)	90.3	102.1	100.0	73.8	52.0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최종예산(억원)	215.0	223.0	221.0	167.0	149.0
	예산집행률(%)	93.0	154.7	87.8	99.4	86.6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비예산	12.0	10.0	30.0
	예산집행률(%)			91.7	90.0	96.7

- 이상 성장동력분야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20〉 2010년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노동부)				○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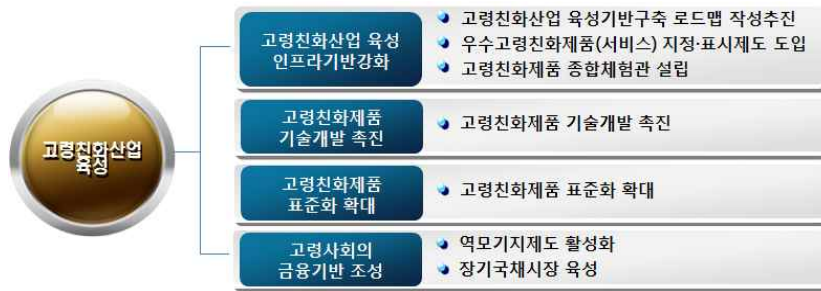
〈표 2-121〉 2010년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 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 운영자집 개발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직 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노동부)				○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등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1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동법의 시행령 제정·시행,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관련 각종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우수사업자(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13개 과제를 지원하는 등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에산사업).
-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2007년 시행령 제정, 2008년 고

령친화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2009년 고령친화제품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에서 KS 등 공인 규격의 인증제품으로 확대 등 개선사항 1건 추진을 통해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웹DB를 구축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우수제품(16개 품목) DB를 구축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http://www.esenior.or.kr)) 방문건수가 257,728건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는 제품의 정보 및 시장 현황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용구 정보시스템을 확대하여 구축·운영(22만여명 방문)하였으며, 복지용구 정보마당 홈페이지 리뉴얼 등 시스템을 확장함으로써 522개의 제품을 DB에 등재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2〉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친화산업육성 기반 구축	고령친화우수사업자(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운영기준 마련					운영기준(안) 마련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10개 과제 지원					13개과제 지원
	성과지표 및 실적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정	연구용역 실시(1건)	개선사항 1건 추진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30.0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및 복지용구 정보제공 건수				DB에 522개 제품등재	방문자 257,728건
	목표달성률(%)				116.0	106.5
고령친화산업 통합DB 개발 및 구축(지경부)	산업정보 DB 구축수				2,198건	
	목표달성률(%)				73.3	
	최종예산(억원)				0.4	
	예산집행률(%)				100.0	

## ②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5개 품목으로써 KS 등 공인된 규격을 인증 받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 공고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노인용 신발과 세발기의 2개 품목에 대해 표준개발·보급 및 우수제품 지정제도 품목으로 포함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우수제품 품질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안) 마련, 2007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및 지정기관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요건고시 및 공모 실시, 2008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표시제도 도입으로 15개 품목 고시 및 296개 우수제품 지정·공고, 2009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297개 제품 지정·공고 및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으로 2개 품목 지정·고시하여,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경우 당초 우수 제품만이 장기노인요양보험 급여 품목으로 가능하였으나, KS 등 모든 규격 인정 제품으로 완화됨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다소 저조하였음.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서비스 평가 및 인증 등을 통해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소비자 보호와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우수사업자 지정 기준을 개선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고령친화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에 포함되어 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지정기준안을 마련하고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표 2-123〉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제품·서비스표준 확대수					2
	우수품목 지정확대				2개 품목	
	우수제품 지정확대			296건	297개 제품	
	성과지표 및 실적	제도(안) 마련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시행령제정			
	목표달성률(%)	100.0	200.0	1,184.0	66.7 77.3	100.0
	최종예산(억원)	0.2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성과지표 및 실적				시범운영사업 20개소지정	기준개선(1),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목표달성률(%)				100.0	100.0

### ③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설립하여 수요기반을 확산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참관객 수가 8만명, 교육훈련 참가자수 2,454명, 제품상담건수 4,681건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05억원 전액집행).
  - 2007년 고령친화종합체험관 2곳(성남시, 대구시) 선정 및 사업시행 지자체 등과 협약 체결, 2008년 2곳 체험관 개관 및 광주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추가 선정, 2009년 3지역(성남, 대구, 광주)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구축·운영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24〉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7	2008	2009	2010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성과지표 및 실적	체험관 2개소 선정 및 구축 추진	체험관 2개소 개소	체험관 구축 및 운영	참관객수 8만명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33.3
	최종예산(억원)	71.6	172.1	133.5	105.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①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감안하여 장단기 핵심전략품목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제품산업분야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기업형 Omni-direction 이동보조기구 등 13개 과제의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4억원 전액집행)
  - 2009년에는 전동형 실내 이동, 승강의자겸용 장치 개발연구 등 재활보조기기를 포함하여 13개 과제의 고령친화제품 등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이 중·저위 기술에서부터 IT, BT 등이 융합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장·단기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용 Automated Home Care System 기술개발 및 IT 융합형 고령자 건강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과제 수행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18억원 전액집행).
  - 2006년에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및 실버 의류 실용화 구축사업 등 5개 과제 추진, 의학백과 등 고령층 콘텐츠 3종 신규개발, 치매 정보 등 기존 콘텐츠 4종 업그레이드, 센스리더 등 정보통신 보조기술 4종 개발 지원
  - 2007년에 9개 기업이 참여한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등 9개 과제 계속수행, 고령층 콘텐츠 3종 개발·보급(TV건강정보,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 소비자 이용정보), 정보통신 보조기술 4건 개발(V-pad,

이모티콘, b-pad, 바로토크), 소외계층을 위한 u-Health 서비스모델 2건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2008년에 21개 기업이 참여한 실버의료기기 핵심 기술개발, 고령친화형 사상체질진단기 개발 등 7개 과제 추진, 고령층 콘텐츠 2종 개발·보급(건강 체조, 노인 정신건강), 정보통신 보조기술 4건 개발(트랙볼이 장착된 키보드, 매직마커를 이용한 노터치 키보드, 마우스, CLURD 한손키보드,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
- 2009년에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 및 고령친화제품 단기실용화 기술개발 과제 등 계속사업 수행, 과제 수행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이와 같이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전략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확충하고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산업발전위원회와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1회씩 총 2회 운영하였으며, 고령친화 실태조사 및 분석, 고령친화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4회 개최, 고령친화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당초목표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0.1억원 전액집행).
- 2009년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우수품목 2개 확대, 297개 우수제품 지정, 550개 제품 DB 구축·등재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목표달성률은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상용화 기술지원, 선도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반구축 및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홍보체험관 제품전시 590종 실시, 산업체지원 98건, 유통지원 이벤트 6회, 62개사에 대한 박람회 참관지원, 3종의 시험인증 장비 구축, 고령친화용품 실습교육 15회 실시, 7회의 산업 및 단체표준 제정 등을 통해 목표 대부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6억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산업관련 정보DB를 2006년 830건(누계), 2007년 1,915건, 2008년 4,774건을 구축하고, 2009년에 홍보체험관 제품전시 590종, 산업체지원 97건, 유통지원 이벤트 20회, 93개사에 대한 박람회 참관지원, 10종의 시험인증 장비 구축, 고령친화용품 실습교육 6회 실시, 10회의 산업 및 단체표준 제정, 1건의 자립화 및 역할재정립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지역연고산업 진흥의 전략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동남권 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제품 제작지원 건수가 8건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8.2억원 전액집행).
  - 2006년에 충남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건양대), 부산 고령친화 u-Home Healthcare 산업 육성 지역혁신 체계 구축(부산대학 병원), 경기 u-Health Care 산업 클러스터 구축(경원대)을 추진하였고,
  - 2007년에는 기존 3개 지역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고령친화 기능성식품 및 노인 복지기기 개발, U-Healthcare 관련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및 지역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2008~2009년에 자립형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건양대), 동남권 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경성대), 한방실버웰니스산업 육성체계 구축사업(동의대)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시제품 제작지원 건수가 2006년 11건, 2007년 11건, 2008년

22건, 2009년 13건, 2010년 8건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 위주로 규모가 영세하고 마케팅이 미흡하여 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는 우수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와 현장 체험을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홍보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65천명으로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2006~2009년 동안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 제품이 2009년 245개에서 2010년 703개로 증가하였고,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009년 131천명에서 2010년 265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친화제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를 지원하고 국내 유통업체 MD 구매상담회 및 해외 수출상담회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요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46개 업체의 국내 전시회와 10개 업체의 해외 전시회를 지원하였으며,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업체와 1:1 구매상담회를 연계하였으나, 국내외 전시회 지원 업체수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억원 전액집행).
  - 2009년에는 국내외 총 8회의 박람회에 108개 산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업체와 1:1 구매상담회 연계를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5〉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복지용구우수제품 개발 등 R&D	기술개발지원 과제수				13개	13개
	목표달성률(%)				118.2	100.0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과제수행기업 매출액증가율				10%이상	15%이상
	기술개발 참여 기업(개)	10	9	21		
	고령콘텐츠 개발건수(종)	3	3	2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술개발(건)	4	4	4		
	u-복지정보통신인프라구축 서비스 모델건수		2건			
	목표달성률(%)	250.0 100.0 100.0	150.0 150.0 133.3 100.0	350.0 100.0 100.0	200.0	150.0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 (복지부)	고령친화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고령친화발전연구위원회					2회 개최
	정책포럼 운영					포럼 4회
	우수품목 확대				2개 품목	
	우수제품 확대				297개	
	DB 등재제품 확대				550개	
	목표달성률(%)				66.7 77.3 122.2	100.0 50.0 200.0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 (지경부)	홍보체험관 제품전시(종)				590	590
	산업채지원(건)				97	98
	유통지원 이벤트개최(회)				20	6
	박람회 참관지원(개사)				93	62
	시험인증 장비구축(종)				10	3
	고령친화용품실습교육(회)				6	15
	산업 및 단체표준제정(회)				10	7
	자립화·역할재정립전략수립				1건	
	고령친화산업관련 DB구축(건)	830	1,915	4,774		
	목표달성률(%)	103.8	239.4	367.2	178.8 121.3 333.3 93.0 100.0 150.0 100.0 100.0	147.5 108.9 100.0 62.0 100.0 750.0 100.0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구축	시제품 제작지원(건)	11	11	22	13	8
	목표달성률(%)	110.0	110.0	1,100.0	130.0	100.0
우수제품 전시 기회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개)				245	703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방문자				131천명	265천명
	고령친화산업관련업체 참여기업	103	85	106	102	
	목표달성률(%)	121.2	100.0	106.0	116.7 181.9 102.0	206.8 115.2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국내전시회 지원 업체수				108	46
	해외전시회 지원 업체수					10
	유통업체와 1:1 구매상담회 연계개				82	114
	목표달성률(%)				108.0 273.3	46.0 50.0 380.0

〈표 2-126〉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예산

사업명	예산	2006	2007	2008	2009	2010
복지용구 우수제품 개발 등 R&D	최종예산(억원)				20	24
	예산집행률(%)				120.0	100.0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최종예산(억원)	165.6	233.9	152.3	62.7	118.0
	예산집행률(%)	99.9	100.0	100.0	100.0	100.0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복지부)	최종예산(억원)				1.3	0.1
	예산집행률(%)				100.0	100.0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지경부)	최종예산(억원)	23.9	19.6	19.9	21.6	6.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최종예산(억원)	49.1	31.7	40.5	39.5	8.2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우수제품 전시 기회 확대	최종예산(억원)	0.4	0.4	1.1	1.4	비예산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최종예산(억원)				1	1
	예산집행률(%)				100.0	100.0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①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지식경제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 이용시설 관련 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생활안정성 확보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표준 제·개정 건수가 16건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1억원 전액 집행).
  - 표준 제·개정 건수는 2006년 5건, 2007년 6건, 2008년 10건, 2009년 16건 등 매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

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지식경제부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고령친화제품 관련 기술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 국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관련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비예산 사업).
- 2010년에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 문건 검토, 국가간 복지관련 제품의 표준 협력 강화 등 총 22건의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9년에도 22건의 활동이 추진되었으며, 2006~2008년 간에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27〉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표준 제개정 건수(건)	5	6	10	16	16
	목표달성률(%)	100.0	120.0	200.0	320.0	106.7
	최종예산(억원)	0.4	0.4	0.2	0.2	1.0
	예산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회의참석, 국제문건검토, 전문위원회, 국가간협력 건수(건)				22	22
	국제표준화동향의 국내기준에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①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금융위원회에서는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역모기지 상품을 약 2천 명에게 900억원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사업).
- 2006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및 역모기지 수요조사 및 상품 설계, 2007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정 설치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여, 역모기지상품으로 2007년 515명(44.4억원), 2008년 695명(230억원), 2009년(11월말) 1,058명(487억원)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28〉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주택연금 공급실적	주택금융공사법등 개정, 상품설계	시행령(규칙)개정 상품출시	230억원	487억원	900억원
	목표달성률(%)	100.0	100.0	147.4	160.7	136.4
	최종예산(억원)	비예산	100.0	70.0	30.0	비예산
	예산집행률(%)	-	100.0	90.0	100.0	-

## ② 장기국채시장 육성

### □ 초장기채 발행

- 기획재정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단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초장기채 발행을 통해 연기금 및 보험 등 민간의 투자수요와 정부의 재정조달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였음.
- 2010년에는 국고채 잔액의 평균 잔존만기가 5.19년으로 목표의 94.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비예산 사업).
- 2006년 장기국고채의 투자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도입 및 20년 만기 국고채 5.7조원 발행, 2007년 20년 만기 국고채 4.9조원 발행, 2008년 전년대비 9.5%, 2009년 전년



대비 9.4% 발행 등 매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29〉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초장기채 발행	국고채 잔액의 평균잔존만기					5.19년
	목표 대비 발행량	5.7조원	4.9조원	전년대비 9.5%	전년대비 9.4%	
	관련규정 등 인프라 개선	규정개정				
	목표달성률(%)	93.9 100.0	102.1	94.2	188.0	94.4

□ 이상 성장동력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2010년도 추진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30〉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지정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 고령친화제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장기국채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표 2-131〉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우수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 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지경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플러스센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 고령친화제품 국내의 마케팅 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장기국채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국민 인식 전환을 목표로 다각적인 정책(사업) 추진
  - 실천전략은 전략적 홍보·교육, 중앙·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3개 중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1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기본계획구조



### 1.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보건복지부는 TV, 주요 일간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 극복 홍보, 일·가정 양립의 수월성을 위한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및 출산장려 공동 캠페인 추진,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출산·가족친화적 태도 형성, 양성평등 의식 강화, 활동적인 노후생활 대비 등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저출산고령화관련 국민인식도가 79.1점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41억원 전액 집행).
    -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도가 2007년 61.5점, 2008년 58.1점, 2009년 81.4점 등 매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32〉 전략적 홍보·교육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략적 홍보·교육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도		61.5	58.1	81.4	79.1
	목표달성률(%)		106.0	99.3	138.0	123.6
	최종예산(억원)	9.0	27.0	25.8	22.0	41.0
	예산집행률(%)	100.0	89.1	95.4	100.0	100.0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간 정책공동체 구축

-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10년에 총 216개 단체(중앙 28, 지역운동본부 188)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필요한 과제를 중점 부각시키고 제1회 ‘아이낳기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여 민간기업 및 지자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등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26.8억원 중 98.5% 집행)
- 2008년에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저출산대책포럼 2회 개최, 2009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중앙 및 16개 시도에서 출범하여 국민운동을 추진할 전국적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계가 출산양육 지원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행동계획을 선언하는 등 매년 목표를 달성하여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사업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2-133〉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간 정책공동체 구축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8	2009	2010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간 정책공동체 구축	대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수	저출산대책포럼 2회개최	전국적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	216
	목표달성률(%)	100.0	100.0	108.0
	최종예산(억원)	0.3	비예산	26.8
	예산집행률(%)	100.0		98.5

###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통한 정책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로 각 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2008년부터 전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2010년 예산 0.8억원 중 92.5% 집행).

〈표 2-13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2009	20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결과 보고서 국회제출	제출	제출
	목표달성률(%)	100.0	100.0
	최종예산(억원)	0.8	0.8
	예산집행률(%)	92.5	92.5

#### □ 이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의 2010년도 추진 실적(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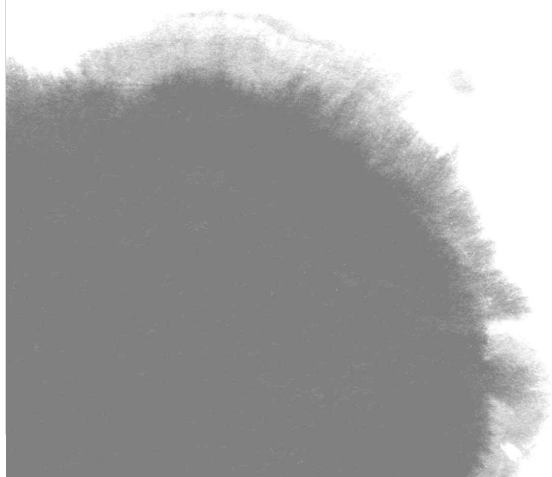
〈표 2-135〉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전략적 홍보 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표 2-136〉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전략적 홍보·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영역별 성과평가

###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분야는 3개 중영역, 8개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8개로 성과지표를 설정함(평가척도는 부록 참조).

〈표 3-1〉 저출산분야 성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1-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율
• 방과후학교 확대등 사교육비 부담경감지원	방과후학교 참여율(초, 중, 고)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목표치 대비 차액)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이행률(전년 증가율 대비)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차이
•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종일제 휴일형 보육시설 이용이동비율 증가율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 불임부부 지원	불임부부 지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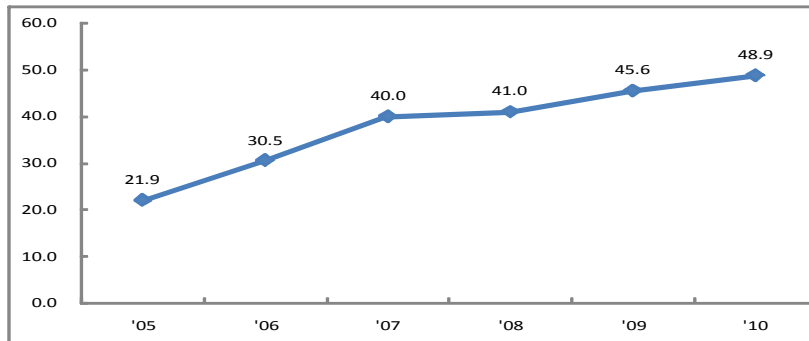
영역	성과지표
2. 일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강화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증감률
•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률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가율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지수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자녀필요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아동안전사고 사망율
•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가율
3-2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실적

### 1-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중영역)

####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교육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교육비,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 장애아 무상보육료·교육비 등을 지원한 결과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율(성과지표)’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006년 30.5%에서 2010년에 4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1점, 2007~2008년 각 2점, 2009년 3점에서 2010년 4점으로 높아져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보다 확대하여 공보육을 구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실질적인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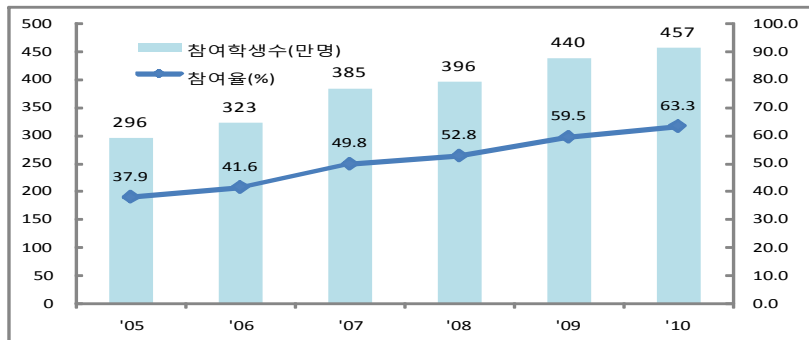
주 : 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율=(보육비지원아동수+교육비지원아동수) ÷ 6세미만 전체영유아×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초·중·고)’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 2006년 41.6%에 서 2010년에 6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1점, 2007~2008년 각 2점, 2009년 4점에서 2010년 5점으로 높아져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사업들을 보다 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 방과후학교 참여율



주: 방과후학교 참여율=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 ÷ 전체 초·중·고 학생수×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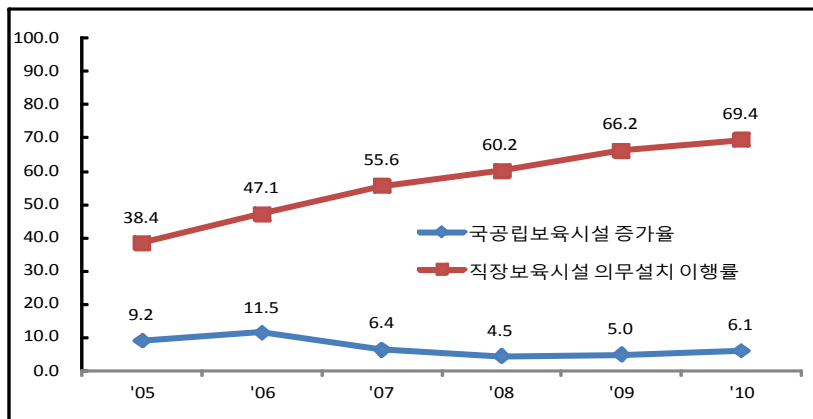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 2008년 이래 ‘자녀양육 관련 세제지원의 목표액과 실제지원액 간의 차이’는 0원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5점으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은 2006년 11.5%에서 2008년 4.5%로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는 6.1%로 나타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이행률은 2006년 47.1%에서 2010년 69.4%로 높아졌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4.5점에서 2008년 3점으로 낮아졌으나, 2009년 4.5점, 2010년 3.5점으로 다시 다소 높아져, 정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직장보육시설도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이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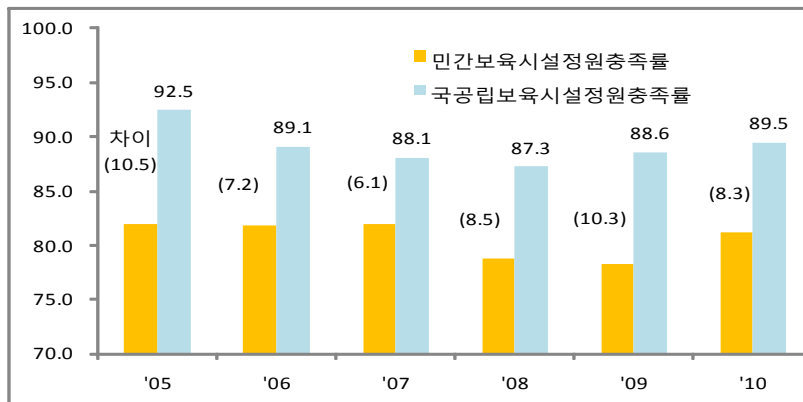


주 : 국공립보육시설 증가율 = (현년도 - 전년도 국공립보육시설) ÷ 전년도 국공립보육시설 × 100(%)  
 자료 :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이행률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충족률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간의 차이(성  
과지표)’는 1차 기본계획 이전인 2005년 10.5%p에 비해 다소 개선되  
었으나 2010년에 8.3%p로 여전히 큰 편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2점, 2007년 3점, 2008년 이래 2010  
년까지 1점으로 측정되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는 여전히 낮아, 향후 민간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4]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 정원충족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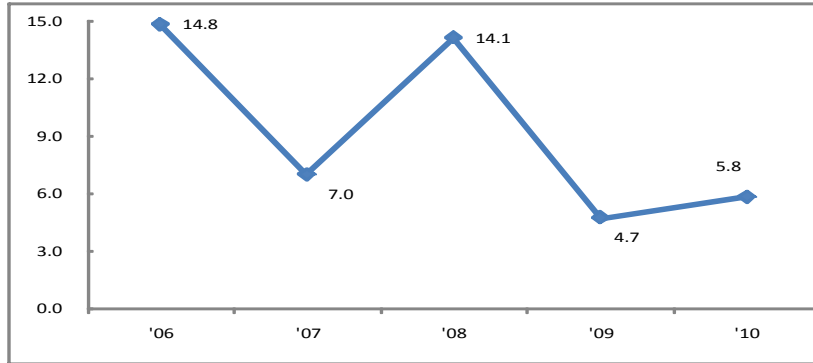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 보육시설 증가율(성과지표)’은 2006년과  
2008년 14%대에서 2009년과 2010년 5%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따라서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9년 4점을 제외하면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계속 5점으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일·가정 양립 제고 등을 위하여 맞벌이가정의 증가, 노동형태(시

간)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3-5] 시간연장형·종일제유치원 휴일형 보육시설 증가율



주: 1) 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보육시설비율 = 종일제유치원비율×0.6+시간연장형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0.3+휴일제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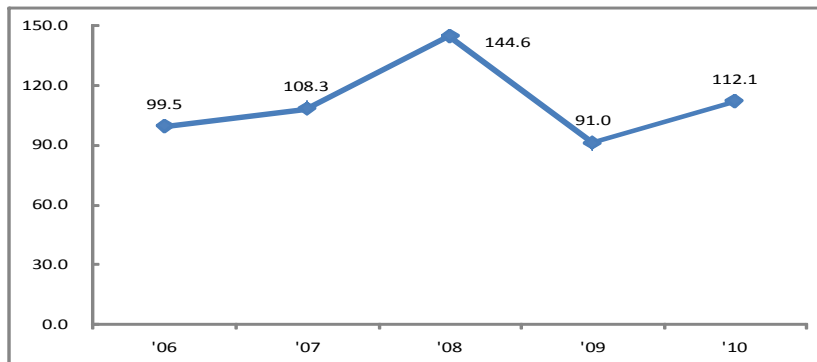
2) 종일제유치원·시간연장형·휴일제보육시설 증가율=(현년도 보육시설비율 - 전년도 보육시설비율)÷전년도 보육시설비율×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 산모도우미 지원

- ‘산모도우미 수혜율(목표대비)’은 2006년 99.5%, 2007년 108.3%, 2008년 144.6%, 2009년 91.0%, 2010년 112.1%로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주: 산모도우미수혜율=산모도우미 파견건수 ÷ 산모도우미사업 목표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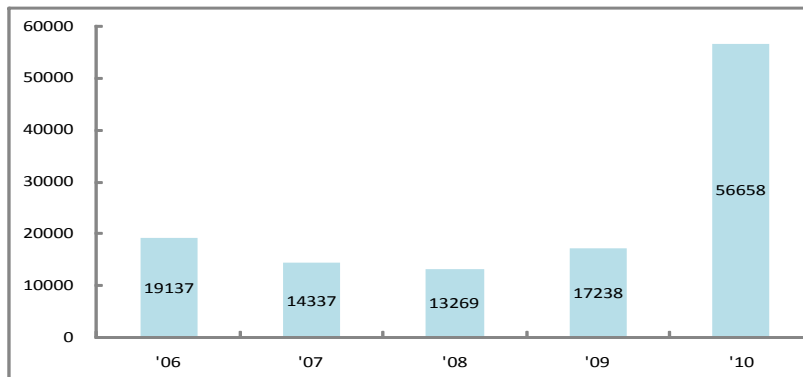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과 2009년에 4점, 2007년과 2008년 및 2010년에 각 5점으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핵가족화 추이가 계속되는데다가 산모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 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 불임부부 지원

- ‘불임부부 지원건수(성과지표)’는 2006년 19,137건에서 2008년 13,269건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였음. 특히,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뿐만 아니라 인공수정까지 지원하여 지원건수가 대폭 확대되었음.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2008년 4점, 나머지 년도는 5점으로 측정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7] 불임부부 지원건수



주: 2009년까지 체외수정만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난임부부로 확대되어 인공수정까지 지원(체외수정 24,977건, 인공수정 31,681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1-2.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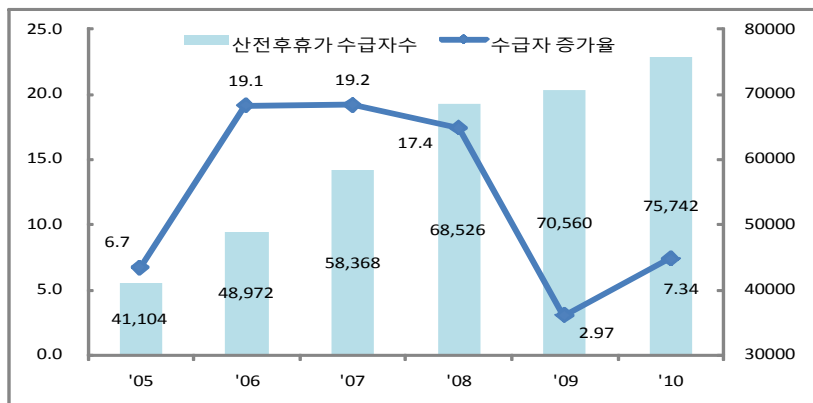
####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지수는 2005년 41천명이었으나, 1차 기본계획이

완료된 2010년에는 76천명으로 84.3% 증가하였음.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성과지표)’은 2006~2007년 19%, 2008년 17%로 아주 높았으나 2009년 2.97%, 2010년 7.3%로 낮아졌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2008년 5점에서 2009년 2점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4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향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종사자 등이 산전후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전후휴가 이전에 해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8]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및 증감률



주 :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증감률 = (현년도-전년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 전년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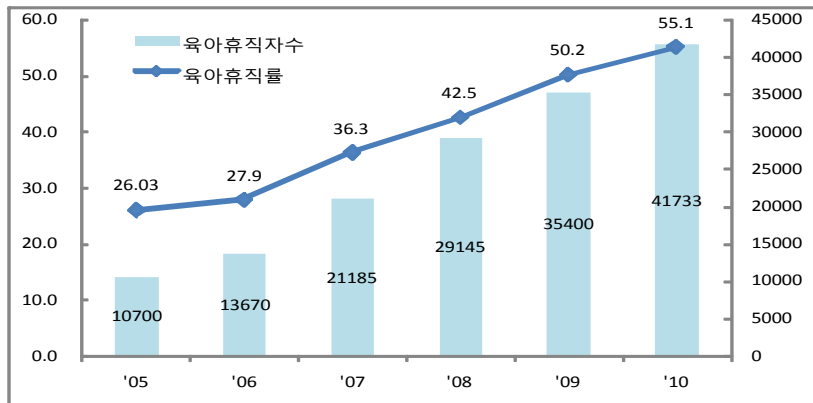
- 육아휴직자수는 2005년 10,700명에서 1차 기본계획 완료시점인 2010년에 41,733명으로 약 31천명(2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률(산전후휴가자수 대비)(성과지표)’은 2005년 26.0%에 불과하였으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에 55.1%로 증가하였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2007년 1점과 2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이래 2010년까지 5점으로 추정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종사자, 일용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각지대 해소 및 임금대체수준과 인력대체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9] 육아휴직자수 및 육아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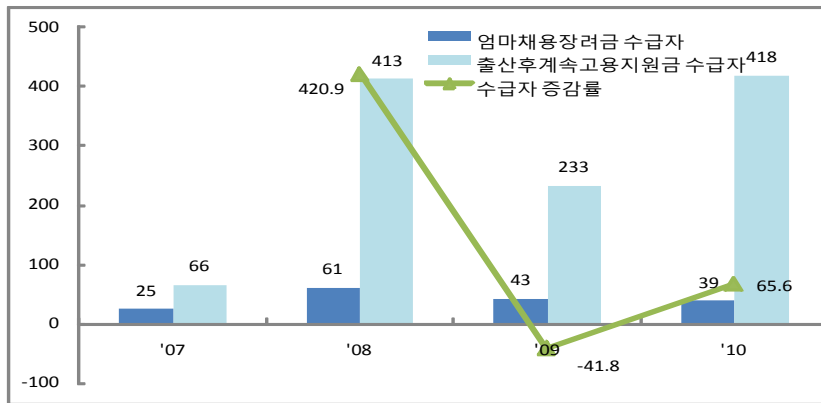
주 : 육아휴직률=육아휴직자 수 ÷ 산전후휴가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성과지표를 측정한 결과, 성과지표에 의한 정책의 성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정책의 수급자수 절대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수는 2007년 91명(25명, 66명), 2008년 474명(474명, 100명), 2009년 276명(43명, 233명), 2010년 457명(39명, 418명)으로 다소 불규칙하나 증가세에 있음. 전년대비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성과지표)’은 2008년 420.9%에서 2009년 -41.8%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나, 2010년에 다시 65.6%로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 5점, 2009년 1점 그리고 2010년 5점으로 높아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정책을 이용하는 기업과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그림 3-10] 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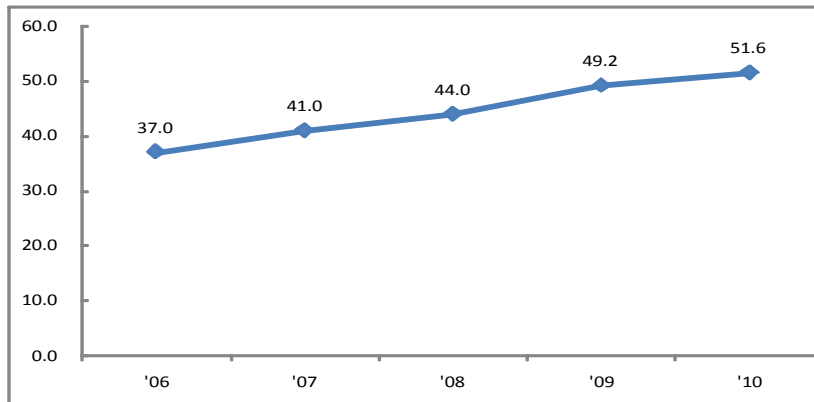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 성과지표<sup>30)</sup>)가 2006년 37.0에서 2010년 51.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2점, 2007년 4점으로 측정된 이후 2010년까지 5점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가족친화지수는 50점 수준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고용문화나 사회환경은 출산 가족에 친화적이지 못하여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30) 가족친화지수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 크게 5개 범주의 정량화된 지표로 설문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제도(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한 결과임.

[그림 3-11] 가족친화지수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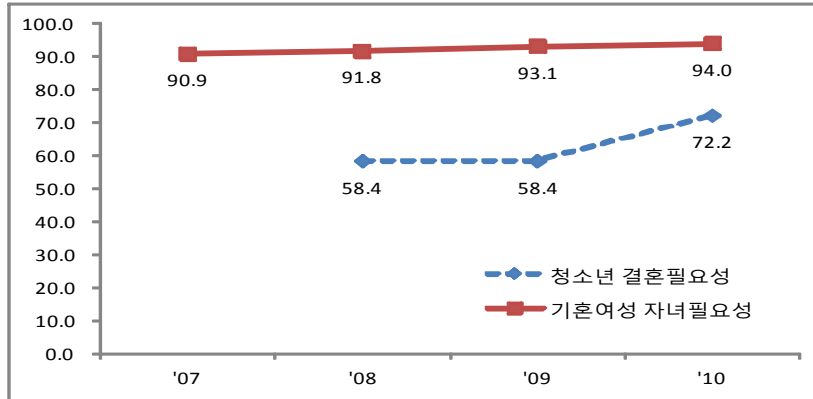
####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학교교육 추진 등의 성과로 ‘청소년의 결혼필요성(성과지표)’은 2008년 58.4%, 2009년 58.4%, 2010년 72.2%로 증가하였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2009년 각 1점에서 2010년 3점으로 높아졌으나, 이러한 성과는 보통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족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중장기 계획 하에 보다 체계적인 저출산 관련 학교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사회교육사업 등의 성과로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성과지표)’은 2007년 90.9%, 2008년 91.8%, 2009년 93.1%, 2010년 94.0%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이래 계속 5점으로 측정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치관의 변화는 많은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향후 사회교육을 체계화 및 내실화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2] 가족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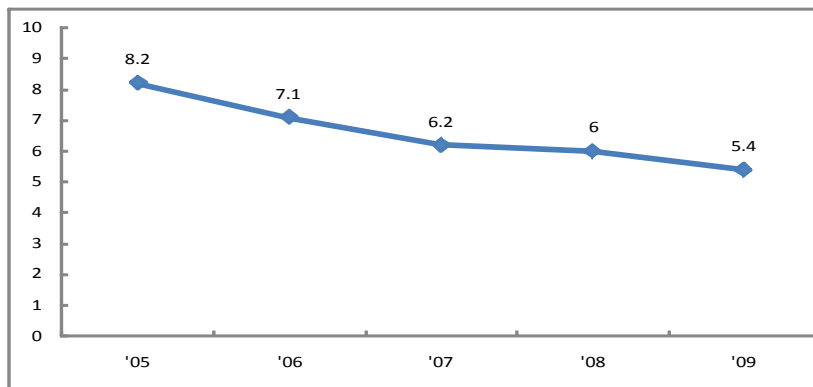
자료: 청소년의 결혼필요성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 기혼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 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성과지표)'는 1차 기본계획 이전인 2005년 8.2명에서 2009년에 5.4명(2010년도 결과는 2012년 발표 예정)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주 : 아동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 전체 14세 이하 아동수 × 100,000  
자료: e-나라지표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이래 5점으로 측정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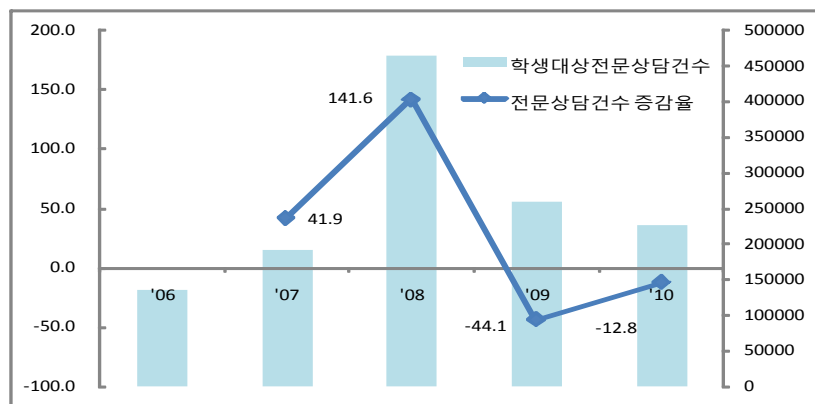
#### □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성과지표)’는 2007년 41.9%, 2008년 141.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44.1%, 2010년 -12.8%로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2008년 5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1점으로 낮게 측정되어, 최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생대상 전문상담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4]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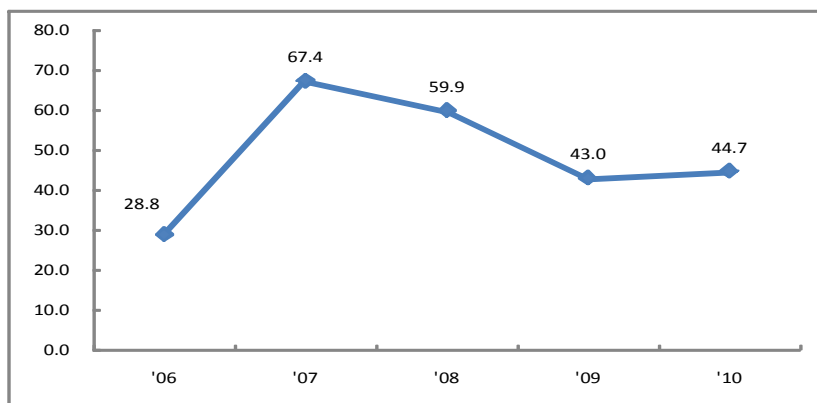
주 :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현년도 - 전년도 상담건수) ÷ 전년도 상담건수 ×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성과지표)’은 2007년 67.4%에서 2009년 43.0%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44.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5점에서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어 정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에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학교, 방과후보육,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5]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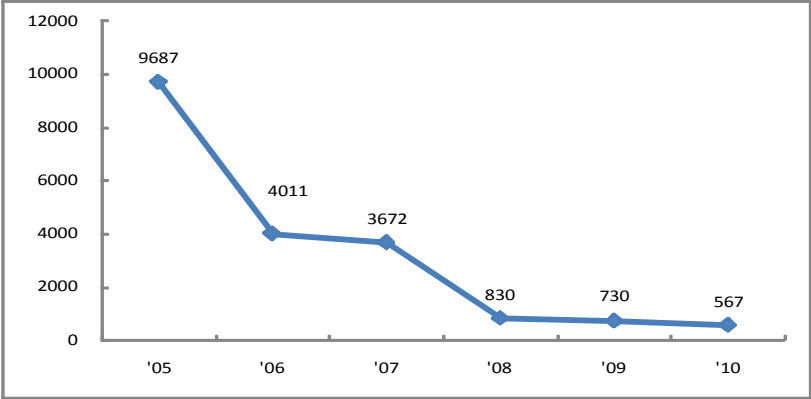


주 : 지역사회·아동·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이용률= 프로그램 이용자수 ÷ 아동·청소년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성과지표)’은 제1차 기본계획 실시 이전인 2005년에 9,687건이었으나 2010년에 567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5점으로 높았으나, 2006년 이래 최저점인 1점으로 측정되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민간감시단의 신고·고발 축소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후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 고령화 분야

- 고령화 분야는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개의 중영역으로 구성(척도는 부록 참조)

〈표 3-2〉 고령화 분야 성과지표

영역 및 세부사업	성과지표
1.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직역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 기초노령연금 확대	65세 이상 노인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1-2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	
•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율에서 변경)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율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구축	노인치매 검진율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노인 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노인요양시설 구축률(목표치 대비)
2-3. 노인권익증진	
• 노인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삶의 만족도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률(목표치 대비)
3-2.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목표치 대비) •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가구 주거기준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만족도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목표치 대비) • 저상버스 도입율(목표치 대비)



## 2-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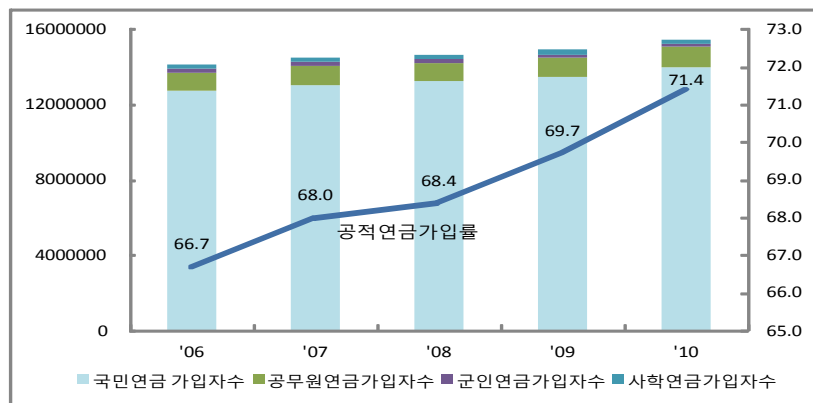
###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재정안정 확보 노력’으로 2007년 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8년 재정계산 실시 및 공시 완료, 2009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6회 법안 심사 및 재정계산 제도개선 사항 2건 검토, 2010년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1회 논의 등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2008년 5점, 2009~2010년 4점으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2006년 1,414만명에서 2010년 1,549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성과지표)’은 2006년 66.7%에서 2010년 7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20~59세 근로연령인구 중 공적연금 가입자수 및 가입률



주: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수 2006년 1,414만명, 2007년 1,451만명, 2008년 1,467만명, 2009년 1,495만명, 2010년 1,549만명

2) 20~59세 공적연금가입률=20~59세 공적연금가입자 수 ÷ 20~59세 근로연령인구 × 1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에 따라 1차 기본계획기간 동안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성과지표)’은 2006~2009년은 60%대로 성과점수는 3점이었으나 2010년 70%대가 되어 성과점수가 4점으로 나타남.
-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2007년 이래 직역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개혁법안 마련, 2008 10월 6일~27일 개정법안 입법예고, 2009년 2월 24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 및 2010년 1월 1일 시행으로 완료
- 사학연금법은 2008년 개혁법안 마련,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 및 2010년 1월 1일 시행으로 완료
- 군인연금법은 2008년 재정추계 분석, 외국제도 검토 및 연구용역 실시 등 개정 준비, 2009년 3월~2010년 1월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11회) 및 정책건의안 마련, 2010년 2월~3월 국무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의 조정(2회), 2010년 4월~11월 관련부처 쟁점사항 조정, 2011년 1월 개정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1년 5월 19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로 완료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5점, 2008년 3.7점, 2009년 4점, 2010년 5점으로 직역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무난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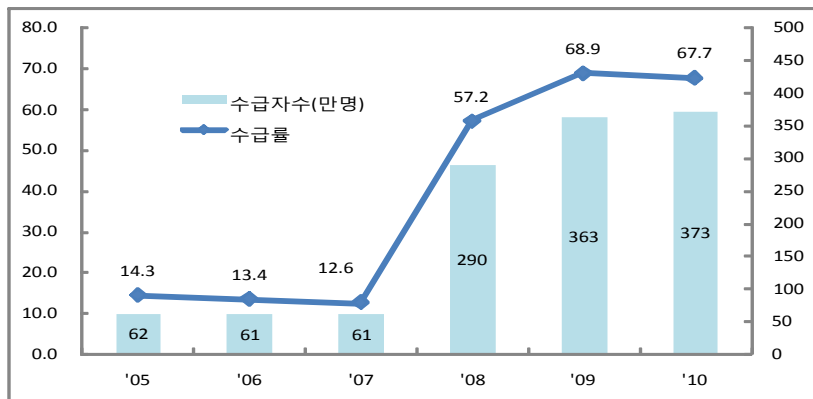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 2009년 1월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합의안 도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2009년 8월 7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 이래 5점으로 측정됨.

## □ 기초노령연금 확대

- 2008년 이래 기초노령연금 확대 사업의 성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06년과 2007년 61만명에서 2008년 290만명, 2009년 363만명, 2010년 373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성과지표)’은 2006~2007년 13% 내외에서 2008년 57.2%, 2009년 68.9%, 2010년 67.7%로 높아졌음(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수급자수는 10만명 더 증가하였으나 수급률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분모가 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1차 기본계획기간 동안 성과점수(5점 만점)는 5점에서 유지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과는 수급대상을 1단계(2008년 1월에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2단계(2008년 7월에 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2009년 1월에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걸쳐 확대한 결과임.
- 그러나 향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69%(유족연금 포함 시 7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3-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노인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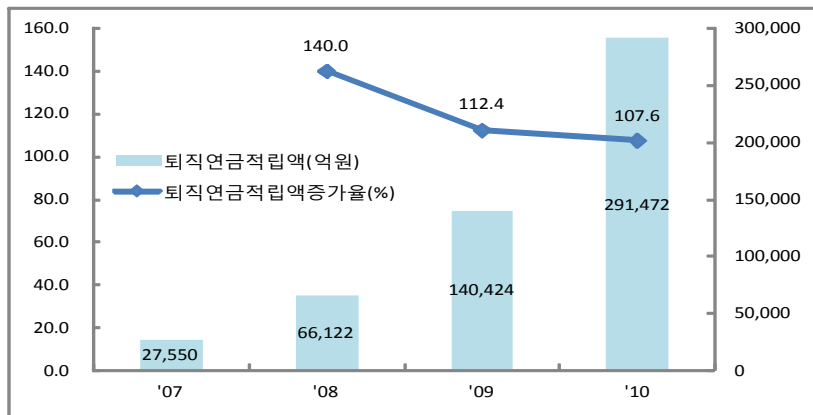
주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의 성과지표는 20~59세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율이었으나, 2010년 2/4분기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산출 시 중복 가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계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로 지표 변경
- 퇴직연금 적립액은 2007년 27,550억원에서 2010년 291,472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성과지표)’은 2008년 140.0%, 2009년 112.4%, 2010년 107.6%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 5점, 2009년 3점, 2010년 2점으로 낮게 측정되어 최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3-19] 퇴직연금 적립액 및 적립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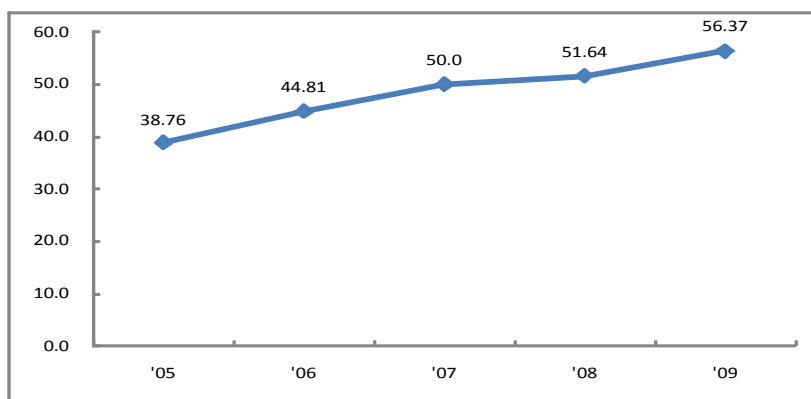
주 : 퇴직연금적립액 증가율 = (현년도 - 전년도 퇴직연금적립액) ÷ 전년도 퇴직연금적립액 × 100(%)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 2-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율’은 2006년 44.8%에서 2009년 56.4% (2010년 자료 미발표)로 증가하여,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이래 4점으로 측정됨.
-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할 전망으로 노인의 건강검진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그림 3-20]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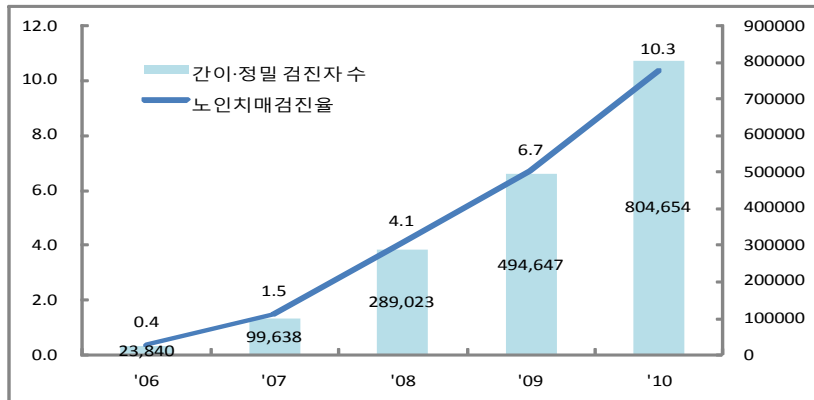


주: 노인건강검진율 = 65세 이상 1차 수검인원 ÷ 65세 이상 1차 검진대상인원 × 100(%)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 60세 이상 노인치매 검진자수는 2006년 23,840명에서 2010년 804,654명으로 30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치매 검진율(성과지표)’은 0.4%에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006~2008년 1점에서 2009년 3점, 2010년 5점으로 증가하여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할 전망으로 노인치매 검진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1] 노인치매검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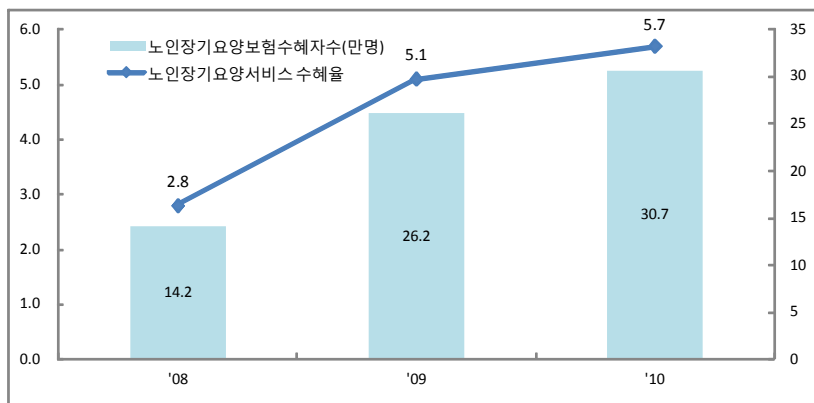


주 : 노인치매검진율 = 60세 이상 노인 중 1년간 치매검진자수 ÷ 60세 이상 노인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시설·재가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수는 2008년 연 누적 14.2만명에서 2009년 26.2만명, 2010년 30.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성과지표)’은 2008년 2.8%, 2009년 5.1%, 2010년 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수 및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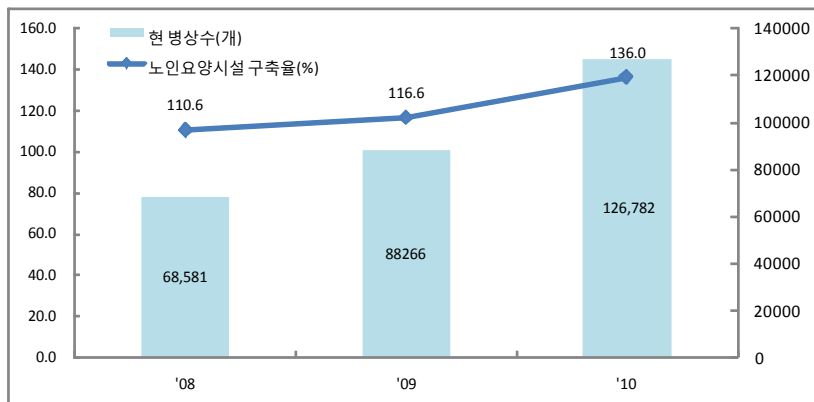
주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 노인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성과점수(5점 만점)는 도입 이래 5점에서 측정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노인 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인장기요양시설 병상수는 2008년 68,581개에서 2010년 126,78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인요양시설 구축률(목표치 대비)’은 2008년 110.6%, 2009년 116.6%, 2010년 136.0%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성과점수는 1차 기본계획 기간에 5점 만점 유지
  - 그러나 현 노인인구 대비 1.7%(2008년 1.4%)에 불과하여,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자 급증에 대비하여 병상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림 3-23] 노인장기요양시설 병상수 및 구축률



주: 노인요양시설구축률(목표치 대비)=현병상수 ÷ 목표병상수×100(%)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사업의 성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sup>31)</sup>는 2008년 3.1점(생활전반만족

31) 노인의 삶의 만족도 = 생활전반만족도×0.4 + 건강상태만족도×0.2 + 주관적본인경제상태×0.2 + 자녀관계×0.2

도 3.1점, 건강상태만족도 2.6점, 주관적 본인 경제상태 2.7점, 자녀관계 3.8점)으로 성과점수는 4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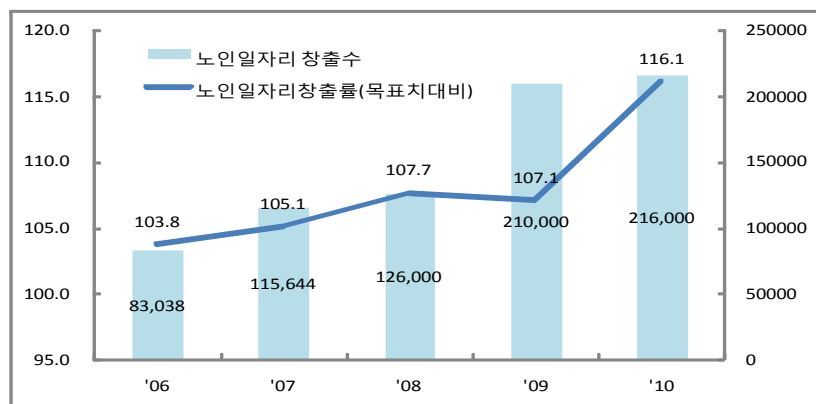
- 향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권익 보호 등 강화 필요

## 2-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사업의 성과로 노인일자리 창출수는 2006년 8.3만개에서 2010년 21.6만개로 21만개로 2.6배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목표치 대비 노인일자리창출률은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매년 100% 이상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계속 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24]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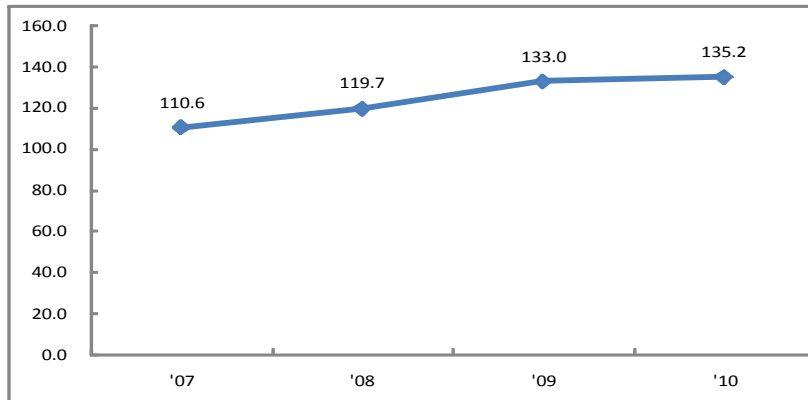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사업의 성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율(목표치대비)’은 2007년 110.6에서 2010년 13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계속 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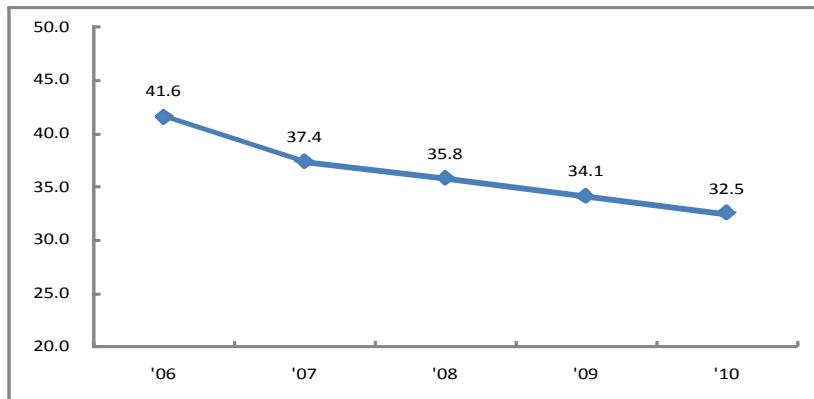
[그림 3-25] 노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목표치 대비)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고령층 정보격차지수’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006년 41.6에서 2010년 32.5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성과점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점을 유지하였음.

[그림 3-2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2-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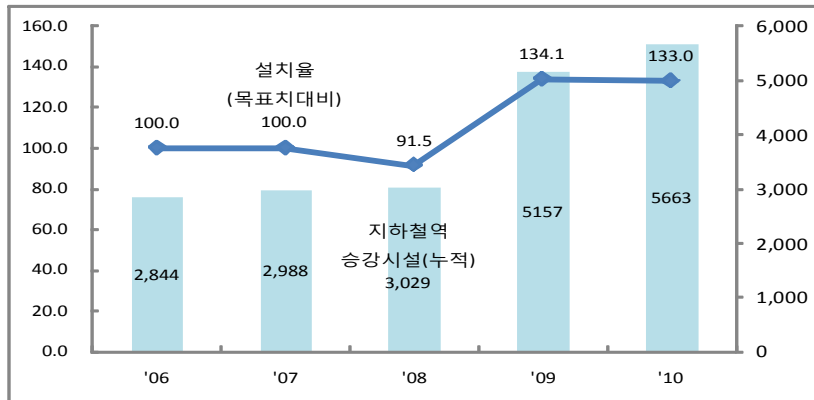
□ 고령자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사업의 성과로 노인의 주택만족도는 2008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매우 편리 11.4%, 편리한 편 58.2%, 그저 그렇다 18.2%, 불편한 편 10.4%, 매우불편 1.9%로 나타나, 성과점수는 3점(5점 만점 중)으로 측정됨.

□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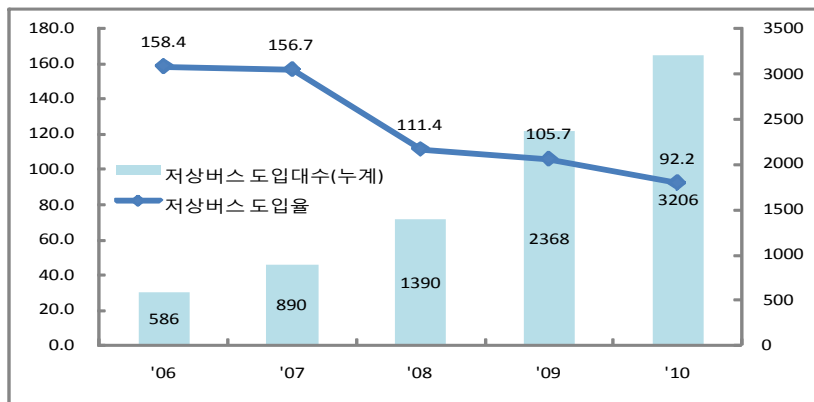
- 사업의 성과로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목표치 대비)’은 2006~2007년 100.0%에서 2008년 91.5%로 낮아졌으나, 이후 2009년 134.1%, 2010년 133.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만 4점일 뿐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5점에서 유지되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저상버스 누적 도입대수는 2006년 586대에서 2010년 3,206대로 증가하였으나, ‘저상버스 도입률(목표치 대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치를 초과달성(100% 이상)한 것과 달리 2010년에는 92.2%로 목표치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2009년 간 5점으로 높았으나, 2010년 4점으로 사업성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두 성과점수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의 성과는 2010년 4.5점(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4.5~5.0점)으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27]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그림 3-28] 저상버스 도입률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는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인적 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3가지 중점전략(중영역)으로 구성

〈표 3-3〉 성장동력 분야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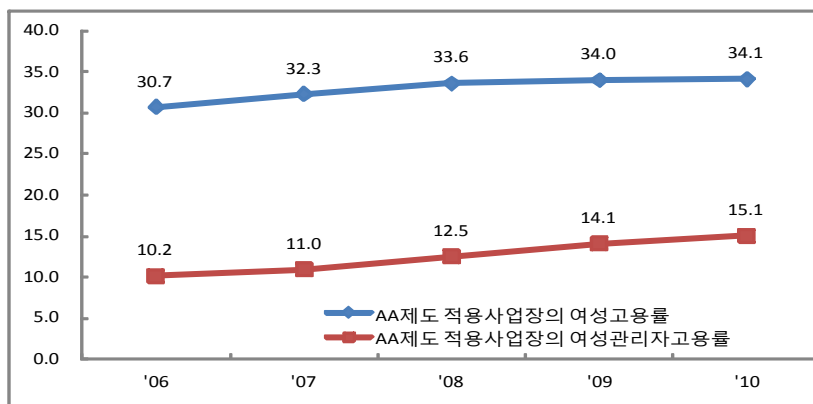
영역 및 세부사업	성과지표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① AA제도 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증가율 ② AA제도 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 증가율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정년 채택 사업장(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 연령(1세 대비 증가분)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수 증감율
• 고령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 고령근무자 직무수행 환경 개선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수 증가율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외국인동포의 활용	방문취업사증 누적 소지자 수 증가율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률
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p 대비)
•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 평생학습·직업훈련인프라·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평생학습 참여율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감률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제도 도입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 표시 건수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대출건수 증가율

### 3-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 □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 사업의 성과로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1차 기본계획 기간 2006년 30.7%(이하 1%p 대비)에서 2010년 34.1%,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도 10.2%에서 15.1%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고용률 증가율에 따른 성과점수는 5점 만점 중 2007년 4.5점, 2008년 5점으로 높았으나 2009년 4점, 2010년 3.5점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제고, 여성고용 차별 불식 등에 가족친화적 및 양성평등적 고용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율과 함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9]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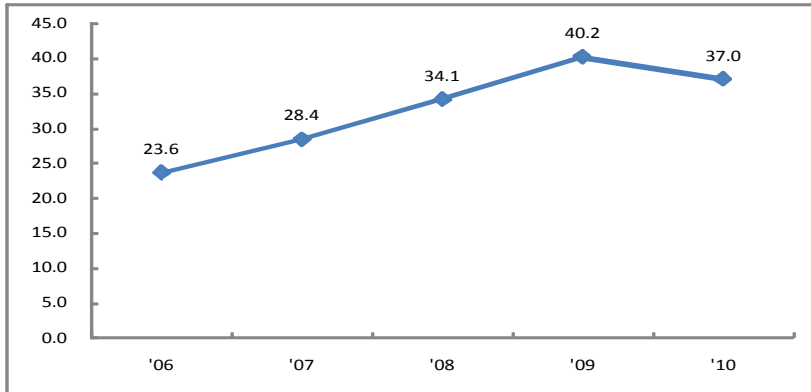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근로현황.

####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 여성의 ‘여성직업능력개발참여율’은 2006년 23.6%에서 2009년 40.2%로 높아진 후 2010년에는 37.0%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4점 이후 계속 5점에서 유지되어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여성의 능력 개발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며, 이는 여성고용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30]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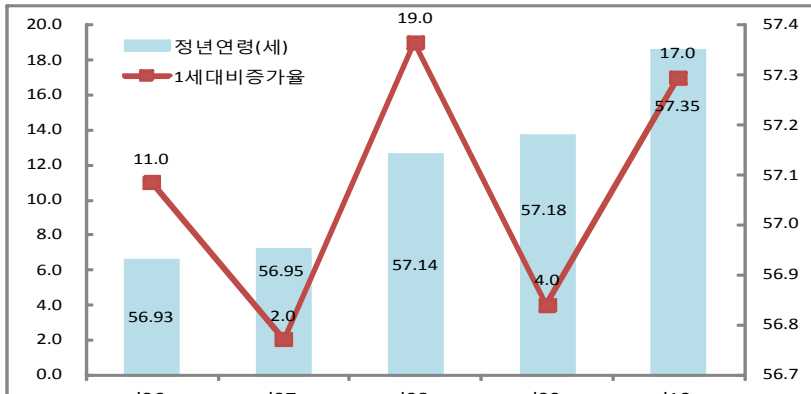


주 : 여성직업능력개발참여율=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여성수÷고용보험여성피보험자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 사업의 성과로 정년 채택사업장(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연령은 2006년 56.93세에서 2010년 57.35세로 증가하였음.

[그림 3-31] 정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 및 1세대비 증가율



주: 정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1세 대비 증가분)=(현년도 - 전년도 정년 채택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1세×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이에 따라 1세 대비 정년연령 증가분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플러스 20% 미만으로 성과점수(5점 만점)는 1점에서 유지하여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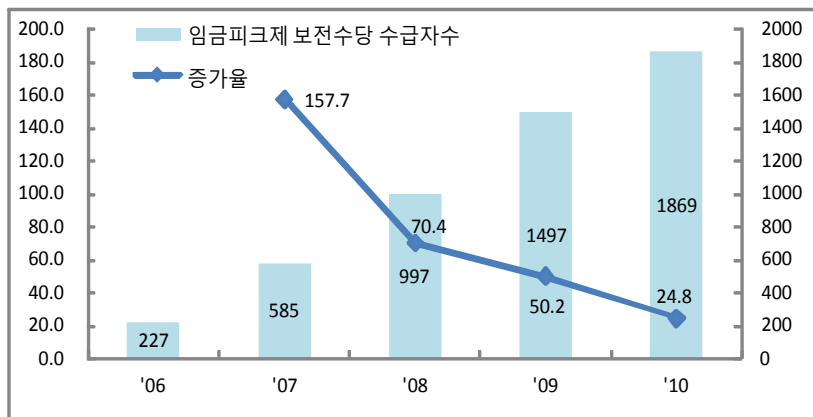
####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사업들의 성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는 2006년 227명에서 2010년 1,869명으로 증가하였음.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 증가율(성과지표)’은 2007년 157.7%에서 2010년 24.8%로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성과점수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5점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3-3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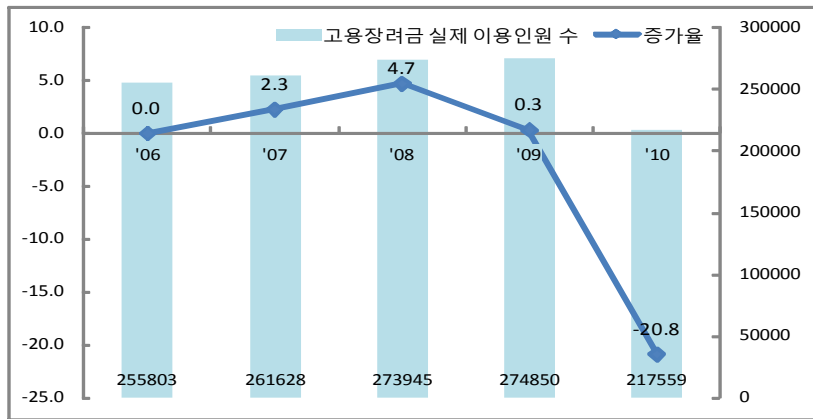


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 증가율=(현년도 - 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전년도 수급자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수는 2006년 256천명에서 2008년 27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218천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전년대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은 2008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9년 0.3%, 2010년 -20.8%로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 4점 이래 계속 1점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고용장려금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함.

[그림 3-33]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주: 고용장려금실제이용인원증가율 = (현년도-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이용인원수/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이용인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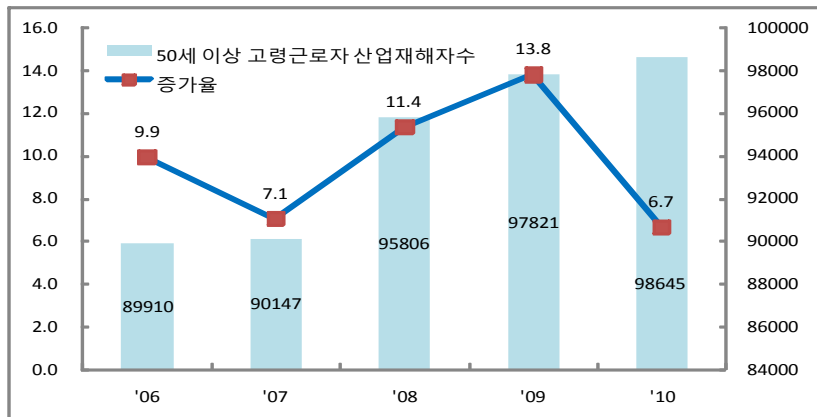
-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는 2006년 90천명에서 2010년 99천명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약 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증가율(성과지표)’은 2009년 13.8%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6.7%로 둔화되어 성과점



수(5점 만점)가 2008~2009년 2점에 비해 다소 높은 3점(2006~2007년 수준)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보통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그림 3-34]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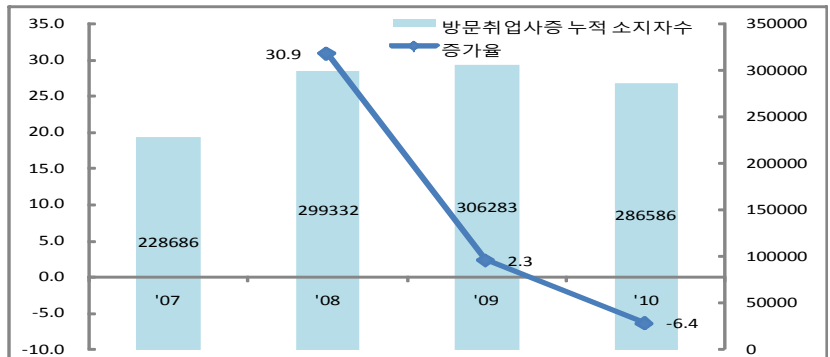
주 :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증가율 =  $\frac{(\text{현년도} - \text{전년도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text{전년도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외국적동포의 활용

- 방문취업시증 소지자수는 2007년 229천명에서 2009년 306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287천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방문취업시증 소지자수 증가율’은 2008년 30.9%에서 2009년 2.4%로 둔화되었다가 2010년에는 -6.4%의 감소세로 측정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 5점, 2009년 2점, 2010년 1점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35] 방문취업사증 소지자수 및 증가율(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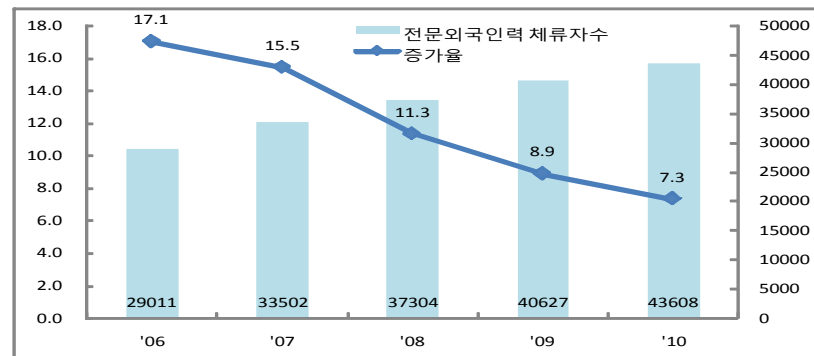
주: 방문취업사증소지자누적증가율=(현년도-전년도방문취업사증소지자누적건수)÷전년도방문취업사증소지자누적건수×100(%)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수는 2006년 29천명에서 2010년 4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성과점수)은 17.1%에서 7.3%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2007년 5점, 2008년 4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는 3점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6]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및 증가율



주: 전문외국인력체류자수 증가율=(현년도-전년도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전년도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100(%)

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 3-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School to Work)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 등 사업들의 성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06년 75.4%에서 2008년 76.7%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76.4%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산정방식(건강보험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이 변경되어 이전자료와 비교가 어려우나 여전히 낮은(55.0%)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p 대비)’은 다소 불규칙하나 2008년까지 증가세였으나 2009년에 0.3%p 감소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현실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아주 높아진 반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고용불안정, 미스매칭(mis-matching) 등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 3-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및 증가율(1%대비)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75.4	75.8	76.7	76.4	55.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1%대비)	130.0	40.0	90.0	-30.0	NA

주: 1) 2009년까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2) 2010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현년도 - 전년도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1%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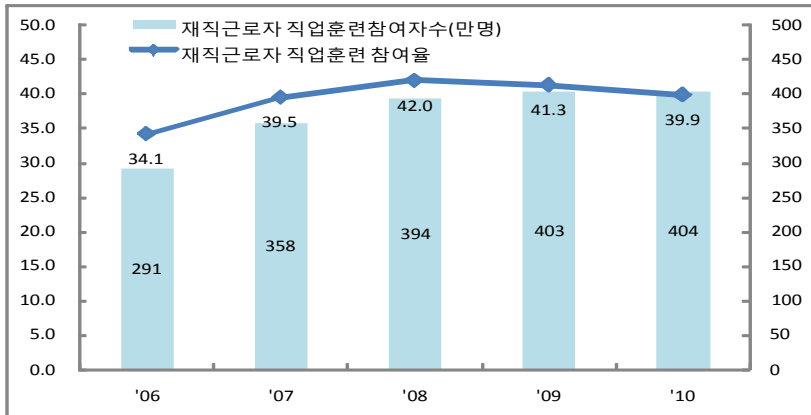
자료 : e-나라지표

####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한 성과로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참여자수는 2006년 291만명에서 2010년 40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성과지표)’은 2006년 34.1%에서 2008년 42.0%까지 높아졌으나 2009년 41.3%에 이어 2010년에도 39.9%로 다소나마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이래 40% 수준으로 5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37]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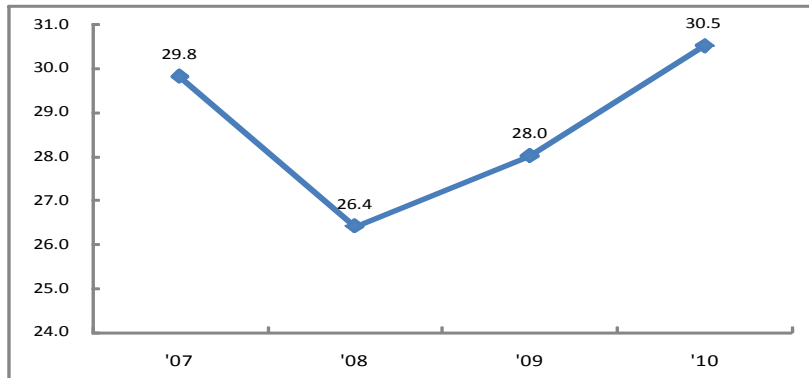


주: 재직근로자직업훈련참여율=직업훈련 참여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 평생학습·직업훈련인프라·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등 사업들의 성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08년 26.4%로 낮아졌으나, 이후 2009년 28.0%, 2010년 30.5%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8년 4점을 제외하면 2010년까지 모두 5점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8] 평생학습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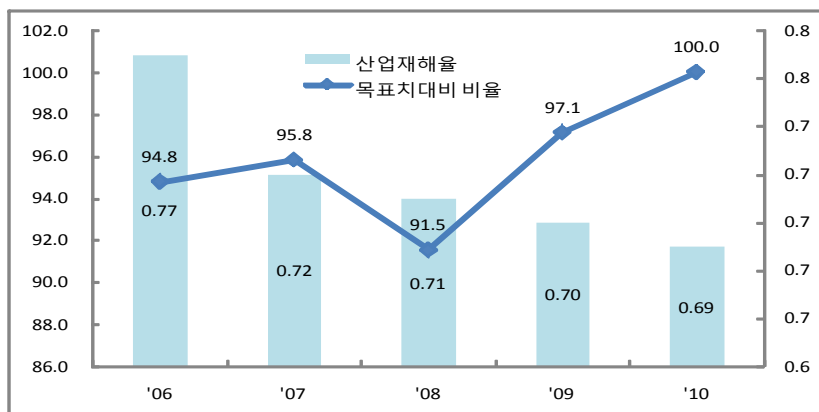


주: 평생학습참여율=(형식교육참여자수+비형식교육참여자수)÷ 25-64세 인구수×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실태조사

####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추진된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등 사업들의 성과로 산업재해율은 2006년 0.77에서 2010년 0.69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목표치 대비 산업재해율(성과지표)’은 2010년에 처음으로 10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9] 산업재해율 추이



주: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산업재해율 목표치÷산업재해율×1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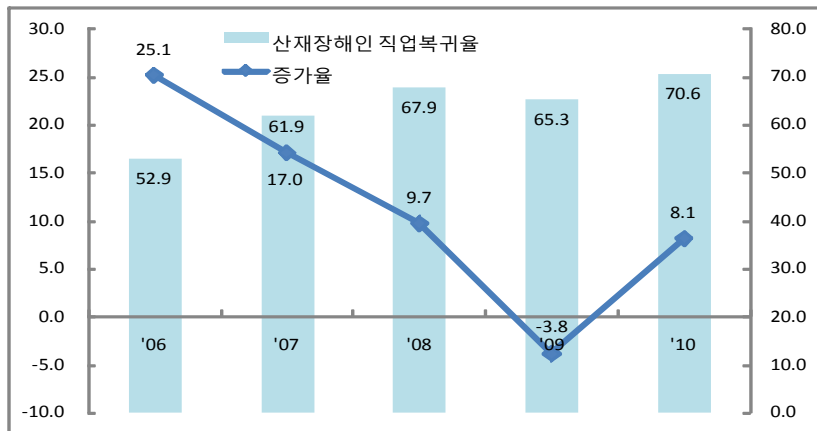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6년과 2008년 3점, 2007년과 2009년 4점이었으나, 2010년에는 5점으로 측정됨.

-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고령사회에서 인력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등 사업들의 성과로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은 2009년 65.3%를 제외하면, 2006년 52.9%에서 2010년 70.6%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성과지표)’은 2009년 -3.8%로 성과점수가 1점인 것을 제외하면은 모두 5% 이상으로 5점으로 측정됨.
- 향후 산재장해인의 복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재활과 기업주 대상 홍보 등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그림 3-40]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추이



주: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현년도-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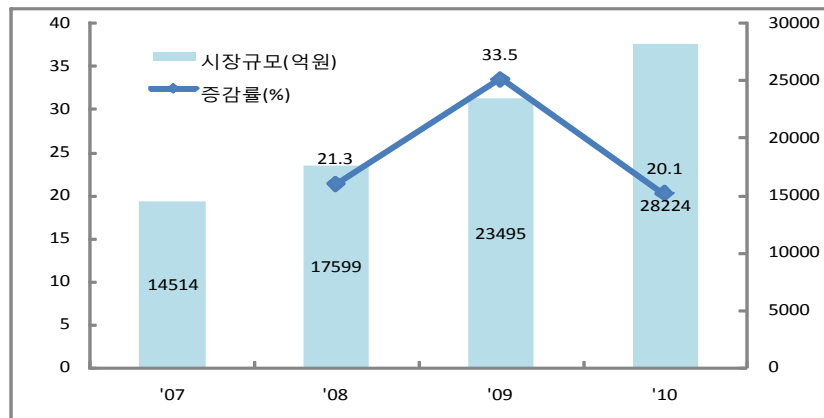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 3-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 1.45조원에서 2010년 2.8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가율(성과지표)’은 2008년 21.3%, 2009년 33.5%, 2010년 20.1%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하여 플러스(증가세)로 나타남.
- 성과점수(5점 만점)는 모두 5점으로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41] 주요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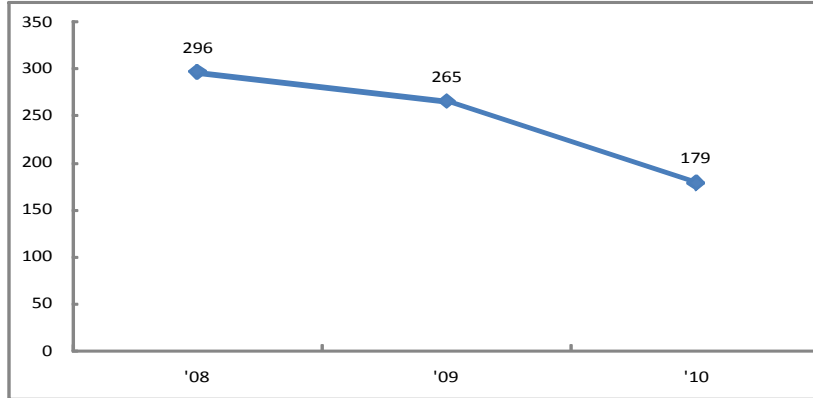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등의 성과로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는 2008년 296건, 2009년 265건, 2010년 179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점수(5점 만점)는 계속 5점에서 유지하여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2]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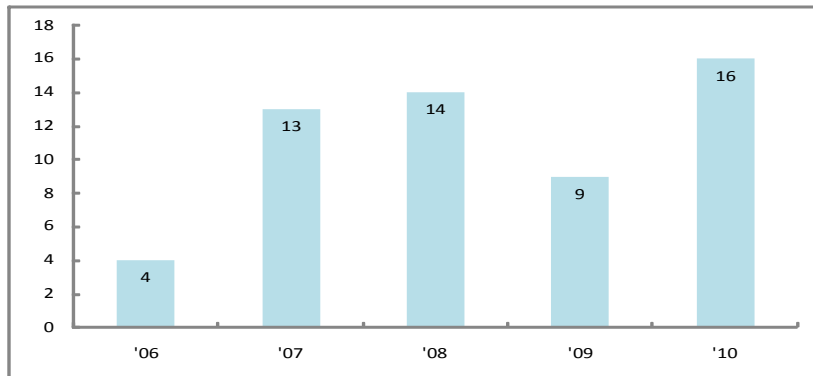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등 사업의 성과로 ‘고령친화제품 표준화건수(성과지표)’는 2006년 4건에서 2008년 14건으로 증가한 후 2009년 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1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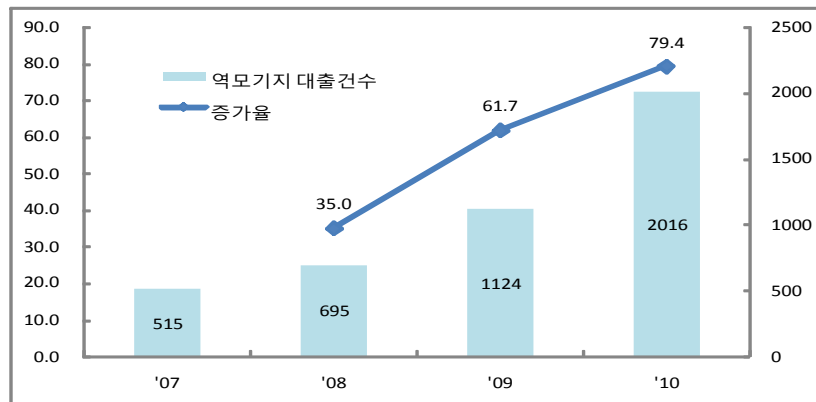


-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이래 모두 5점으로 측정되어 사업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장기국채시장 육성 등 사업들의 성과로 역모기지 대출건수는 2007년 515건에서 2010년 2,01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성과지표)’은 2008년 35.0%에서 2009년 61.7%, 2010년 79.4%로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성과점수(5점 만점)는 2007년 이래 계속 5점으로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44] 역모기지 대출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내부자료

##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 1. 전체 분야

- 저출산분야의 성과는 4.0점으로 우수, 고령사회분야의 성과는 4.5점으로 우수, 성장동력분야의 성과는 3.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분야에 대한 지수 산출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
- \* 이하에서 영역별 성과는 1~2점미만의 경우 매우 미흡, 2~3점미만의 경우 미흡, 3~4점미만의 경우 양호, 4점 이상의 경우 우수로 평가

〈표 3-5〉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성과(5점 만점)

분야	가중치 적용 점수 (5점 만점)
A. 저출산분야	4.0
B. 고령사회분야	4.5
C. 성장동력분야	3.9

### 2. 저출산분야

- 중영역별 성과
  - 저출산분야 중영역별 성과를 측정한 결과,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4.0점)’과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4.5점)’의 경우 우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3.0점)’의 경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소영역별 성과
  -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 소영역들 중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5.0점)”와 “자녀양육 가정

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4.6점)”의 성과는 우수,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3.0점)”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 소영역들 중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5.0점)”, “모성보호 강화(4.7점)” 및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4.0점)” 순으로 성과가 높으며, 이들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소영역들 중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점)”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점)”의 성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3-6〉 저출산분야의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저출산분야(4.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4.0)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4.6)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3.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5.0)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4.5)	모성보호 강화(4.7)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5.0)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0)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3.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사회지원시스템 확립(3.0)

### 3. 고령사회분야

#### □ 중영역별 성과

- 중영역들 중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5.0점)’,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5점)’ 및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4.5점)’의 성과는 우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3.8점)’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 소영역별 성과

-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중영역)’
  - 소영역들 중 “공적연금제도 체계화(4.5점)”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중영역)’
  - 소영역들 중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5.0점)”, “노후건강관리기반 조성(4.4점)” 및 “노인권익증진(4.0점)” 순으로 성과가 높으며, 이들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 소영역들 중 “노인일자리 창출(5.0점)”과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점)”의 성과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에 속한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3.8점)”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3-7〉 고령사회분야 중·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중영역	소영역
고령사회분야(4.5)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4.5)	공적연금제도 체계화(4.5)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지표전환으로 미측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4.5)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4.4)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5.0) 노인 권익 증진(4.0)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5.0)	노인일자리 창출(5.0) 생산적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5.0)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3.8)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3.8)

## 4. 성장동력분야

## □ 중영역별 성과

- 중영역들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5.0점)’과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4.3점)’의 성과는 우수,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3.1점)’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정년 연장, 고용장려금 활성화, 외국 적동포 등의 방문취업 활성화 등의 실적이 미흡하였기 때문임.

#### □ 소영역별 성과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 소영역들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4.3점)”의 성과는 우수하나,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6점)”과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2.0점)”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 소영역들 중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5.0점)”의 성과는 우수,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점)”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 소영역들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5.0점)”, “고령친화 제품 표준화 확대(5.0점)” 및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점)”의 성과는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표 3-8〉 성장동력분야 중 소영역별 성과(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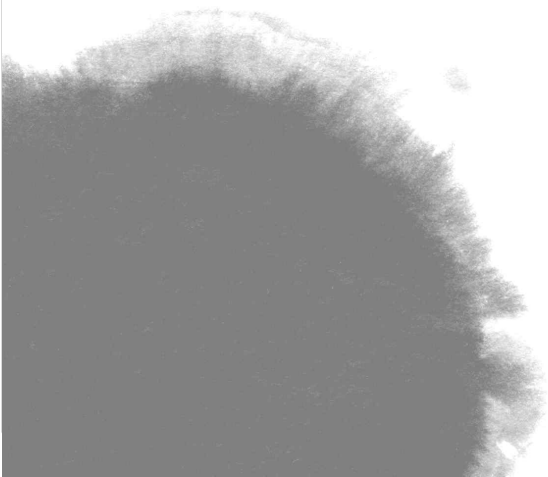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중영역	소영역
성장동력분야(3.9)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3.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4.3)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2.6)
	외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2.0)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4.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3.8)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5.0)
고령친화산업 육성(5.0)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5.0)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



04

K  
I  
H  
A  
S  
A

## 종합평가







## 제4장 종합평가

### 제1절 2010년도 추진성과 종합평가

####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

-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194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됨.
- 목표달성도가 높고(90%이상 우수사업 94.3%, 70%미만 미흡 3.6%), 예산집행률(총예산 12.1조원)도 높게 나타남(우수 91.6%, 미흡 3%)
  - 성과점수는 3개 분야 평균 4.1점(저출산 4.0, 고령사회 4.5, 성장동력 3.9)으로 우수한 것으로 측정됨.

〈표 4-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단위: 개, %, 점)

	전체	저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194(100.0)	74(100.0)	50(100.0)	70(100.0)
50%미만	5( 2.6)	1( 1.4)	3( 6.0)	1( 1.4)
50~70%	2( 1.0)	1( 1.4)	-	1( 1.4)
70~90%	4( 2.1)	2( 2.7)	-	2( 2.9)
90%이상	183( 94.3)	70( 94.6)	47( 94.0)	66( 94.3)
예산집행률	131(100.0)	59(100.0)	26(100.0)	46(100.0)
50%미만	2( 1.5)	2( 3.4)	-	-
50~70%	2( 1.5)	1( 1.7)	-	1( 2.2)
70~90%	7( 5.4)	3( 5.1)	2( 7.7)	2( 4.3)
90%이상	120( 91.6)	53( 89.8)	24( 92.3)	43( 93.5)
비예산사업	64개	16개	24개	24개
총예산액(억원)	120,613.5	55,352.2	50,242.9	15,018.4
성과점수(5점만점)		4.0점	4.5점	3.9점

주 : 총 217개 사업 중 기 완료, 성과지표 통폐합, 제출실적 미제출, 국민인식개선분야를 제외하였음

## 2. 2010년도 저출산분야 종합평가

- 2010년도 저출산정책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목표달성도가 높고(우수사업 94.6%) 예산집행률도 양호(우수사업 89.9%)하여, 성과점수는 우수(4점)한 것으로 측정됨.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은 대상 확대,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율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5.0%, 예산집행 우수사업 86.7%, 성과점수 4.0점/5점).
  - “신혼부부 출발지원” 정책들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모두 우수한(각 우수사업 100%) 것으로 측정됨.
  -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정책들의 성과는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율,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3.8%, 예산집행 우수사업 76.9%, 성과점수 4.6점/5점).
  - 그러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목표달성률이 61.8%에 그치고 있는데, 과잉적인 시설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의 현실화(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등 차원),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치 적정 설정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이탈하여 예산집행률이 77.8%로 저조한 것임.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사업은 국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나 지방비 집행 실적이 다소 낮아 예산집행률이 88.3%로 나타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 139억원 중 7.3%만이 집행되어 저조한데, 이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업 지원대상자 발굴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의 성과는 취약지역에

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을 제고, 취약(시간연장, 종일제 및 휴일형)보육시설 확충 등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3.0점/5점).

- 다만,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낮아, 저출산분야 정책성과를 낮추는 작용을 함.

○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의 성과는 그간 정책대상 확대, 지원수준 제고 등을 통해 산모도우미와 불임부부 지원 수혜 증가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1.7%, 예산집행 우수사업 90.0%, 성과점수 5.0점/5점).

- 그러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사업의 경우 지원건수가 133만건으로 목표(당초 4,856천건)를 27.5%만 달성(예산도 904억원 중 55.5%만 집행)하여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30% 수준만 지원하여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의료기관 사업 참여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의 성과는 휴가·휴직제도 등에서의 급여 인상 및 지원 확충, 제도 개선,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 증가, 가족친화지수 개선)되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 92.3%, 성과점수 4.5점/5점).

○ “모성보호 강화” 정책들의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수준이 모두 높아(각 우수사업 100%)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성과점수 4.7점/5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다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아(장기구직자 등)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20.0%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책들의 목표달성도(우수사업 100%)가

아주 높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성과점수 5점/5점).

- 단, 경제위기 장기화로 민간사업장의 신규채용 부진과 여성취업자수 감소로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음.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정책들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 집행률도 모두 높아(각 우수사업 100%)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성과점수 4.0점/5점).
- 그러나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추진성과는 아동안전사고 감소, 지역 사회 이동 청소년 보호·육성 등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8.2%, 예산집행 우수사업 93.8%, 성과점수 3.0점/5점) .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정책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5.7%,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3.0점/5점).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범죄예방 등 실적이 17,513건으로 목표의 33.5%를 달성하였는데, 2010년에 2년차가 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범죄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강화’ 사업의 목표달성도는 아주 높으나, 학생대상 전문상담단수가 감소하는 등 실제 활성화 정도는 미흡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정책의 성과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7.5%,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3.0점/5점).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신고·고발건수가 567건(목표의 73.9%)에 그쳤는데, 이는 활동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강화시켜 실적이 낮아진 결과임.
-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정책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50%).
- 총 2개 사업 중 하나인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사업에서 아동의 저축 적립액이 목표보다 낮아 정부 매칭금액이 총예산의 88.4%에 그침.

〈표 4-2〉 2010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단위: 사업수, %, 점)

영역	사업의 목표달성도					성과 점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소계	
저출산분야	1 (1.4)	1 (1.4)	2 (2.7)	70 (94.6)	74 (100.0)	4.0
1.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1 (2.5)	1 (2.5)	38 (95.0)	40 (100.0)	4.0
1-1. 신혼부부 출발 지원	-	-	-	5 (100.0)	5 (100.0)	-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1 (6.3)	-	15 (93.8)	16 (100.0)	4.6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	7 (100.0)	7 (100.0)	3.0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1 (8.3)	11 (91.7)	12 (100.0)	5.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	-	17 (100.0)	17 (100.0)	4.5
2-1. 모성보호 강화	-	-	-	3 (100.0)	3 (100.0)	4.7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	-	7 (100.0)	7 (100.0)	5.0
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	-	7 (100.0)	7 (100.0)	4.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5.9)	-	1 (5.9)	15 (88.2)	17 (100.0)	3.0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14.3)	-	-	6 (85.7)	7 (100.0)	3.0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	1 (12.5)	7 (87.5)	8 (100.0)	3.0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	-	-	2 (100.0)	2 (100.0)	-

주: 1) 2010년에 목표달성도가 90%미만 사업은 총 4개로 1-2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61.8%), 1-4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81.9%), 3-1의 아동안전지킴이(33.5%), 3-2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73.9%)  
2) 성과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표 4-3〉 2010년 저출산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억원)	(%)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소계	
저출산분야	55,352.2	(100.0)	2 (3.4)	1 (1.7)	3 (5.1)	53 (89.8)	59 (100.0)	16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8,634.3	(87.9)	1 (3.3)	1 (3.3)	2 (6.7)	26 (86.7)	30 (100.0)	10
1-1. 신혼부부 출발 지원	0.5	(0.0)	-	-	-	1 (100.0)	1 (100.0)	4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43,965.5	(79.5)	1 (7.7)	-	2 (15.4)	10 (76.9)	13 (100.0)	3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001.6	(3.6)	-	-	-	6 (100.0)	6 (100.0)	1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666.6	(4.8)	-	1 (10.0)	-	9 (90.0)	10 (100.0)	2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309.2	(7.8)	1 (7.7)	-	-	12 (92.3)	13 (100.0)	4
2-1. 모성보호 강화	3,723.5	(6.7)	-	-	-	3 (100.0)	3 (100.0)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2.8	(0.0)	1 (20.0)	-	-	4 (80.0)	5 (100.0)	2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62.9	(1.0)	-	-	-	5 (100.0)	5 (100.0)	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408.7	(4.4)	-	-	1 (6.3)	15 (93.8)	16 (100.0)	2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683.9	(1.2)	-	-	-	6 (100.0)	6 (100.0)	1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326.8	(2.4)	-	-	-	8 (100.0)	8 (100.0)	1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398	(0.7)	-	-	1 (50.0)	1 (50.0)	2 (100.0)	

주: 2010년에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6개로 1-2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77.8%),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88.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7.3%), 1-4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 의원까지 확대(55.5%), 2-2의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0.0%), 3-3의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88.4%)

### 3.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종합평가

- 2010년에 고령사회분야의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목표달성도(우수사업 94.0%)와 예산집행률(우수사업 92.3%) 모두 높고, 성과점수도 우수(4.5점)한 것으로 측정됨.
- ‘노인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6.7%,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4.5점/5점).
  -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정책들의 성과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검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가,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증가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0.9%,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4.5점/5점).
    - 단,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사업은 연금충당부채 평가방법 마련 등으로 인하여 목표인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정책들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75%,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 주된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사업은 당초목표가 ‘DB형 외부적립률 단계적 상향 조정 관련 법령 개정’이었으나, 상임위 소관 전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83.3%, 성과점수 4.5점/5점).
  - “노후건강관리기반 조성” 정책들의 성과는 노인건강검진을 및 노인치매검진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4.4점/5점).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정책들의 성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및 노인요양시설(병상수)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50%, 성과점수

5.0점/5점).

- 다만,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사업은 시설공사의 특성상 건축 허가, 민원, 동절기나 하절기 장마철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권익증진” 정책들의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75%, 성과점수 4.0점/5점).
- 단,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2010년도 하반기에 추가 사업이 실시되어 예산 중 일부가 2011년도로 이월되었음.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중영역의 추진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정책의 성과는 노인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목표치를 초과하고, 고령층 정보격차지수가 계속 낮아지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8.2%, 예산집행 우수사업 93.8%, 성과점수 3.8점/5점).
-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정책의 성과는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이 목표를 달성하고, 저상버스 누적도입율이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으나, 노인 주택만족도가 비교적 낮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7.5%,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3.8점/5점).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사업의 목표로서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은 법 조문 등이 유사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양 법안의 병합처리 논의 등의 문제가 있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정책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표 4-4〉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단위: 사업수, %, 점)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 점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소계	
고령사회분야	3 (6.0)	-	-	47 (94.0)	50 (100.0)	4.5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13.3)	-	-	13 (86.7)	15 (100.0)	4.5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1 (9.1)	-	-	10 (90.9)	11 (100.0)	4.5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 (25.0)	-	-	3 (75.0)	4 (100.0)	-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	-	-	18 (100.0)	18 (100.0)	4.5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	-	7 (100.0)	7 (100.0)	4.4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	-	7 (100.0)	7 (100.0)	5.0
2-3. 노인 권익 증진	-	-	-	4 (100.0)	4 (100.0)	4.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	-	-	6 (100.0)	6 (100.0)	5.0
3-1. 노인일자리 창출	-	-	-	1 (100.0)	1 (100.0)	5.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	-	5 (100.0)	5 (100.0)	5.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 (9.1)	-	-	10 (90.9)	11 (100.0)	3.8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 (12.5)	-	-	7 (87.5)	8 (100.0)	3.8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	-	3 (100.0)	3 (100.0)	-

주: 목표달성률이 90%미만인 사업은 총 3개로 1-2의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0%)', 1-2의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0%)', 4-1의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0%)'

〈표 4-5〉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억원)	(%)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소계	
고령사회분야	50,242.9	(100.0)	-	-	2 (7.7)	24 (92.3)	26 (100.0)	24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6,899.0	(73.4)	-	-	-	2 (100.0)	2 (100.0)	13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36,893.0	(73.4)	-	-	-	1 (100.0)	1 (100.0)	1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6.0	(0.0)	-	-	-	1 (100.0)	1 (100.0)	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6,829.3	(13.6)			2 (16.7)	10 (83.3)	12 (100.0)	6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846.1	(1.7)	-	-	-	6 (100.0)	6 (100.0)	1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4,619.6	(9.2)	-	-	1 (50.0)	1 (50.0)	2 (100.0)	5
2-3. 노인 권익 증진	1,363.6	(2.7)	-	-	1 (25.0)	3 (75.0)	4 (100.0)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697.2	(9.3)	-	-	-	6 (100.0)	6 (100.0)	-
3-1. 노인일자리 창출	3,067.0	(6.1)	-	-	-	1 (100.0)	1 (100.0)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630.2	(3.2)	-	-	-	5 (100.0)	5 (100.0)	-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817.4	(3.6)	-	-	-	6 (100.0)	6 (100.0)	5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731.4	(3.4)	-	-	-	4 (100.0)	4 (100.0)	4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86	(0.2)	-	-	-	2 (100.0)	2 (100.0)	1

주: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2개로 2-2의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81.9%)', 2-3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87.2%)'

#### 4.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종합평가

- 2010년에 성장동력분야 정책들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도(우수사업 94.3%)와 예산집행률(우수사업 93.5%) 모두 높으나, 성과점수는 3.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퇴직연령 연장, 고용장려금 활성화, 외국적동포 등의 방문취업 활성화 등의 실적이 미흡하였기 때문임.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89.5%, 예산집행 우수사업 95.8%, 성과점수 3.1점/5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정책들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나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가율은 높으나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증가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0.9%,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4.3점/5점).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정책들은 정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1세 대비 증가분) 및 고용장려금 실제 이 용인원수 감소, 여전히 높은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 증가 율 등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72.7%, 예산집행 우수사업 87.5%, 성과점수 2.6점/5점).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던 농어촌 공사 지사 64개소에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 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목표달성률 89.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사업은 2009년부터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한도가 도래한 사업장이 발생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용자 지원 사업장수 목표치가 사업장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잡은 것으로, 용자지원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목표한 사업장을 모두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 사업의 경우,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전에 계획서를 받고 프로그램 및 전직이 완료된 후에 전직지원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2010년에 지원금을 신청한 곳이 적어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음.

-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정책의 성과는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총수(누적증가율)가 감소하고, 전문외국인력 체류자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93.8%, 예산집행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2.0점/5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사업은 다문화가정 부부 등 당사자들의 거부 및 방송노출 회피 등으로 방송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목표의 76.9%만 달성
-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성과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및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85.7%, 성과점수 4.3점/5점).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의 성과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과 평생학습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감소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3.8점/5점).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의 성과는 예산집행률이 낮음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예산집행 우수사업 71.4%, 성과점수 5.0점/5점).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52.0%로 낮게 나타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6%로 높지만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예산집행률은 86.6%로 낮음.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 강화” 정책의 성과는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정책의 성과는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표시 건수가 일정 건수를 초과하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5.0점)” 정책의 성과는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가 일정 건수를 초과하는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우수사업 각 100%, 성과점수 5.0점/5점).
-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5.0점)” 정책의 성과는 역모기지대출건수 증가율이 높은 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목표달성 우수사업 100%, 성과점수 5.0점/5점).

〈표 4-6〉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점수

(단위 : 개, %, 점)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점수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소계	
성장동력분야	1 (1.4)	1 (1.4)	2 (2.9)	66 (94.3)	70 (100.0)	3.9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 (2.6)	1 (2.6)	2 (5.3)	34 (89.5)	38 (100.0)	3.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	-	11 (100.0)	11 (100.0)	4.3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9.1)	1 (9.1)	1 (9.1)	8 (72.7)	11 (100.0)	2.6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	1 (6.3)	15 (93.8)	16 (100.0)	2.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	-	16 (100.0)	16 (100.0)	4.3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체계 확립	-	-	-	8 (100.0)	8 (100.0)	3.8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	-	-	8 (100.0)	8 (100.0)	5.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16 (100.0)	16 (100.0)	5.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	-	-	5 (100.0)	5 (100.0)	5.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	7 (100.0)	7 (100.0)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	2 (100.0)	2 (100.0)	5.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2 (100.0)	2 (100.0)	5.0

주: 당초목표를 90%미만 달성한 사업은 총 4개로 1-2의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89.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693.3%),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63.9%), 1-3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체부)(76.9%)임

〈표 4-7〉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소계	
성장동력분야	15,018.4(100.0)	-	1 (2.2)	2 (4.3)	43 (93.5)	46 (100.0)	24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457.1(16.4)	-	-	1 (4.2)	23 (95.8)	24 (100.0)	14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94.1 (2.6)	-	-	-	8 (100.0)	8 (100.0)	3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94.2 (5.3)	-	-	1 (12.5)	7 (87.5)	8 (100.0)	3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268.8 (8.4)	-	-	-	8 (100.0)	8 (100.0)	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2,298.0(81.9)	-	1 (7.1)	1 (7.1)	12 (85.7)	14 (100.0)	2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체계 확립	11,329.0(75.4)	-	-	-	7 (100.0)	7 (100.0)	1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969.0 (6.5)	-	1 (14.3)	1 (14.3)	5 (71.4)	7 (100.0)	1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63.3 (1.8)	-	-	-	8 (100.0)	8 (100.0)	8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105.0 (0.7)	-	-	-	1 (100.0)	1 (100.0)	4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57.3 (1.0)	-	-	-	6 (100.0)	6 (100.0)	1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0 (0.0)	-	-	-	1 (100.0)	1 (100.0)	1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	-	-	-	2

주: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3개로 1-2의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72.2%), 2-2의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52.0%),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86.6%)임

##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들의 성과는 연도별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1차 평가)에 기반함.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2차 평가)는 연도별로 정책 종류(내용)와 성과 지표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 점이 있어 고려하지 않도록 함.
- 한편, 영역 명칭 및 구분(사업의 분류 등)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과거의 정책들을 재구성함.
  - 따라서 동일한 영역이라도 세부 정책 내지 사업은 연도마다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 저출산분야

- 저출산분야의 목표달성정도(이하 전체 사업들 중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사업들의 비율을 의미함)는 전 기간에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2006~2007년 90%를 상회하였으나, 2008~2009년에는 80%대로 다소 낮았으며, 이후 2010년에는 95%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중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2008~2009년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2006~2007년과 2010년에 높게 나타남.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의 경우 2008년 75%를 제외하면 85% 이상으로 특히 2010년에는 95%로 높음.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의 경우 84% 이상이며 특히 2006~2007년 및 2010년에는 100%로 나타남.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의 경우 2007년 94%에 이어 2008~2010년에는 88%로 나타남.



〈표 4-8〉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단위: %, 사업수)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저출산분야	91.2	69	94.7	80	81.2	85	85.6	90	94.6	74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92.9	33	92.5	45	75.0	44	84.8	46	95.0	40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100.0	15	100.0	16	87.5	16	84.2	19	100.0	17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82.4	21	94.1	19	88.0	25	88.0	25	88.2	17

주: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 저출산분야의 예산은 2006년 2.3조원에서 2010년 5.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출산분야의 예산 중 대부분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중영역에 집중(90% 내외)되어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의 예산이 87.9%,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영역의 경우 7.8%,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의 경우 4.4%로 나타남.
- 2006~2010년간 총 예산(19조 4천억원) 중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 87.3%,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영역 8.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 4.4%로 나타남.
- 예산 집행실적(이하 전체 사업들 중 90% 이상 예산을 집행한 사업들의 비율로 측정함)은 전 기간에 걸쳐 85% 이상(2008년만 84.3%)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예산이 가장 집중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영역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영역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2010년에는 92%로 우수하게 나타남.

〈표 4-9〉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예산집행률(90% 이상 집행 사업 비율)

(단위: %, 십억원)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저출산분야	88.2	2,323	85.5	3,008	84.3	3,853	89.1	4,634	89.8	5,533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88.9	2,096	79.5	2,635	77.8	3,294	91.2	4,001	86.7	4,86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72.7	154	86.7	237	78.5	333	78.6	454	92.3	431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00.0	73	95.5	136	100.0	226	93.7	179	93.8	241

주: 1)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2) 2007년 예산액은 집행액, 나머지 연도는 최종예산 기준

-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성과로서 육아서비스 이용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육아휴직률, 가족친화지수, 가족가치관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됨.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로 육아서비스 이용률은 2006년 53.2%에서 2010년 68.7%,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성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동기간 41.6%에서 63.3%, 각각 증가함.
    -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액도 2008년 620만원에서 2009년 이래 870만원으로 증가함.
  -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종일제 유치원 비율이 2006년 73.3%에서 2010년 99.0%로 거의 모든 유치원이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동기간 2,029개소에서 3,535개소로 증가함.
  - 보건의료적인 지원 확대로 산모도우미 지원은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10,411명에서 52,491명, 불임부부 지원은 19,137명에서 56,658명으로 각각 증가함.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강화로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48,972명에서 75,742명, 육아휴직률은 27.9%에서

55.1%로 각각 증가함.

- 가족친화지수는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37.0%에서 51.6%로 증가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강화시킨 결과로 국민의 가족가치관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결혼필요성은 2008년 58.4%에서 2010년 72.2%,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은 2007년 90.9%에서 2010년 94.0%로 증가

〈표 4-10〉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주요 성과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1.12	1.25	1.19	1.15	1.23
1-1.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육아서비스 이용률(%)	53.2	58.0	61.0	63.6	68.7
방과후학교 참여율(%)	41.6	49.8	52.8	59.5	63.3
자녀양육 세제지원(만원)	-	-	620	870	870
국공립보육시설(개소)	1,643	1,748	1,826	1,917	2,034
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11.5	6.4	4.5	5.0	6.1
직장보육시설(개소)	298	320	350	370	40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	47.1	55.6	60.2	66.2	69.4
국공립-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차이	7.2	6.1	8.5	10.3	8.3
종일제 유치원 비율(%)	73.3	78.5	89.7	93.7	99.0
시간연장형 보육 운영시설(개소)	2,029	2,867	3,910	4,666	6,535
산모도우미 지원(건)	10,411	40,087	62,859	53,401	62,491
불임부부 지원(건)	19,137	14,337	13,269	17,238	56,658
1-2.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사회문화 조성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명)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육아휴직률(%)	27.9	36.3	42.5	50.2	55.1
엄마채용장려금 지원(명)	-	25	61	43	39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명)	-	66	413	233	418
가족친화지수	37.0	41.0	44.0	49.2	51.6
청소년의 결혼필요성(%)			58.4	58.4	72.2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		90.9	91.8	93.1	94.0
1-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안전사고사망률(아동인구10만명당)	7.1	6.2	6.0	5.4	na
아동·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이용률	28.8	67.4	59.9	43.0	44.7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가 아직은 출산율의 추이를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시행과 출산율 반등 간의 일정한 시차(time-lag)가 존재하는 한편 정책대상의 사각지대, 낮은 지원수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저소득층 위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원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녀양육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최대 12시간제의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는 보편화되었으나 취업모 등 취약보육계층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남아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1,643개소에서 2,034개소로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연 5%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자녀양육가정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휴가·휴직제도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도 여전히 미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예로, 일·가정 양립지원장려금 지원은 2006년 25명에서 2010년 39명으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은 동기간 66명에서 41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흡한 수준임.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은 2006년 47.1%에서 2010년 69.4%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직장보육시설은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98개에서 401개로 증가하는데 그침

## 2. 고령사회분야

- 고령사회분야의 목표달성정도(전체 사업 중 90% 이상 목표달성 사업 비율)는 전 기간에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2007년과 2009년에 88%와 89%였으며, 2006년과 2008년 및 2010년에는 94%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모든 중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2007년과 2009년에 목표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 다른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중영역의 경우, 2009년 77%를 제외하면 전 기간 80%대 수준으로 나타남.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의 경우, 2007년 85%를 제외하면 전 기간에 걸쳐 90% 이상임(2009~2010년 100%).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들의 경우에는 전 기간 대체로 90% 이상임(‘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은 2009~2010년 100%).

〈표 4-11〉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정도(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단위: %, 사업수)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고령사회분야	94.0	73	87.9	80	93.1	72	89.3	56	94.0	50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88.9	17	80.6	23	89.5	19	77.3	22	86.7	1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95.7	31	84.6	29	92.8	28	100.0	19	100.0	18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94.4	25	100.0	28	96.0	25	100.0	6	100.0	6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88.9	9	90.9	11

주: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 고령사회분야 예산은 2006년 1.3조원에서 2010년 5.0조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함. 2006년과 2007년에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영

역에 54.7%와 58.1%가 집중되었으나, 이후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영역 예산이 2007년 50.5%, 2009년 63.0%, 2010년 73.4%로 집중됨.

- 2010년 기준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영역의 예산이 73.4%,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 13.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영역 9.3%,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3.6%임.
- 2006~2010년간 총 17.7조원 중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영역 56.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 30.7%,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영역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3.0%임.

〈표 4-12〉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예산집행률(90% 이상 사업 비율)

(단위: %, 십억원)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고령사회분야	88.2	1,289	92.9	1,628	91.2	4,432	100.0	5,398	92.3	5,024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00.0	315	60.0	318	100.0	2,238	100.0	3,433	100.0	3,690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78.9	705	96.6	946	86.9	1,702	100.0	1,422	83.3	68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100.0	270	95.5	363	94.7	492	100.0	329	100.0	469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00.0	213	100.0	182

주: 1)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2) 2007년 예산액은 집행액, 나머지 연도는 최종예산 기준

□ 예산 집행실적(전체 사업 중 90% 이상 예산 집행 사업비율)은 2006년 88.2%를 제외하면 전 기간 90%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영역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은 2007년을 제외하면 100%로 아주 우수함.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영역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영역에서도 90% 이상 예산 집행 사업의 비율은 2007~2008년 95%, 이외 연도에서는 100%로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 경우에도 2006년을 제외하면 80% 이상으로 양호

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성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20~59세 공적 연금가입률, 노인공적소득보장 수혜율, 노인건강검진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13.4%에서 67.7%, 20~59세 공적연금가입률은 66.7%에서 71.4%, 노인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은 33.8%에서 99.6%로 각각 증가함.
  - 퇴직연금가입 사업장도 동 기간 16,287개소에서 94,455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길어진 노후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노인건강검진율(65세 이상 노인)은 44.8%에서 56.4%, 노인치매검진율(60세 이상 대상)은 0.4%에서 10.3%로 높아짐.
  - 노인장기요양 병상수는 2008년 68,581개소에서 2010년 126,782개소로 증가함.
-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창출건수가 83,038건에서 216,000건, 고령층 정보격차지수가 41.6에서 32.5, 지하철역 승강시설 누적대수가 2,844대에서 5,663대 그리고 저상버스가 누적으로 586대에서 3,206대로 증가함.
  -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2007년 6,399명에서 2010년 9,056명으로 증가함.

〈표 4-13〉 제1차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주요 성과

	2006	2007	2008	2009	2010
2-1.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13.4	12.6	57.2	68.9	67.7
20-59세 공적연금가입률(%)	66.7	68.0	68.4	69.7	71.4
노인공적소득보장 수혜율(%) <sup>1)</sup>	33.8	36.6	84.2	98.9	99.6
퇴직연금가입 사업장(개)	16,287	30,882	50,462	70,503	94,455
2-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노인건강검진율(65세이상노인)	44.81	49.98	51.64	56.37	56.37
노인치매검진율(60세 이상)	0.4	1.5	4.1	6.7	10.3
노인장기요양 병상(개)	*	*	68,581	88,266	126,782
2-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기반 조성					
노인교통사고사망률(10만명당)	37.7	37.1	34.6	35.2	
노인일자리 창출(건)	83,038	115,644	126,000	210,000	216,000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율	*	6,399	7,274	8,484	9,056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41.6	37.4	35.8	34.1	32.5
노인 주택만족도(%)	64.2		69.7		
지하철역 승강시설(누적대수)	2,844	2,988	3,029	5,157	5,663
저상버스(누적대수)	586	890	1,390	2,368	3,206

주: 1) 노인 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포함

- 이와 같이 고령사회분야 정책들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준비를 모색하였으나,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체질개선이 정책목표로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고령사회로 인해 겪게 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는 부족 및 소득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 수행으로 인한 낮은 정책체감도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
  -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미흡, 노인진료비 억제 방안 모색 부족
  - 취약노인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에 머물러있어, 모든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정책 부족



-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다수가 저소득층 노인에 제한되어 있음.
- 노인 여가문화·사회참여·건강관리와 관련한 대다수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게 평가됨.

### 3. 성장동력분야

- 성장동력분야의 목표달성정도(전체 사업 중 90% 이상 목표달성 사업 비율)는 전 기간에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2006년과 2009년에 80%대이며, 2007~2008년 및 2010년에는 90%를 상회함.
- 중영역별로 연도에 따라 목표달성정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의 경우, 2006년 73%를 제외하면 전 기간 85% 이상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85%수준, 2007년 91%, 2008년과 2010년에는 100%로 높게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의 경우에는 2009년 83.3%를 제외하면 전 기간 100%임.

〈표 4-14〉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90% 이상 달성 사업 비율)

(단위: %, 사업수)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90% 이상	과제수
성장동력분야	82.7	59	91.1	71	94.2	69	89.6	77	94.3	70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73.1	29	87.5	34	88.9	36	94.9	39	89.5	38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84.6	15	91.2	19	100.0	17	85.0	20	100.0	16
고령친화산업 육성	100.5	5	100.0	6	100.0	5	83.3	18	100.0	16
	100.0	10	100.0	12	100.0	11				

주: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 성장동력분야 예산은 2006년 1.1조원에서 2010년 1.5조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전체 예산 중 80% 이상이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에 집중됨.
- 2010년 기준으로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의 예산이 16.4%,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 81.9%,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 1.7%임.
  - 2006~2010년간 총 7조원 중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 10.6%,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 87.0%,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 2.4%임.
- 예산 집행실적(전체 사업 중 90% 이상 예산 집행 사업비율)은 전 기간 85% 이상(2010년 93.5%)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영역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은 2007년(76.2%)을 제외하면 80% 이상이며 특히 2010년에는 95.8%로 높음.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영역에서 90% 이상 예산 집행 사업의 비율은 전 기간 85% 이상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에서의 예산집행실적은 전 기간 100%로 아주 우수함.

〈표 4-15〉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률(90% 이상 사업 비율)

(단위: %, 십억원)

평가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사업 비율	예산
성장동력분야	86.8	1,125	88.2	1,305	91.5	1,417	89.3	1,738	93.5	1,502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76.2	85	83.9	86	88.0	121	85.7	210	95.8	246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00.0	1,017	89.3	1,173	92.9	1,250	88.2	1,497	85.7	1,230
고령친화산업 육성	-	-	100.0	10	100.0	7	100.0	31	100.0	26
	100.0	24	100.0	36	100.0	39				

주: 1) 2006~2009년 각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

2) 2007년 예산액은 집행액, 나머지 연도는 최종예산 기준

□ 이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성파로서 평생학습참여율, 산업재해율,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주요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역모기지 대출, 전문외국인력 채류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의 노동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59.3%에서 60.9%,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는 227명에서 1,869명, 전문외국인력 채류자는 29,011명에서 43,608명으로 각각 증가함.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은 34.1%에서 39.9%, 산업재해율은 0.77%에서 0.69%,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은 52.9%에서 70.6%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과로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07년 1.45조원에서 2.82조원, 역모기지 대출은 515건에서 2,016건으로 증가함.

〈표 4-16〉 제1차 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주요 성과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3-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여성경제활동참가율(OECD 기준)(%)	50.3	50.2	50.0	49.2	49.4
고령자(55~64세) 고용률(%)	59.3	60.6	60.6	60.4	60.9
정년연령(세) <sup>1)</sup>	56.93	56.95	57.14	57.18	57.3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명)	227	585	997	1,497	1,869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명)	255,803	261,628	273,945	274,850	217,559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명)	9.94	7.06	11.36	13.79	6.66
방문취업사중 누적 소지자(천명)	*	229	299	306	287
전문외국인력 채류자(명)	29,011	33,502	37,304	40,627	43,608
3-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75.4	75.8	76.7	76.4	55.0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34.1	39.5	42.0	41.3	39.9
평생학습참여율(%)	*	29.8	26.4	28.0	30.5
산업재해율(%)	0.77	0.72	0.71	0.70	0.69
산재장해인직업복귀율(%)	52.9	61.9	67.9	65.3	70.6
3-3. 고령친화산업 육성					
주요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억원)	*	14,514	17,599	23,495	28,224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 표시(건)	*	*	296	265	179
고령친화제품 표준화(건)	4	13	14	9	16
역모기지 대출(건)	*	515	695	1,124	2,016

주: 1) 정년 채택사업장(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연령(세)

□ 이와 같이 성장동력분야 정책들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사회에의 대응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준비를 모색하였으나, 짧은 기간의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했던 성과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예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3%에서 49.4%, 정년연령은 56.93세에서 57.35세, 고용장려금 이용인원은 256천명에서 218천명으로 감소하거나 아주 낮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평생학습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10년 30.5%로 거의 변화가 없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0년 55.0로 낮음.

○ 즉, 전체적으로 사업별 성과는 양호하나 투입대비 성과의 가시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여성인력 및 고용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 의식 개선과 고용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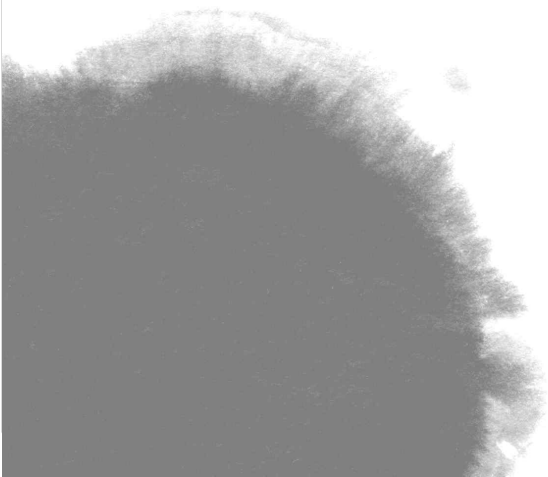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외국적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도입과 관련 인구자질과 사회통합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체계적인 추진이 중요

- 노동력 손실 방지를 위한 산재예방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 등 종합적 노력 필요

05

K  
I  
H  
A  
S  
A

**결론**





## 제5장 결론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및 2010년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194개 사업, 총예산 12.1조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함.
- 평가결과,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사업이 94.3%,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사업이 91.6%로 나타남.
  - 성과점수는 3개 분야 평균 4.1점(저출산 4.0, 고령사회 4.5, 성장동력 3.9)으로 우수한 것으로 측정됨.
  - 저출산분야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목표달성도가 높고(우수사업 94.6%) 예산집행률도 양호(우수사업 89.9%)하여, 성과점수는 우수(4점)한 것으로 평가됨.
  - 고령사회분야의 정책들도 전반적으로 목표달성도(우수사업 94.0%)와 예산집행률(우수사업 92.3%) 모두 높고, 성과점수도 우수(4.5점)한 것으로 평가됨.
  - 성장동력분야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도(우수사업 94.3%)와 예산집행률(우수사업 93.5%) 모두 높으나, 성과점수는 3.9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2010년도가 제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전반적으로 성과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

가됨.

- 저출산분야의 목표달성정도(전체 사업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사업 비율)는 전 기간 80% 이상(2010년 95%)
  - 고령사회분야의 목표달성정도도 전 기간 80% 이상(2006년, 2008년, 2010년 94%)
  - 성장동력분야의 목표달성정도도 전 기간 80% 이상(2007~2008년, 2010년 90% 상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추진성과로서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저출산분야에서는 육아서비스 이용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육아휴직률, 가족친화지수, 가족가치관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 고령사회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공적연금가입률, 노인공적소득보장 수혜율, 노인건강검진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성장동력분야에서는 평생학습참여율, 산업재해율,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주요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역모기지 대출, 전문외국인력 체류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존재, 낮은 지원수준, 정책부문별 구간별 목표의 불명확 및 전략 부재 등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가 낮고 그로 인하여 효율성이 충분하게 제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음.
- 그 근거로 저출산분야 정책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부문(여성, 고령자, 외국인력)과 산업부문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책부문별 및 구간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저출산부문]

- 자녀양육 부담의 실질적 완화
  -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초등보육 강화, 자녀수에 비례한 세제체계 개편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물량확대를 통한 대상 확대, 자녀특성(자녀수, 연령, 성구조)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평형수, 방수 등), 전세자금 등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등),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수준으로 전환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통한 차등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와 함께 서비스간 연계 및 추가비용 지원 추진, 가정보육 활성화 및 질적 수준제고
  - 분만취약지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지원, 가임여성 건강관리 강화(임신출산관련 무료검진 및 상담, 건강한 임신준비 등 교육), 임신 분만 양육 보건의료비 부담 경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수준 현실화를 통한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민간병의원 이용시 전액 지원)
-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실천
  - 비정규직 등의 모성보호 강화(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지원금의 인센티브 강화 및 고용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업 규제)
  - 육아휴직제도 개선(임금대체수준 및 인력대체수준 제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유인책 강화, 비정규직 등 육아휴직 수혜 대상 확대, 유연근무형태의 민간기업 확대)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개선(기업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함께 기업 규제 검토, 평가기준 및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 출산 육아 후 여성노동시장 복귀 지원(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교육 체계화(인구교육 의무시수 확보 및 교양과목을 통한 대학생 교육 확대 실시)
  - 다자녀가정 사회적 우대제 확립(대학 입학·교육, 군복무, 취업 시)

#### [고령사회부문]

-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노인친화적 보건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장체계의 고령친화성 제고
- 중고령 은퇴자의 다각적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사회적기여 극대화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 기반 조성
- (사전예방적 접근의 강화) 노인보건복지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곧 노년기에 접어들 고령층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으로 정책 전환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대규모 베이붐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에 선제적 대응)
  - 이를 위해 중고령자 및 중산층이상 노인까지 고령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확대
  - 노년기 진입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후설계,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성장동력부문]

- 잠재인력 확보 및 활용
  - 취업 지원 사업들을 통합추진, 학력수준별, 특성별, 직종별로 나누어 여성들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사업에

#### 통합

-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조속한 시행
- 외국인력 유치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간별 구체적인 전략 마련 필요
-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평생학습계좌 대상 확대 등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우수제품 지정, 표시제를 확대실시
  - 고령친화용품 인증제도 확대/활성화
  - IT융합 고령친화산업 단지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지원
  - 고령사회 대응 연구개발 성과관리 등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국방부 내부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김성준·윤수재(2002),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금융위원회 내부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7년도 중앙부처 기행 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8년도 중앙부처 기행 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기행 계획』.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기행 계획』.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각 년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보건복지부(2008,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보건복지부(2007, 2008, 2009, 2010),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사회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이삼식·오영희·이윤경·최효진(2009), 『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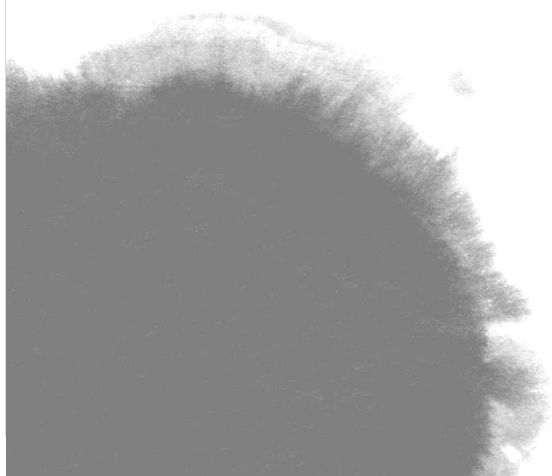
이삼식·이지혜·최효진·박보미(2010),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정경희·신윤정·이소정·박세경·박종서·이윤경·장보현·최효진(2008),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부록







## 부록

[부록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목표달성률 분포

〈부표 1-1〉 2010년도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분야	1 (1.4)	1 (1.4)	2 (2.7)	70 (94.6)	74 (100.0)
1.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1 (2.5)	1 (2.5)	38 (95.0)	40 (100.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	-	-	5 (100.0)	5 (100.0)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1 (6.3)	-	15 (93.8)	16 (100.0)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	7 (100.0)	7 (100.0)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1 (8.3)	11 (91.7)	12 (100.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	-	17 (100.0)	17 (100.0)
2-1. 모성보호 강화	-	-	-	3 (100.0)	3 (100.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	-	7 (100.0)	7 (100.0)
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	-	-	7 (100.0)	7 (10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5.9)	-	1 (5.9)	15 (88.2)	17 (100.0)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1 (14.3)	-	-	6 (85.7)	7 (100.0)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	1 (12.5)	7 (87.5)	8 (100.0)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	-	-	2 (100.0)	2 (100.0)

## 〈부표 1-2〉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운영				○
	•보육보포탈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산전검사로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양플러스 사업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난임기술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	

〈부표 1-3〉 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활성화				○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형태 유연화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 캠페인 및 가족친화 마을 조성				○

## 〈부표 1-4〉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10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 아동안전지킴이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흡연예방교육 (결과 미발표)				
3-3.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부표 1-5〉 저출산분야 목표달성도 90% 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1.8%)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81.9%)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안전지킴이(33.5%)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73.9%)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부표 1-6〉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고령사회분야	3 (6.0)	-	-	47 (94.0)	50 (100.0)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13.3)	-	-	13 (86.7)	15 (100.0)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1 (9.1)	-	-	10 (90.9)	11 (100.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 (25.0)	-	-	3 (75.0)	4 (10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	-	-	18 (100.0)	18 (100.0)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	-	-	7 (100.0)	7 (100.0)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	-	7 (100.0)	7 (100.0)
2-3. 노인 권익 증진	-	-	-	4 (100.0)	4 (100.0)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	-	-	6 (100.0)	6 (100.0)
3-1. 노인일자리 창출	-	-	-	1 (100.0)	1 (100.0)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조건 조성	-	-	-	5 (100.0)	5 (100.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 (9.1)	-	-	10 (90.9)	11 (100.0)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 (12.5)	-	-	7 (87.5)	8 (100.0)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	-	-	3 (100.0)	3 (100.0)

〈부표 1-7〉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 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 선방안 마련				○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고				○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 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 〈부표 1-8〉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 질환 예방				○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보호 강화				○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 〈부표 1-9〉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부표 1-10〉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가구 주거자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저상버스)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시철도)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수도권전철)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유도				○

〈부표 1-11〉 고령사회분야 목표달성도 90% 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0.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0.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2-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2-3. 노인 권익 증진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3-2. 생산적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 참여여건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0.0%)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개발	

〈부표 1-12〉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성장동력분야	1 (1.4)	1 (1.4)	2 (2.9)	66 (94.3)	70 (100.0)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 (2.6)	1 (2.6)	2 (5.3)	34 (89.5)	38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	-	11 (100.0)	11 (100.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9.1)	1 (9.1)	1 (9.1)	8 (72.7)	11 (100.0)
1-3. 외국인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조성	-	-	1 (6.3)	15 (93.8)	16 (100.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	-	16 (100.0)	16 (100.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	-	8 (100.0)	8 (10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	-	-	8 (100.0)	8 (10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16 (100.0)	16 (100.0)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	-	-	5 (100.0)	5 (100.0)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	-	7 (100.0)	7 (100.0)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	-	2 (100.0)	2 (100.0)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2 (100.0)	2 (100.0)

〈부표 1-13〉 2010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 제도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중·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제의 조기정착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교과부)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체부)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부표 1-14〉 2010년‘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 시장 연계강화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노동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부표 1-15〉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목표달성도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우수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지경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 고령친화제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 장애인 복지표준 제 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장기저축저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부표 1-16〉 성장동력분야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89.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693.3%)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63.9%)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체부)(76.9%)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표 1-17〉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사업목표 달성도

(단위: 사업수, %)

평가항목	사업목표 달성도				
	50%미만	50~70%	70~90%	90%이상	전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	3 (100.0)	3 (100.0)
1. 전략적 홍보·교육	-	-	-	1 (100.0)	1 (100.0)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	-	1 (100.0)	1 (100.0)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	-	1 (100.0)	1 (100.0)

〈부표 1-18〉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1. 전략적 홍보·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부록 2]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분포

〈부표 2-1〉 2010년 저출산분야 중·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율 사업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저출산분야	55,352.2	100.0	2 (3.4)	1 (1.7)	3 (5.1)	53 (89.8)	59 (100.0)	16
1.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8,634.3	87.9	1 (3.3)	1 (3.3)	2 (6.7)	26 (86.7)	30 (100.0)	10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0.5	0.0	-	-	-	1 (100.0)	1 (100.0)	4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43,965.5	79.5	1 (7.7)	-	2 (15.4)	10 (76.9)	13 (100.0)	3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001.6	3.6	-	-	-	6 (100.0)	6 (100.0)	1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666.6	4.8	-	1 (10.0)	-	9 (90.0)	10 (100.0)	2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4,309.2	7.8	1 (7.7)	-	-	12 (92.3)	13 (100.0)	4
2-1. 모성보호 강화	3,723.5	6.7	-	-	-	3 (100.0)	3 (100.0)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2.8	0.0	1 (20.0)	-	-	4 (80.0)	5 (100.0)	2
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562.9	1.0	-	-	-	5 (100.0)	5 (100.0)	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408.7	4.4	-	-	1 (6.3)	15 (93.8)	16 (100.0)	2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683.9	1.2	-	-	-	6 (100.0)	6 (100.0)	1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326.8	2.4	-	-	-	8 (100.0)	8 (100.0)	1
3-3.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398	0.7	-	-	1 (50.0)	1 (50.0)	2 (100.0)	

〈부표 2-2〉 2010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운영				○	
	·보육보포탈시스템 구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산전검사료 지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양플러스 사업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	
	·난임시술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병원까지 확대		○			



〈부표 2-3〉 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	
	• 근로형태 유연화				○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친화지수 측정				○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환경 조성	•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캠페인 및 가족친화 마을 조성				○	

〈부표 2-4〉 2010년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
	• 아동안전지킴이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	
	•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	
아동의 발달 지원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흡연예방교육				○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부표 2-5〉 2010년 저출산분야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영역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77.8%)</li> <li>•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88.3%)</li> <li>•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7.3%)</li> </ul>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55.5%)</li> </ul>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20.0%)</li> </ul>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88.4%)</li> </ul>

## 〈부표 2-6〉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중 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고령사회분야	50,242.9	100.0	-	-	2 (7.7)	24 (92.3)	26 (100.0)	24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6,899.0	73.4	-	-	-	2 (100.0)	2 (100.0)	13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36,893.0	73.4	-	-	-	1 (100.0)	1 (100.0)	10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6.0	0.0	-	-	-	1 (100.0)	1 (100.0)	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6,829.3	13.6			2 (16.7)	10 (83.3)	12 (100.0)	6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846.1	1.7	-	-	-	6 (100.0)	6 (100.0)	1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4,619.6	9.2	-	-	1 (50.0)	1 (50.0)	2 (100.0)	5
2-3. 노인 권익 증진	1,363.6	2.7	-	-	1 (25.0)	3 (75.0)	4 (100.0)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4,697.2	9.3	-	-	-	6 (100.0)	6 (100.0)	-
3-1. 노인일자리 창출	3,067.0	6.1	-	-	-	1 (100.0)	1 (100.0)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630.2	3.2	-	-	-	5 (100.0)	5 (100.0)	-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817.4	3.6	-	-	-	6 (100.0)	6 (100.0)	5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731.4	3.4	-	-	-	4 (100.0)	4 (100.0)	4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86	0.2	-	-	-	2 (100.0)	2 (100.0)	1

〈부표 2-7〉 2010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

〈부표 2-8〉 2010년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암검진 수검률 제고				○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보인부담 수준 관리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
	•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부표 2-9〉 2010년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				○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반 조성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부표 2-10〉 2010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가구주거자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저상버스)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도시철도)				○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수도권전철)				○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
	• 가사활동 지원사업				○	
	• 지역자원,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	

〈부표 2-11〉 2010년 고령사회분야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영역	목표달성도 90%미만 사업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2-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81.9%)
2-3. 노인 권익 증진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87.2%)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3-2. 생산적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 참여여건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개발	

〈부표 2-12〉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중 소영역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성장동력분야	15,018.4	100.0	-	1 (2.2)	2 (4.3)	43 (93.5)	46 (100.0)	24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457.1	16.4	-	-	1 (4.2)	23 (95.8)	24 (100.0)	14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94.1	2.6	-	-	-	8 (100.0)	8 (100.0)	3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94.2	5.3	-	-	1 (12.5)	7 (87.5)	8 (100.0)	3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268.8	8.4	-	-	-	8 (100.0)	8 (100.0)	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2,298.0	81.9	-	1 (7.1)	1 (7.1)	12 (85.7)	14 (100.0)	2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체계 확립	11,329.0	75.4	-	-	-	7 (100.0)	7 (100.0)	1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969.0	6.5	-	1 (14.3)	1 (14.3)	5 (71.4)	7 (100.0)	1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63.3	1.8	-	-	-	8 (100.0)	8 (100.0)	8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105.0	0.7	-	-	-	1 (100.0)	1 (100.0)	4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57.3	1.0	-	-	-	6 (100.0)	6 (100.0)	1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0	0.0	-	-	-	1 (100.0)	1 (100.0)	1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	-	-	-	-	-	2



〈부표 2-13〉 2010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중영역 예산집행률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 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정년제도 개선					○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중고령자 작업능력 개발 지원	•준·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
고령근로자 직무 수행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

중영역	세부영역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 및 관리증진 강화(노동부)				○	
	•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 및 관리증진 강화(법무부)					○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부표 2-14〉 2010년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노동부)				○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부표 2-15〉 2010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
우수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 표시 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복지부)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지경부)				○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플러스센터 구축				○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 고령친화제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장기국채시장 육성	• 초장기채 발행					○

〈부표 2-16〉 2010년 성장동력분야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영역	예산집행률 90%미만 사업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프로그램 제공(72.2%)
1-3. 외국인력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52.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86.6%)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부표 2-17〉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집행률

(단위: 억원, 사업수, %)

평가항목	예산액 (억원)	비중 (%)	예산집행률				계	비예산 사업수
			50% 미만	50~ 70%	70~ 90%	90% 이상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68.6	100.0	-	-	-	3 (100.0)	3 (100.0)	-
1. 전략적 홍보 교육	41.0	59.8	-	-	-	1 (100.0)	1 (100.0)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26.8	39.1	-	-	-	1 (100.0)	1 (100.0)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0.8	1.2	-	-	-	1 (100.0)	1 (100.0)	-

〈부표 2-18〉 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중영역별 예산집행률

소영역	세부사업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예산
1. 전략적 홍보·교육						
전략적 홍보·교육	• 전략적 홍보·교육				○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 동체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부록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원본) 중 2008년 보완판에서 삭제된 정책

〈부표 3-1〉 저출산영역 과제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1-1-1.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1-1-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농산어촌 지원비율	19개 군 (13.7%)	89개 시군 (64%)	140개 시군
	목표달성률(%)	124.5	101.1	100.0
방과후 활동 운영 시스템 연계 조정	방과후활동 관제부처간 회의개최수	1회	2회	-
	목표달성률(%)	100.0	50.0	
1-1-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1-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1-1-5. 국내입양 활성화				
1-1-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아동수당 도입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변경	
	목표달성률(%)		-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2-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학교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수		5개소	2개소
	목표달성률(%)		50.0	50.0
직장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직장 보육시설 제공 사업장수 증가율	20%	20.5%	20%
	목표달성률(%)	200.0	205.0	200.0
1-2-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국공립시설대비 민간시설보육비용	78%	80.8%	78%
	목표달성률(%)	102.6	103.6	100.0
사립유치원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지원아동수/대상아동수)×50%+ 지자체 재원확보 여부×50%	시범 사업	100.0%	-
	목표달성률(%)		100.0	
1-2-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문화시설 내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지자체 문예회관 육아시설 설치 독려	문예회관 육아서비스 설치운영 실태 파악		2개관 설치
	목표달성률(%)	100.0		100.0
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3-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3-2. 불임부부 지원				
1-3-3. 산모도우미 지원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성과지표 및 실적	제도설계	제도 법제화	제도시행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1-2.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행안부)	성과지표 및 실적		국가공무원법 관련법령개정	우수사례 발굴, 홍보
	목표달성률(%)		100.0	100.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도입	성과지표 및 실적	제도설계	제도설계	제도시행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2-1-3.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운영	방문자 수(연간)	133만명	569만명	558만명
	목표달성률(%)	295.6	109.4	93.0
2-1-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2-2-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2-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2-2-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1-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조사 실시			완료
	목표달성률(%)			100.0
3-1-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3-1-3. 학교 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2-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이용아동 만족도(점)	88		
	이용아동 증가율(%)	35	15.2	5.5
	목표대비아동복지교사지원율(%)			100.0
	목표달성률(%)	97.6 233.3	152.0	110.0 111.1
3-2-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실시	실시	실시	실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민간 모니터링 기구 설치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실시	실시	실시	실시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3-2-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수혜자수	120만명	53만명	58.7만명
	지역문화지원연계프로그램수혜자수	22만명	8만명	
	자율연구모임 참여 교원(명)	700	270	175
	연수참여교원(명)	850	2,446	
	목표달성률(%)	141.2 220.0 127.3 154.5	58.9 114.3 90.0 100.0	101.2 58.3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참여학생 수(명)	8,300	9,700	10,088
	목표달성률(%)	92.2	114.1	134.5
3-2-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차단 강화	시범학교청소년 음주인식개선도	3.2% 개선	3.3% 개선	
	목표달성률(%)	106.7	110.0	
3-2-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부표 3-2〉 고령사회영역 과제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1-1-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1-1-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재정계산 실시 (사학연금)	재정계산 및 결과확정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 등	재정효과분석, 실무협의회 운영	재정효과분석 보고서
	목표달성률(%)			100.0
1-1-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1-1-4.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2-1. 경로연금 확대				
1-2-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자발적 보험료 납부 유도	소득신고자(천명)	12,755	13,106	13,249
	목표달성률(%)	101.6	103.0	101.2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	가입자	신규사업장 57,942개	전체가입 1,209천명	신규가입 94,296명
	목표달성률(%)	104.2	107.5	115.0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3-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성과지표 및 실적		민·한노총 간담회, 연구용역, 실무위원회	확대적용시기, 부담수준 시행령개정 미완료
	목표달성률(%)		100.0	
1-3-2. 개인연금 활성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2-1-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등록관리가구(가구)		87만	106만
	방문수혜자 만족도		80%	83.3점
	목표달성률(%)		100.0 114.3	106.0 119.0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효율화	이용자 만족도(%)	93.6	90.6	91.0
	현년도/전년도이용자×100			21.7
	목표달성률(%)	110.1	106.6	113.8 723.0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		8.1	17.1
	스포츠클럽누계수	15개	21개	32
	목표달성률(%)	100.0	81.0 105.0	114.0 106.7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2-1-2.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노인성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성과지표 및 실적	요양병원형 수가안 마련, 시범사업	수가고시개정, 요양병원 적용	
	목표달성률(%)	100.0	100.0	
2-1-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2-2-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제정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법령 제정	노인수발보험법안 국회제출	1단계 제정·공포, 2단계 개정 추진	2단계 개정·공포
	목표달성률(%)	100.0	80.0	100.0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개발	요양급여 수가개발 완료	2차시범사업 수가개발, 수가산정 비용창구 자립마련, 신규급여 추가개발	장기요양위원회 개편, 적정수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결정	장기요양위원회 개편, 적정수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결정
	목표달성률(%)	-	100.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	대상자 관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완료, 세부업무매뉴얼개발	전산시스템 구축완료 및 모의운영 실시
	방문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	시범사업: 조사요원 채용, 교육	공단조직 인력 설계 연구용역, 공단정관개정	전담인력 2,496명 채용, 교육완료
	목표달성률(%)	-	80.0 80.0	100.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관정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율(%)	2차 시범사업	2.3	1.9
	서비스 만족도(%)	시범계획 수립	84.1	68.9
	제도 인지도(%)	및 세부지침	60	67.9
	제도도입 찬성률(%)	개발 완료	8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목표달성률(%)	100.0	177.0 140.2 100.0 96.0	122.0 114.8 84.9
	등급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			4.4
	제도에 대한 만족도(%)			68.9
	제도에 대한 인지도(%)			67.9
목표달성률(%)				119.0 114.8 84.9
2-2-2.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질높은 서비스 인력 인프라 구축	목표대비요양보호사양성률(%)			100.5
	목표달성률(%)			100.5
2-2-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확충 병상수	1,695	790	1,420
	목표달성률(%)	242.1	131.7	157.8
급성기병상을 요양 병원으로 전환시 시설개·보수비 용자지원	사업완료 요양병상수	818	991	
	목표달성률(%)	136.3	165.2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b>2-2-4.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b>				
민간 재가서비스기관의 서비스질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성과지표 및 실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97.2% 조사		서비스 만족도 92.3점
	목표달성률(%)	108.0		115.4
<b>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b>				
<b>2-3-1.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b>				
체육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야간조명시설지원수	69	111	79
	목표달성률(%)	100.0	138.8	114.5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①생활체육시설구축 ②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생활체육시설구축)목표 대비 1인당체육시설 면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자체 118개소	37.9%	41.7%
	(잔디운동장)조성학교수		91개교	93개교
	(잔디운동장)조성학교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		181억원	163억원
	목표달성률(%)	50.9	103.3 101.1 167.6	110.0 103.3 150.9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자율체육 활동 활성화 ①학생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②스포츠클럽 창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		8.1	17.1
	스포츠클럽누계수	15개	21개	32
	목표달성률(%)	100.0	81.0 105.0	114.0 106.7
<b>2-3-2.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b>				
유아 및 학교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시범운영학교수	연구결과발표	18교	32교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직장운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년대비 비만자 감소율(%)	10.6	24.2	26.5
	목표달성률(%)	151.4	345.4	265.0
체육전문인력 체계적 관리 및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	체육지도자 양성자 수(명)	10,934	15,704	11,203
	국민체육센터 조성률(%)	38.0	41.5	47.4
	목표달성률(%)	91.1 100.0	157.0 102.2	101.8 106.8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4	5.4	6.3
	목표달성률(%)	97.8	108.0	105.0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 제공	스포츠 7330 브랜드 인지도(%) (’06년: 매체별 홍보 횟수 등)	TV,라디오등 207회 버스,지하철 450대 신문,잡지 38회 기획,일반보도 230회 TV다큐 4회	6.3	8.7
	목표달성률(%)	172.5, 112.5, 126.7 115.0, 200.0	126.0	108.8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3-1-1.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성과지표 및 실적	설계지침 고시	주거기준안 마련 70%	주거기준안 마련 1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주택개조기준 매뉴얼 제작보급	매뉴얼 개발 보급	30%	100%	
	목표달성률(%)	100.0	100.0	
중장기 주거지원계획 수립	중장기계획(안) 마련	30%	50%	중장기계획안 확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3-1-2.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3-2-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률(%)	100		
	목표달성률(%)	100.0		
이동편의시설 매뉴얼 제작·보급	이동편의시설매뉴얼 제작보급률	100%		
	목표달성률(%)	100.0		
3-2-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계획대비 실제 제작·배포량(매)		150,000	미실시
	목표달성률(%)		100.0	-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3-3-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3-3-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3-3-3.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전원마을 조성)	도시민비율(%) (도시민/전체입주자)	81	88	70
	목표달성률(%)	162.0	125.7	100.0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전년대비 소득증가율(%)	16.2	17	18.31
	목표달성률(%)	108.0	113.3	107.7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동복지관서비스수혜자 수(명)	3,238	31,755	12,506
	목표달성률(%)	99.9	198.7	123.2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시	성과지표 및 실적		4개지역 세부계획수립	실행방안 수립
	목표달성률(%)		100.0	100.0
3-3-4.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교과개정개발 등 신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교과과정 개편 방향제시 여부		보조교재 개발	교과서개발
	목표달성률(%)		100.0	100.0
노인대상 사기 예방 및 신고문화 강화	전년도 대비 피해건수			'08신규로 실적산출불가
	목표달성률(%)			

〈부표 3-3〉 성장동력영역 과제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1-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 온라인교육 실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 온라인교육 이용자수(명)			10,298
	목표달성률(%)			117.8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2-1.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1-2-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1-2-3.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1-2-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2-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	재난대피 시설현장실시간감소율(%)	65.2	73.3	17.7
	목표달성률(%)	931.4	1047.1	177.0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3-1. 외국적동포의 활용				
1-3-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3-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1-3-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1-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School to Work)				
2-1-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2-1-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직업훈련 인프라 혁신	노후화된 시설 개선(기관)		14개	
	노후화된 장비 개선(개수)		14,117	
	목표달성률(%)		100.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2-2-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2-2-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2. 자산운용사업의 활성화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추진	성과지표 및 실적	자본시장법 법률안 제출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여부	간접투자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자본시장 통합법 국회통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자본시장 통합법 국회통과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목표달성률(%)		100.0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여부	간접투자법 시행령개정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신탁제도의 활성화	07년중 자본시장 통합법 국회통과	국회제출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	
	목표달성률(%)	100.0	100.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4-1-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1-2.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4-1-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부표 3-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영역 과제

영역 및 사업명	성과지표	2006	2007	2008
1. 전략적 교육·홍보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3-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3-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3-3.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구패널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성과지표 및 실적		예비조사 1,500가구 완료	
	목표달성률(%)		100	

[부록 4]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성과평가 대상 정책

〈부표 4-1〉 저출산영역 과제

소영역	세부사업	과제수	비고
<b>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b>			
<b>1-1. 신혼부부 출발지원</b>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 건강한 결혼 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	1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2	
	•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3	
	• 유자녀 기혼병사 상근예비역 선발 및 배우자 임신시 입영기일 연기	4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5	
<b>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b>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6	
	• 유아교육비 지원	7	
	•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8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9	
	•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운영	10	
	• 보육보포탈시스템 구축	11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2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13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14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15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16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17	
주거안정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18	
	• 주택자금 대출 혜택 부여	19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 미혼모지원거점기관 운영	2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1	
<b>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b>			
육아지원 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2	
	• 직장보육시설 확충	23	
민간보육시설 보육 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24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25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6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사업	27	
	• 종일반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28	
<b>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b>			
산전검사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 산전검사료 지원	29	
	• 찾아가는 산부인과	30	
	• 분만취약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31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32	
	•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33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34	

소영역	세부사업	과제수	비고
	•영유아 건강검진	35	
	•영양플러스 사업	36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37	
	•난임시술 지원확대	38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9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40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41~4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활성화	43	
및 근로형태 유연화	•근로형태 유연화	44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45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지원	46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친화지수 측정	47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8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49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0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지원	51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 지원 기능강화	52	평가대상 제외(과제중단)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53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범국민적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54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55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6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57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58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족친화문화조성 홍보 캠페인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	59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6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안전지킴이	6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 기반 구축	62~63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 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64~65	
	•아동 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66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67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68~71	

소영역	세부사업	과제수	비고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72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73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74	
아동의 발달 지원	•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75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76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추진	77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추진	78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79-80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흡연 등 건강유해행태 감소추진	81	평가대상 제외(09년종료)
	• 학교흡연예방교육	82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83	평가대상 제외(09년종료)
3-3.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84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85	

## 〈부표 4-2〉 고령사회영역 과제

중영역	세부사업	과제수	비고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1	
	•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2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관리 제도개선	3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제고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고	5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6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7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8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9	
	•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10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11~1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간 가교사업 연계			평가대상 제외(09년종료)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제도 확대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13	
	• 퇴직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14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15	
	•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강화	16	
개인연금 활성화			평가대상 제외(09년종료)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17	
	• 암검진 수집률 제고	18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19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20	
	•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21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22	
차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차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23~26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7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28	
	• 본인부담 수준 관리	29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30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강화	31	
	• 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	32	



중영역	세부사업	과제수	비고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33~35	
2-3. 노인 권익 증진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 보호 강화	36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37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38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39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창출	40~41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42~43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44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45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46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7	
3-3.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		48	평가대상 제외(과제없음)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49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50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저상버스)	51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도시철도)	52	
	•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수도권전철)	53	
	•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4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55	
	• 노인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운동 추진	56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57	
	• 가사활동 지원사업	58	
	• 지역자립 마을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59	

〈부표 4-3〉 성장동력영역 과제

중영역	세부영역	과제수	비고
1.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2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3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5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6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7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강화	8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9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10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11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12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13	
	•정년제도 개선	14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5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16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17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18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19	
중·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중·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20	
고령근로자 직무수행 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21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22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외국적 동포 취업절차 개선	23	
	•외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24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법무부)	25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노동부)	26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27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28	
	•사증발급 및 체류 편의제공	29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30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31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노동부)	32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법무부)	33	

중영역	세부영역	과제수	비고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34	
	• 외국인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35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교과부)	36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문체부)	37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3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운영지침) 개발	39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교과부)	40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노동부)	41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제공 확대	42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노동부)	43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교과부)	44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강화	45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평가대상 제외(09년종료)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46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47	
	• 안전취약부분 감독 강화	48	
	• 작업환경개선 추진 주력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49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50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5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52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53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54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반 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55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56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57	
	• 우수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58	
고령친화제품 종합 체험관 설립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59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기술 개발 촉진	• 복지용구 우수제품개발 등 R&D	60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61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복지부)	62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지경부)	63	
	•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64	
	• 세계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평가대상 제외(과제없음)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65	
	• 고령친화제품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66	

중영역	세부영역	과제수	비고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67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68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69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평가대상 제외(과제없음)
장기국채시장 육성	• 조장기채 발행	70	

[부록 5] 성과지표 체계 (점수부여 기준, 5점 만점)

〈부표 5-1〉 저출산분야

평가항목	척도	
A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A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영 유아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비 지원아동 수 + 교육비 지원아동 수) ÷ 전체 영유아 수] × 100	
	⑤ 50% 이상	④ 46.67% ~ 49.99%
	③ 43.34% ~ 46.68%	② 40% ~ 43.33%
	① 40% 미만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수 ÷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 100	
	⑤ 60% 이상	④ 56.5% 이상 ~ 60.0% 미만
	③ 53.0% 이상 ~ 56.5% 미만	② 49.6% 이상 ~ 53.0% 미만
	① 49.6% 미만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현년도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목표치 - 현년도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⑤ 0원 이하 달성	④ 0원 초과 ~ 15만원 이하 달성
	③ 15만원 초과 ~ 35만원 이하 달성	② 35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달성
	① 50만원 초과 달성	
A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육아지원시설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i 척도값+ ii 척도값)÷2	
	i. 국공립보육시설수 증가율	ii.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
	⑤ 7% 이상	⑤ 전년도 증가율의 80%이상 달성
	④ 5% 이상 ~ 7% 미만	④ 전년도 증가율의 80%~60%미만 달성
	③ 3% 이상 ~ 5% 미만	③ 전년도 증가율의 40%~60%미만 달성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② 1% 이상 ~ 3% 미만	② 전년도 증가율의 20%~40%미만 달성
	① 1% 미만	① 전년도 증가율의 20% 미만 달성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증축률 차이 (현년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증축률’ - 현년도 ‘민간보육시설 정원 증축률’)	
	⑤ 4.2% 미만 달성	④ 4.2%이상 5.5% 미만 달성
	③ 5.5%이상 6.7% 미만 달성	② 6.7%이상 8.0% 미만 달성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증가율 (현년도 이용아동비율 - 전년도 이용아동비율) ÷ 전년도 이용아동비율 × 100	
	⑤ 5%p 이상	④ 3.75%p ~ 5.0%p미만
	③ 2.5%p 이상 ~ 3.75%p 미만	② 1.25%p 이상 ~ 2.50%p 미만
	① 1.25%p 미만 증가	
A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산모도우미 수혜비율(목표치 대비) (산모도우미 파견건수 ÷ 산모도우미사업 목표치) × 100	
	⑤ 사업목표치 달성 100.0% 이상	④ 사업목표치 달성 80% ~ 100.0% 미만
	③ 사업목표치 달성 60% ~ 80% 미만	② 사업목표치 달성 40% ~ 60% 미만
	① 사업목표치 달성 40% 미만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건수	
	⑤ 1.5만건 이상	④ 1.5만건 ~ 12,500건
	③ 12,500건 ~ 10,000건	② 10,000건 ~ 7,500건
	① 7,500건 미만	

평가항목	척도
A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A2-1.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math>(\text{현년도 전년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div \text{전년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 \times 1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전년대비 10% 이상</div> <div>④ 전년대비 7% 이상 ~ 1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전년대비 3% 이상 ~ 7% 미만</div> <div>② 전년대비 0% 이상 ~ 3%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전년대비 0% 미만</div> <div></div> </div>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p style="text-align: center;">육아휴직률  <math>(\text{현년도 '육아휴직자수'} \div \text{현년도 '산전후 휴가자수'}}) \times 1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39.0% 이상 달성</div> <div>④ 38.1% 이상 ~ 39.0%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37.2% 이상 ~ 38.1% 미만 달성</div> <div>② 36.3% 이상 ~ 37.2%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36.3% 미만 달성</div> <div></div> </div>
A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엄마채용 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math>[(\text{현년도 전년도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수'} \div \text{전년도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수'}}) \times 1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전년대비 20% 이상 달성</div> <div>④ 전년대비 13% 이상 ~ 20%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전년대비 7% 이상 ~ 13% 미만 달성</div> <div>② 전년대비 0% 이상 ~ 7%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전년대비 0% 미만 달성</div> <div></div> </div>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p style="text-align: center;">가족친화지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42점 이상</div> <div>④ 40.3점 이상 ~ 42점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38.7점 이상 ~ 40.3점 미만</div> <div>② 37.0점 이상 ~ 38.7점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37.0점 미만</div> <div></div> </div>
A2-3.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의 가족 가치관(결혼의 필요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90% 이상</div> <div>④ 80% 이상 ~ 9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70% 이상 ~ 80% 미만</div> <div>② 60% 이상 ~ 7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60% 미만</div> <div></div> </div>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자녀의 필요성(기혼여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90% 이상</div> <div>④ 80% 이상 ~ 9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70% 이상 ~ 80% 미만</div> <div>② 60% 이상 ~ 7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60% 미만</div> <div></div> </div>
A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A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 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math>(\text{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div \text{만14세이하 전체 아동수}) \times 100,0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7.7명 이하 달성</div> <div>④ 7.7명 초과 ~ 7.77명 이하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7.77명 초과 ~ 7.81명 이하 달성</div> <div>② 7.81명 초과 ~ 7.90명 이하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7.9명 초과 달성</div> <div></div> </div>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감률  <math>(\text{현년도 전년도 상담건수} \div \text{전년도 상담건수}) \times 1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전년도 실적의 40% 이상</div> <div>④ 전년도 실적의 30~4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전년도 실적의 20~30% 미만</div> <div>② 전년도 실적의 10~2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전년도 실적의 10% 미만</div> <div></div> </div>
A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math>(\text{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자 수} \div \text{아동·청소년 수}) \times 100</mat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아동·청소년 대비 10% 이상</div> <div>④ 아동·청소년 대비 7.5% 이상 ~ 1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아동·청소년 대비 5.0% 이상 ~ 7.5% 미만</div> <div>② 아동·청소년 대비 2.5% 이상 ~ 5.0% 미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아동·청소년 대비 2.5% 미만</div> <div></div> </div>
유해환경 차단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실적 (현년도 감시단활동 실적 중 신고고발 건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⑤ 4000건 이상 달성</div> <div>④ 3,900건 이상 ~ 4000건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③ 3,800건 이상 ~ 3,900건 미만 달성</div> <div>② 3,700건 이상 ~ 3,800건 미만 달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3,700건 미만 달성</div> <div></div> </div>

〈부표 5-2〉 고령화분야

평가항목	척도
B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B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⑤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지 3년 이내 ④ 개혁방안 합의안이 마련되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 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20-59세 공적연금가입자수 ÷ 20-59세 근로연령인구) × 100
	⑤ 80% 이상 ④ 70% 이상 ~ 80% 미만 ③ 60% 이상 ~ 70% 미만 ② 50% 이상 ~ 60% 미만 ① 50% 미만
특수지역연금 제도개선	지역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⑤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지 3년 이내 ④ 개혁방안 합의안이 마련되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 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과 지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지역연금간 가입기간연계
	⑤ 가입기간 연계방안이 제도화된 경우 ④ 가입기간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 가입기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TF가 운영 중인 경우 ②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구조가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 ① 가입기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나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법정 비율
B1-2.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	
퇴직연금 제도 조기 정착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퇴직연금 적립액 ÷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액) × 100
	⑤ 120% 이상 ④ 115% 이상 ~ 120% 미만 ③ 110% 이상 ~ 115% 미만 ② 105% 이상 ~ 110% 미만 ① 105% 미만
B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B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노인건강검진율 (65세 이상 1차 수검인원 ÷ 65세 이상 1차 검진대상 인원) × 100
	⑤ 전체노인의 60% 이상 ④ 전체노인의 50% 이상 ~ 60% 미만 ③ 전체노인의 40% 이상 ~ 50% 미만 ② 전체노인의 30% 이상 ~ 40% 미만 ① 전체노인의 30% 미만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노인지매검진율 (60세 이상 노인중 1년간 치매검진자수 ÷ 60세 이상 노인인구) × 100
	⑤ 전체노인의 6% 이상 ④ 전체노인의 5% 이상 ~ 6% 미만 ③ 전체노인의 4% 이상 ~ 5% 미만 ② 전체노인의 3% 이상 ~ 4% 미만 ① 전체노인의 3% 미만
B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⑤ 2.0% 이상 달성 ④ 1.8% 이상 ~ 2.0% 미만 달성 ③ 1.6% 이상 ~ 1.8% 미만 달성 ② 1.4% 이상 ~ 1.6% 미만 달성 ① 1.4% 미만 달성

평가항목	척도	
노인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노인요양시설 구축률 (현 병상수 ÷ 목표 병상수)×100	
	⑤ 목표치 100.0% 이상 달성	④ 목표치 90%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③ 목표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② 목표치 70% 이상 ~ 80% 미만 달성
	① 목표치 70% 미만 달성	
노인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삶의 만족도 (생활전반만족도×0.4 + 건강상태만족도×0.2 + 주관적본인경제상태×0.2 + 자녀관계×0.2)	
	⑤ 4점 이상	④ 3점 이상 ~ 4점 미만
	③ 2점 이상 ~ 3점 미만	② 1점 이상 ~ 2점 미만
	① 1점 미만	
B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B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률 (현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수’ ÷ 현년도·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치’) × 100	
	⑤ 100.0% 이상 달성	④ 95%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③ 90% 이상 ~ 95% 미만 달성	② 85% 이상 ~ 90% 미만 달성
	① 85% 미만 달성	
B3-2. 생산적 여가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 i 척도값+ ii 척도값)÷2	
	i.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현년도 ‘노인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수’÷현년도 ‘노인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수’목표치)×100	ii. 현년도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⑤ 100.0% 이상 달성	⑤ 44.0점 이하 달성
	④ 95% 이상 ~ 100.0% 미만 달성	④ 44.0점 초과 ~ 46.2점 이하 달성
	③ 90% 이상 ~ 95% 미만 달성	③ 46.2점 초과 ~ 48.5점 이하 달성
	② 80% 이상 ~ 90% 미만 달성	② 48.5점 초과 ~ 50.7점 이하 달성
	① 80% 미만 달성	① 50.7점 초과 달성
B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B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고령자가구 주거기준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인의 주택만족도	
	⑤ 74.2% 이상 달성	④ 70.9% 이상 ~ 74.2% 미만 달성
	③ 67.5% 이상 ~ 70.9% 미만 달성	② 64.2% 이상 ~ 67.5% 미만 달성
	① 64.2% 미만 달성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i 척도값+ ii 척도값)÷2	
	i. 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현년도 ‘지하철역 승강시설 수’ ÷ 현년도 ‘지하철역 승강시설 수’목표치)×100	ii. 저상버스 도입률 (현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 현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목표치)×100
	⑤ 100% 이상	⑤ 100% 이상
	④ 80% 이상-100% 미만	④ 80% 이상-100% 미만
	③ 60% 이상-80% 미만	③ 60% 이상-80% 미만
	② 40% 이상-60% 미만	② 40% 이상-60% 미만
	① 40% 미만	① 40% 미만



〈부표 5-3〉 성장동력분야

평가항목	척도	
C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C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 사업장의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가율 (i 척도값+ii 척도값) ÷ 2	
	i.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증가율	ii. AA제도적용사업장의 여성관리자고용률 증가율
	⑤ 100.0% 이상 달성 ④ 70% 이상~100.0% 미만 달성 ③ 30% 이상~70% 미만 달성 ② 0% 이상~3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⑤ 100.0% 이상 달성 ④ 70% 이상~100.0% 미만 달성 ③ 30% 이상~70% 미만 달성 ② 0% 이상~3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⑤ 24.0% 이상 ③ 20.6% 이상 ~ 22.3% 미만 ① 18.9% 미만	④ 22.3% 이상 ~ 24.0% 미만 ② 18.9% 이상 ~ 20.6% 미만
	C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연령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정년제도 채택사업장 45세 이상 퇴직자 평균연령)÷1세}×100	
	⑤ 200% 이상 ③ 100% 이상 ~ 150% 미만 ① 50% 미만	④ 150% 이상 ~ 200% 미만 ② 50% 이상 ~ 100% 미만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전년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100
⑤ 전년대비 +6% 이상 ③ 전년대비 +2% 이상 ~ +4%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④ 전년대비 +4% 이상 ~ +6%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2% 미만
고령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수’)-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수’}÷전년도 ‘고용장려금 실제 이용인원수’}×100
	⑤ 전년대비 +20% 이상 ③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① 전년대비 +5% 미만	④ 전년대비 +15% 이상 ~ +20% 미만 ②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고령근로자 직무수행 환경 개선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전년도 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전년도 50세이상고령근로자 산업재해자수}×100
⑤ 증가율 0% 미만 ③ 증가율 5.0% 이상 ~ 10.0% 미만 ① 증가율 15.0% 이상		④ 증가율 0% 이상 ~ 5.0% 미만 ② 증가율 10.0% 이상 ~ 15.0% 미만
C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활용 및 사회통합기반조성		
외국적동포의 활용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증가율 {(현년도-전년도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건수’)-전년도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건수’}÷전년도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누적 건수’}×100	
	⑤ 전년도 대비 +5% 이상 ③ 전년도 대비 +3% 이상 ~ +4% 미만 ① 전년도 대비 +2% 미만	④ 전년도 대비 +4% 이상 ~ +5% 미만 ② 전년도 대비 +2% 이상 ~ +3% 미만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률 {(현년도-전년도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전년도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전년도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100
⑤ 전년대비 +15% 이상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C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C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율 {(현년도-전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1%p}×100	
	⑤ 100% 이상 달성 ③ 30% 이상 ~ 70% 미만 달성 ① 0% 미만 달성	④ 70% 이상 ~ 100% 미만 달성 ② 0% 이상 ~ 30% 미만 달성

평가항목	척도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p>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p> $\frac{\text{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장려금+유급휴가훈련) 참여자 수}}{\text{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times 100$ <p>⑤ 32.6% 이상 달성                      ④ 31.7% 이상 ~ 32.6% 미만 달성          ③ 30.9% 이상 ~ 31.7% 미만 달성                      ② 30.1% 이상 ~ 30.9% 미만 달성          ① 30.1% 미만 달성</p>
평생학습인프라 직업 훈련인프라 국가기술 자격제도 혁신	<p>평생학습참여율</p> $\frac{\{(\text{형식교육참여자수} + \text{비형식교육참여자수}) + 25 \sim 64 \text{세 인구수}\} \times 100}{\text{인구수}}$ <p>⑤ 28% 이상 달성                      ④ 26% 이상 ~ 28% 미만 달성          ③ 24% 이상 ~ 26% 미만 달성                      ② 22% 이상 ~ 24% 미만 달성          ① 22% 미만 달성</p>
C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p>산업재해율</p> $\frac{(\text{현년도 '산업재해율' 목표치} - \text{현년도 '산업재해율'}) \times 100}{\text{목표치}}$ <p>⑤ 목표치의 100.0% 이상                      ④ 목표치의 95% 이상 ~ 100.0% 미만          ③ 목표치의 90% 이상 ~ 95% 미만                      ② 목표치의 85% 이상 ~ 90% 미만          ① 목표치의 85% 미만</p>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강화	<p>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p> $\frac{\{(\text{현년도-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 \text{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times 100}{\text{전년도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p>⑤ 전년대비 5% 이상                      ④ 전년대비 3.5% 이상 ~ 5% 미만          ③ 전년대비 1.5% 이상 ~ 3.5%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1.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p>
C3. 고령친화산업 육성	
C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p>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감률</p> $\frac{\{(\text{현년도-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 \text{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times 100}{\text{전년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p>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p>
우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지정·표시 제도 도입	<p>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서비스) 지정·표시 건수</p> <p>⑤ 25건 이상 달성                      ④ 20건 이상 ~ 25건 미만 달성          ③ 15건 이상 ~ 20건 미만 달성                      ② 10건 이상 ~ 15건 미만 달성          ① 10건 미만 달성</p>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p>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p> <p>⑤ 5건 재개정                      ④ 4건 재개정          ③ 3건 재개정                      ② 2건 재개정          ① 1건 재개정</p>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p>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p> <p>⑤ 전년대비 +15% 이상                      ④ 전년대비 +10% 이상 ~ +15% 미만          ③ 전년대비 +5% 이상 ~ +10% 미만                      ② 전년대비 0% 이상 ~ +5% 미만          ① 전년대비 0% 미만</p>

[부록 6] 성과지표 산정 결과

〈부표 6-1〉 저출산분야 (2006~201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A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5.0
A1-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4.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율	30.5	40.0	41.0	45.6	48.9	1.0	2.0	2.0	3.0	4.0	4.0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 학교 참여율	41.6	49.8	52.8	59.5	63.3	1.0	2.0	2.0	4.0	5.0	4.0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목표치 대비 차액)			0	0	0	-	-	5.0	5.0	5.0	2.0
	①현년도 세제지원 금액			620	870	870						
	②현년도 목표치			620	870	870						
A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4.0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①점수+②점수)/2						5.0	4.5	3.0	4.5	3.5	3.0
	①국공립보육시설증가율	11.5	6.4	4.5	5.0	6.1	5.0	4.0	3.0	4.0	4.0	
	②작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	47.1	55.6	60.2	66.2	69.4		5.0	3.0	5.0	3.0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차이	7.2	6.1	8.5	10.3	8.3	2.0	3.0	1.0	1.0	1.0	4.0
	①국공립보육시설 정원충족률	89.1	88.1	87.3	88.5							
	②민간보육시설 정원충족률	81.9	82.0	78.8	78.3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종일제휴일형보육시설증가율	14.8	7.0	14.1	4.7	5.8	5.0	5.0	5.0	4.0	5.0	3.0
A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0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수혜율(목표대비)	99.5	108.3	144.6	91.0	112.1	4.0	5.0	5.0	4.0	5.0	5.0
	①현년도 지원건수	10,411	40,087	62,859	53,401	62,491						
	②현년도 목표치	10,464	37,000	43,471	58,698	55,763						
불임부부 지원	불임부부 지원건수	19,137	14,337	13,269	17,238	56,658	5.0	4.0	4.0	5.0	5.0	5.0
A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3.0
A2-1. 모성보호 강화												3.6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19.1	19.2	17.4	2.97	7.3	5.0	5.0	5.0	2.0	4.0	3.3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률	27.9	36.3	42.5	50.2	55.1	1.0	2.0	5.0	5.0	5.0	6.7
A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4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증감률	-	-	420.9	-41.8	65.6	*	*	5.0	1.0	5.0	5.0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지수	37	41	44	49.2	51.6	2.0	4.0	5.0	5.0	5.0	5.0
A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	-	58.4	58.4	72.2			1.0	1.0	3.0	5.0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자녀필요성	-	90.9	91.8	93.1	94.0	*	5.0	5.0	5.0	5.0	5.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A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0
A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5.0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안전사고 사망율	7.1	6.2	6.0	5.4	5.4	5.0	5.0	5.0	5.0	5.0	5.0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	학생대상 전문상담단수 증가율	*	41.9	141.6	-44.1	-12.8	*	5.0	5.0	1.0	1.0	5.0
A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5.0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28.8	67.4	59.9	43.0	44.7	5.0	5.0	5.0	5.0	5.0	5.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	4,011	3,672	830	730	567	5.0	1.0	1.0	1.0	1.0	5.0

## 〈부표 6-2〉 고령사회분야 (2006~201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B1.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3.0
B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7.0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정계산 실시, 공시 완료	법안 심사, 검토	법안 심사 1회	*	5.0	5.0	4.0	4.0	2.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0~59세 공적연금 가입률	66.7	68.0	68.4	69.7	71.4	3.0	3.0	3.0	3.0	4.0	1.8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직역연금 재정안정 확보노력		법개정안 국회 통과	공무원 사회개혁 TF 개편	공무원 사회개혁 TF 개편	공무원 사회개혁 TF 개편	*	5.0	3.7	4.0	5.0	2.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법률 제정	법률 시행	가완료	*	*	5.0	5.0	5.0	2.1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13.4	12.6	57.2	68.9	67.7	5.0	5.0	5.0	5.0	5.0	1.2
B1-2. 사적소득보장체계 확충												3.0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퇴직연금 적립액 증가율			140.0	112.4	107.6			5.0	3.0	2.0	10.0
B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3.0
B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4.0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노인건강검진율	44.81	49.98	51.64	56.37	56.37	3.0	4.0	4.0	4.0	4.0	6.0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노인치매검진율	0.4	1.5	4.1	6.7	10.3	1.0	1.0	1.0	3.0	5.0	4.0
B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2.8	5.1	5.7	*	*	5.0	5.0	5.0	5.0
노인 요양시설인프라 확충	노인요양시설 구축률	*	*	110.6	116.6	136.0	*	*	5.0	5.0	5.0	5.0
	①노인요양시설 구축	*	*	68, 581	88, 266	126, 782						
	②목표치	*	*	62, 027	75, 722	93, 2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B2-3. 노인 권익 증진												3.0
노인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삶의 만족도	43.1	43.1	3.1	3.1	3.1	3.0	3.0	4.0	4.0	4.0	10.0
B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2.0
B3-1.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률	103.8	105.1	107.7	107.1	116.1	5.0	5.0	5.0	5.0	5.0	5.7
B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4.3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율		110.6	119.7	133.0	135.2		5.0	5.0	5.0	5.0	5.0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6,399	7,274	8,484	9,056						
	—목표치		5,786	6,075	6,379	6,697						
	고령층 정보격차지수	41.6	37.4	35.8	34.1	32.5	5.0	5.0	5.0	5.0	5.0	5.0
B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2.0
B4-1.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10.0
고령자가구 주거기준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저소득고 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인의 주택만족도	64.2	64.2	69.7	69.7	69.7	2.0	2.0	3.0	3.0	3.0	5.0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①+②)/2						4.5	5.0	4.5	5.0	4.5	5.0
	①지하철역 승강시설 설치율	100.0	100.0	91.5	134.1	133.0	5.0	5.0	4.0	5.0	5.0	
	—승강시설 설치 수	2,844	2,988	3,029	5,157	5,663						
	—목표치	2,844	2,988	3,312	3,846	4,257						
	②저상버스 도입률	158.4	156.7	111.4	105.7	92.2	4.0	5.0	5.0	5.0	4.0	

〈부표 6-3〉 성장동력분야 (2006~201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C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5.0
C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0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①척도값+②척도값)/2							4.5	5.0	4.0	3.5	5.0
	①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증가율		160	130	40	10		5.0	5.0	3.0	2.0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30.7	32.3	33.6	34.0	34.1						
	②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 관리자 고용률 증가율		80	150	160	100		4.0	5.0	5.0	5.0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관리자고용률	10.2	11	12.5	14.1	15.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여성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23.6	28.4	34.1	40.2	37.0	4.0	5.0	5.0	5.0	5.0	5.0
C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4.0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장년채택사업장(300인 이상)의 청년제도 개선	장년 채택사업장(300인 이상)의 평균 장년연령(1세대비 증가분)	11.0	2.0	19.0	4.0	-17.0	1.0	1.0	1.0	1.0	1.0	3.0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자 수 증감률		157.7	70.4	50.2	24.8	*	5.0	5.0	5.0	5.0	3.0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가중치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령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용 장려금 실제 이용인원 증가율	17.1	2.3	4.7	0.3	-20.8	4.0	1.0	1.0	1.0	1.0	2.0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5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업 재해자 증가율	9.94	7.06	11.36	13.79	6.66	3.0	3.0	2.0	2.0	3.0	2.0
C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2.0
외국적동포의 활용	방문취업사증 누적소지자 수 증가율			30.9	2.3	-6.4	*	*	5.0	2.0	1.0	5.0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유치	전문 외국인력 체류자 수 증감률	17.1	15.5	11.3	8.9	7.3	5.0	5.0	4.0	3.0	3.0	5.0
C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0
C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6.0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률 증가율	130.0	40.0	90.0	-30.0	-2140	5.0	3.0	4.0	1.0	1.0	3.0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34.1	39.5	42.0	41.3	39.9	5.0	5.0	5.0	5.0	5.0	4.0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평생학습참여율		29.8	26.4	28.0	30.5	*	5.0	4.0	5.0	5.0	3.0
C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4.0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산업재해율(목표치 대비)	94.8	95.8	91.5	97.1	100.0	3.0	4.0	3.0	4.0	5.0	6.0
	①목표치	0.73	0.69	0.65	0.68	0.7						
	②산업재해율	0.77	0.72	0.71	0.70	0.6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 증가율	25.1	17.0	9.7	-3.8	8.1	5.0	5.0	5.0	1.0	5.0	4.0
C3. 고령친화산업 육성												2.0
C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기반 강화												3.0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주요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증감률			21.3	33.5	20.1	*	*	5.0	5.0	5.0	5.0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표시제도 도입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서비스) 지정 표시 건수			296	265	179	*	*	5.0	5.0	5.0	5.0
C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건수	4	13	14	9	16	4.0	5.0	5.0	5.0	5.0	4.0
C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역모기지 대출건수 증가율			35.0	61.7	79.4	*	*	5.0	5.0	5.0	3.0